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46

국방개혁 2020

-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목 차 -

제1장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 1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태동 ····· 3

제2절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8

제3절 국방개혁의 청사진 ····· 12

제2장 국방개혁의 초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 19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수립 과정 ····· 21

제2절 국방개혁, 범국가적 과업이 되다 ····· 40

제3절 '법제화'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 ····· 44

제4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 50

제3장 2020년, 우리 군의 미래상 ····· 57

제1절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방 ····· 59

제2절 작지만 강한 군대 ····· 100

제3절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 108

제4장 국방개혁,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 119

제1절 국방개혁을 전담할 『국방개혁실』의 탄생 ····· 121

제2절 관련 법령의 제·개정 ····· 123

제3절 소요예산의 확보, 개혁의 필수조건 ····· 125

제5장 21세기 선진한국의 평화와 번영’ 을 지향하며 ····· 127

부 록 ····· 131

1. 국방개혁 추진일지 ····· 133
2. 역대 정부 국방개혁 사례 ····· 135
3. 외국 국방개혁 사례 ····· 137
4. 국방발전자문위원회 ····· 141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149
6. 『국방개혁 2020』 홍보 실적 ····· 159

제1장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제1절「국방개혁 2020」의 태동

제2절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제3절 국방개혁의 청사진

제1절「국방개혁 2020」의 태동

「국방개혁 2020」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과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방향설정과 개혁 추진의지가 미흡하였으며, 예산의 뒷받침 없이 추진되어 부분적인 개혁에 머물렀다. 참여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군사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 추세와 대미 군사의존에서 탈피하여 우리 힘으로 국방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임기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방개혁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연구와 신중한 정책수립, 그리고 적극적·효과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참여정부는 먼저 국가안보전략기조를 설정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동시·병행적 발전을 추구하고,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정예군사력을 건설하면서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02년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방 육군부대 방문시 군구조를 숫자 위주에서 무기체계 위주의 과학화·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군인 복지 향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12일 30일 계룡대 3군본부를 방문시에는 군장성들에게 만일 미국이 북한을 무력공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군시 한국군이 전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질문하였다. 평소부터 대통령의 국방개혁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성찰을 통해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1. 안보정책 구상

참여정부는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위협에 더하여 북한의 핵문제 및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상호관계 유동성, 세계화·정보화의 심화 등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의 풍부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극복함으로써 다가오는 도전들을 평화와 번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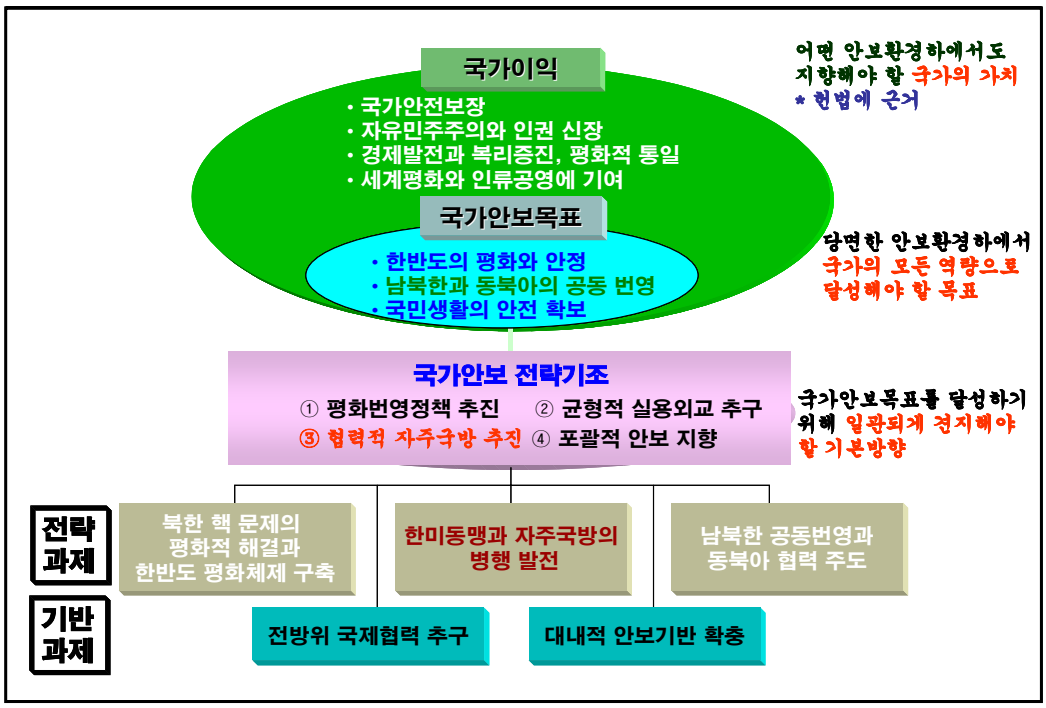
이에 참여정부는 대내외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세 가지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조로 ① 평화번영정책 추진, ②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③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④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지침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면서,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다.

안보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이익, 국가안보 목표, 국가안보 전략기조를 바탕으로 '전략적 과제'와 '기반과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략과제'는 당면한 핵심 안보현안이자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관건이 되는 과제로서 참여정부 기간 중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과제이다. '기반과제'는 전략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과제로서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상시적 과제이다.

【도표1-1】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2.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협력적 자주국방은 적극 구현해야 할 안보전략 기조로서, 이 기조안에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1차적인 추진목표는 “참여정부 임기내에 「협력적 자주국방」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①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전략환경의 변화에 부합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②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조기 확충하여 한반도 방위의 한국 주도를 추구하며, ③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으로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추진중점을 두고 있다.

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왔다. 한편, 미국은 9·11테러 이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의 방위역량이 향상됨에 따른 역할 분담의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한미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자체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가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긴밀한 한·미 협력으로 안보태세가 공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색될 것이다.

나. 자주적 정예 군사력의 건설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발전과 병행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주국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구비하여 한국이 처한 지전략적 환경 속에서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지 구현의 일환으로서,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위에 한미동맹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여 안보목표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의 기본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잠재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필수 소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존전력을 지속

적으로 보완하고, 독자적인 감시·정찰 수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국가의 방위역량은 군사력과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적정 국방비로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운영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의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을 개괄하면, 먼저 노태우 정부('87.2~'93.1)에서는 818계획을 수립하여 종전의 3군 병립 자문형 합동참모의장제를 3군 병립 합동군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3군 균형편성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후속개혁에 실패하였고, 국방개혁에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93.2~'98.2)에서는 '21세기 국방개혁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부형 통합군제를 목표로 국방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각군의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병무행정 분야와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제도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98.2~'03.2)에서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을 기준으로 군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지작사 창설 등 군 부대수를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안보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 확산과 IMF 등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역대정권의 국방개혁 추진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 결과 아직도 일부 부문에서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 조직 및 운영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체계,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 등 제반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조직의 전문화와 문민화를 추진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위기관리·작전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기구로서의 편성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병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미래전에 적합한 정예 과학기술군 구조를 지향하며 통합적 군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군의 정예화와 연계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사회여건과 국가적 소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개선 중이다.

또한 예비전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정신전력 강화와 사기·복지향상을 통해 병사와 중견 이하 간부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

제2절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우리 군의 현 좌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누적되어 온 국방체질을 일대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세계적인 국방개혁·군사혁신 추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강도 높은 군사변혁 또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추세이다. 선진 군사강국들은 고도의 군사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무기체계들을 첨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무기들에 의한 전투능력의 강화로 병력 및 부대수를 감축하고 통합하는 한편, 정보화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변혁'의 기치 아래 군사전략을 위협 중심에서 능력에 기초한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신속대응력과 원정작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량화·기동화·첨단화 방향으로 조정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구조를 합동성과 기동타격능력 증대를 위한 합동/원정군 개념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육군의 전투여단 중심의 재편, 해군의 독립타격 그룹 중심의 재편, 공군의 신속대응능력 향상 등 합동전투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병력을 감축하여 현재 약 147만여 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면서 군사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차세대 전투기 X-45】

중국은 "첨단기술 조건하에서의 제한 국지전 승리전략" 개념아래 과학기술군을 지향하여 지속적인 감군을 통해 병력규모를 축소하되 첨단무기도입을 통한 전투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전력은 대규모의 병력감축을 통한 정예화된 기동군 건설을 추구하고, 해상전력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핵잠수함 등 무기체계의 대형화와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중전력은 원거리투사능력 구비를 목표로 신예전투기를 배치하고 우주력의 독자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병력규모는 1980년대 중반 430만명에서 2006년 현재 22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 바 있다.

러시아는 경제 호전을 바탕으로 국방비 증액·훈련 강화, 무기 첨단화 등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5개 군을 3개 군체제로 전환하고, 2015년을 목표로 첨단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병력규모를 대폭 감축하여 2006년도 기준으로 약 103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의 즉응성과 유연성을 제고토록 각군 전력의 합동성과 통합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12월「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태세」검토보고와 2004년 12월「신방위계획대강」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통합막료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본부 운용 강화,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지상전력은 병력감축을 통해 경량화·기동화·첨단화를 달성하여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개선하고, 해상전력은 원거리 투사능력에 중점을 두고 첨단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며, 공중전력은 원거리 감시·작전 및 투사능력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 자위대의 병력규모는 2006년 현재 24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프랑스는 '2015 신 군사전략' 하에 전력투사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병력과 부대수를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법제화를 통하여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전투부대 우선정책'의 기조하에 신국방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전투부대의 군사력을 재편하고 병력을 감축하였으며, 독일은 '신 국방정비기획'과 '연방군개혁안'을 마련하여 전통적인 3군 체제에서 신속 대응군・안정화군・지원군체제로 개선하고 병력도 통일 이후 1994년도에 34만 명에서 현재까지 28.5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국방의 여건과 현 좌표 진단

가.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 전력구조 필요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았듯이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거리, 정밀성 및 파괴력이 증대된 무기체계가 출현하고 실시간 정보·지휘통제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공간이 확대되고 장거리 정밀타격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등 새로운 전쟁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대량파괴·살상 작전에서 효과중심

작전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도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전력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나. 국방재원의 제한과 국방전반의 비효율성 잔존

국방재원의 확보가 갈수록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국방운영체제의 유연성, 투자 대 효과를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관리 등이 필요하고 국방재원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요구되었다. 또한 운영유지비의 증가 추세 속에 전력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국민편익 증진 및 장병복지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전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방관리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다.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 유지

우리 군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지상군 위주의 대군(大軍)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군 구조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고, 작전운용의 효율성과 육·해·공군 간 합동성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의 정예화·경량화 및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라. 균형발전 미흡

한미연합사 주도하에 작전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한국적 전략 및 군사교리의 발전이 지연되고,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감시 전력 및 장거리 정밀타격 전력 등의 확보와 합참 중심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보강이 요구되었다. 특히 전력건설 과정에서 한국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한 미군 전력의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한국군의 능력 신장에 따른 역할 확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력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 전근대적 병영문화의 잔존, 대군 신뢰 저하

우리 군에는 창군 이래 6.25 전쟁과 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내면화된 군 중심의 사고, 권위주의적 리더십, 경직된 조직문화 등 전근대적인 병영문화가 잔존하고 있어서 각종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심리마저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

에 부합한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량화·기동화·첨단화된 전력을 건설하면서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개혁은 국방현실을 진단해 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절실한 과업임이 분명하다.

제3절 국방개혁의 청사진

1. 목표연도의 국방환경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개혁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연도의 국방환경은 어떻게 전망되고, 장차 우리 군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며,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었다.

가. 안보환경 전망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였고, 과거 잠재되었던 갈등 요인들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사안별로는 견제를 하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9·11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문제로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범세계 차원에서 대 테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대 테러와 비확산이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현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토·자원 분쟁, 종교·민족 갈등, 분리 독립운동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지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지역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간의 무력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족과 자원 및 종교에 기인하는 분쟁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이 증진되는 추세 속에 동북아 지역도 역내 국가간 경제적 협력관계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군사 정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및 중·일의 대립 가능성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도서 및 영토분쟁 가능성 등 역사적 적대감과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지역

갈등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안보불안 양상이 심화될 것이다.

즉,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적 안보 구도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 갈등·대립 구도와 협력 구도가 공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은 역동적인 안보 역학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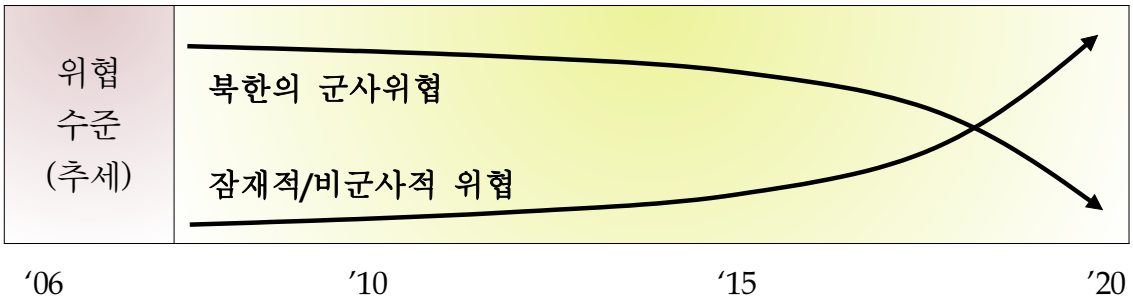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역내 영향력 확대 경쟁과 군사력 증강 노력을 살펴보면, 미국은 절대적 군사력 우위 유지로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군사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2~3위의 국력을 기반으로 첨단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면서 미·일 안보체제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달성하고 전력증강을 지속하는 등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는 정치 및 경제안정을 통하여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축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여 기술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한국이 평화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기술혁신과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인 부흥을 계속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부분적인 경제정책 변화 및 점진적 개혁·개방의 시도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체제 안전보장과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 이중적 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이나, 내부 불안정성에 기인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효율적인 국방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1-2】 위협수준의 종합적 평가



나. 국가 위상과 국방의 역할

1) 국가 위상

2020년의 한국은 GDP 규모나 교역 규모에 있어 세계 10위 안에 속하는 세계속의 중견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경제규모는 2015년을 전후해서 세계 10위권내로 진입 후 2020년에는 세계 8~9위권으로 진입하여 현재의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의 경제적 위상과 이에 부합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일류 선진국가의 면모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도표1-3】 2020년의 우리나라의 지표

연 도	2003년	2010년	2020년
총 GDP	6,061억 달러 (북한의 약 33배)	1조 달러	1.4~1.8조 달러
1인당 GNI	12,646 달러	2만 달러 (싱가폴, 호주 수준)	2.4~3.2만 달러 (독일, 프랑스 수준)
인 구	4,793만명	5,000만명	5,200만명
세계위상	세계 12위	세계 10~12위권	세계 8~9위권

* 2010년은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2020년은 KDI(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03.3)의 적용 추계

또한, 인권 및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지식기반 사회의 구현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06년 현재 국가종합경쟁력 면에서 세계 7위, 정보화 지수 5위, 세계 8대 기술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북아시대의 부상과

함께 더욱 이러한 역량이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물류와 산업,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주도할 것이며, 지역 국가간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도록 선도하는 지역내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장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군사적·경제적·외교적·문화적·과학기술적 역량과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균형추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중심적 이익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중견국가의 소임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2) 국방의 역할

선진한국을 구현함에 있어 국방의 역할은 선진한국 건설을 국방차원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선진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된 선진국방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에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국방의 역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 확대된 영역에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즉, 국제적 공조노력의 일환으로 테러 차단 및 에너지 수송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적 재난시 긴급구조 및 재난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 전쟁억제력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며,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으로 자주국방의 능력과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안정 및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및 평화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재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제적 대규모 재난시 국제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방비전과 국방개혁 목표 설정

국방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장기 국방비전은 미래안보환경과 군의 임무를 기초로 설정되었으며, 그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의 구현이다. 이는 미래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완성하여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한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 건설'로 설정하고 세부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가. 정보·지식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이 되어 선진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즉,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적보다 '더 멀리 보고 빠르게 기동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첨단 감시장비와 기동 및 타격수단을 확보하여 독자적 전쟁억제력을 완비하고 3군이 균형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나.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 육성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자원 절약형 국방을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상비병력 및 예비군을 감축하여 생산활동으로 전환하고, 국방관리의 혁신으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국방조달 및 획득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 선진 민주시민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을 육성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군대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문민중심의 국방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며, 국민의 편익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된 2020년 우리 군의 모습을 개념화하면【도표1-4】와 같다.

【도표1-4】 2020년 우리군의 모습

3. 국방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중점과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국방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와 전력체계 구축

이는 우리 군의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병력위주의 양적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병력규모를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정예화하며, 합동성과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와 지휘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나.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민 중심의 국방운영체

제를 확립하고, 군은 국가전략과 정부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전반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의 동력을 창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다.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자원절약형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방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일관성·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방운영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 정보과학군에 부합한 운영유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선진 민주시민사회의 다양한 국방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증진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혁신을 도모하여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4. 국방개혁 추진 전략

국방개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국방력은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개혁 추진 기간동안 안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병력감축과 부대 수의 축소로 인한 국방력의 약화가 발생치 않도록 첨단전력의 확보와 병행하여 군 구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와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서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유연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혁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여 개혁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
국방개혁의 초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수립 과정

제2절 국방개혁, 범국가적 과업이 되다

제3절 ‘법제화’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

제4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수립 과정

1. 「국방개혁 2020」 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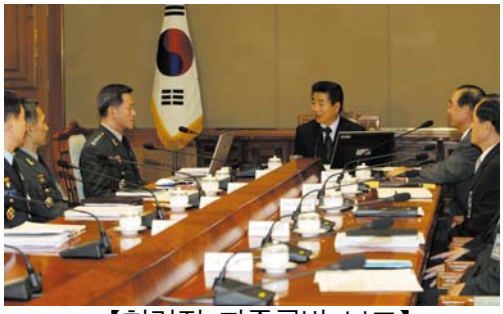
가.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안보분야의 중요한 추진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5년간 추진했던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과제별 목표달성이 미흡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발전방안을 정립하여 4개의 국방현안 과제와 13개의 국방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자주적인 국방태세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한미 군사동맹 관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2003년 5월 중장기 차원의 자주국방력 확보 목표와 요구능력을 설정한 「자주국방 비전」을 수립하였고, 나아가 2003년 7월에는 자주국방 비전을 한미동맹과 연계하여 구체화한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2004년 3월 1일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안보정책 구상에는 참여정부의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추진과제의 설정과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 중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제시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이라는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2004년 11월 19일, 국방부는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전략지침은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전략환경의 변화에 부합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자주적 대북억제능력을 조기 확충하며,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으로 군을 정예화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 내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협력적 자주국방 보고】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군 구조 개편/국방개혁 등 3개 분야에 대해 2010년을 목표로 총 54개 세부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추진일정을 담고 있다.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은 현재의 합참체제를 강화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시키며, 기능별 균형발전으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획득체계의 제도적 개선책 강구를 추진 중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합참 중심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계 구축, 효율화·정예화를 위한 부대 정비와 병력정원 조정, 군 인사의 형평성 제고, 획득제도 개혁 및 획득관리체계 개선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나. 「국방개혁 2020」 수립

2004년 12월 14일,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순방을 마치고 가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 관련사항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국방개혁의 법제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4월 19일 국방개혁법 1차 시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2005년 4월 28일, 국방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국방업무보고 자리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2005년 11월 중 국방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미래지향적 질적 구조(정보화, 과학화, 경량화)로 전환하는 것이며, 군이 스스로 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장기적 국방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찰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하에 법제화함으로써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예산은 적극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의 수립과 법제화 추진을 독려하였다. 바로 「국방개혁 2020」 구상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2005년 5월 12일 국방개혁법 1차 시안 수정안 및 추진체계의 장관보고와 5월 20일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와 국방부의 합동 워크숍에서 국방부 시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결과, 장기 국방비전 및 목표 하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주관부서를 ‘정책홍보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업무가 5월 21일 기획관리실에서 정책홍보실로 이관되었고, 5월

26일「국방개혁 추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개혁추진을 위한 준비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6월 1일 '국방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위원회 예하에 정책홍보실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와 합참TF를 각각 구성하는 '국방개혁실무위원회'가 발족되어 국방개혁에 관한 구상과 국방개혁안 작성이 3개월 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1일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국방개혁 2020(안)」을 보고하였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공개범위가 최종 결정되어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국방개혁 2020」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2. 국방개혁안 작성을 위한 준비

가.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방개혁위원회는 2005년 5월 12일 "국방개혁법 1차 시안 수정안 및 추진체계" 보고시 국방개혁안의 발전 없이 국방개혁법안을 작성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 국방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5년 6월 1일부로 발족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안의 작성을 위하여 예하에 국방개혁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 기본 방침

국방개혁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방개혁(안)은 실무 TF에서 기존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가운데 발전시킨다. 즉, 군 구조 및 전력체계는 합참 TF에서, 국방운영 관련사항은 국방부 TF에서 각각 발전시킨다.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의 국·실 및 참모부는 분야별 개혁안을 적극 발굴하여 TF에 반영한다. 둘째, 국방발전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NSC), 정부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셋째, 국방개혁(안) 작성과 병행하여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2) 편성 및 기능

국방개혁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 획득실장, 정책홍보실장을 위원으로 편성하고, 국방개혁 지침 하달 및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

정 기능을 수행하며, 예하에 국방개혁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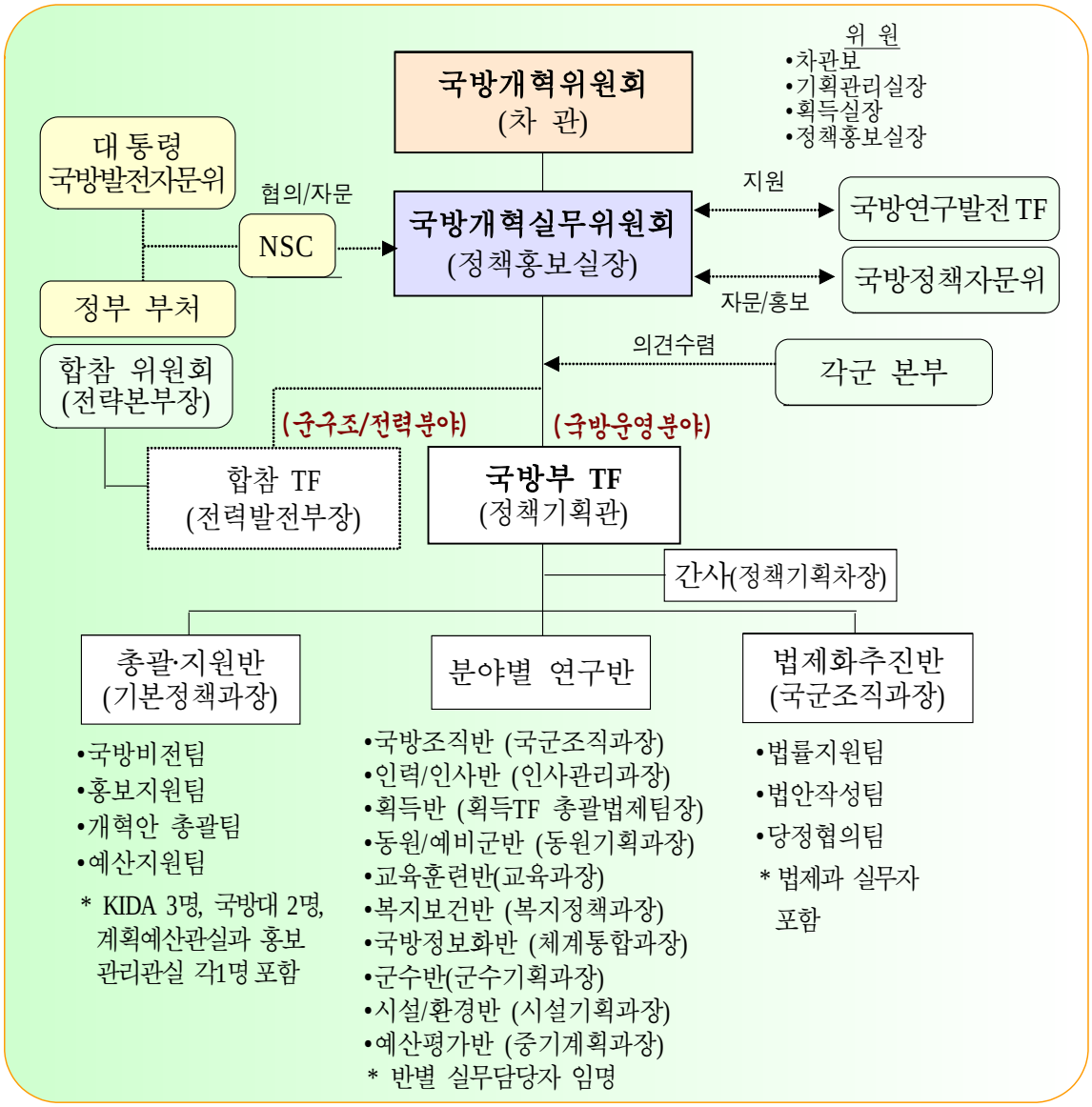
국방개혁실무위원회는 정책홍보실장(현 본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국방개혁안 작성과 관련 국방부내 국장 및 과장급으로 위원을 편성하여 의사결정 및 협의체를 운용토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 국방발전자문위와 정부 부처 및 NSC와 긴밀히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유지토록 하고,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하에 국방부 TF와 합참 TF를 두고 국방운영 분야와 군 구조 및 전력분야의 개혁안을 작성토록 하였다.

국방부 TF는【도표2-1】과 같이 총괄·지원반, 분야별 연구반, 법제화 추진반으로 편성하였다. 그 중 총괄·지원반은 상근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예하에 개혁안총괄팀, 국방비전팀, 홍보지원팀, 예산/행정팀으로 구성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임무를 수행하였고 8월 31일부터 국회 법안 상정시까지 비상근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조직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KIDA, 국방대, 홍보관리관실, 계획예산관실에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였다. 분야별 연구반과 법제화 추진반은 비상근으로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였다.

3) 국방개혁위원회 및 TF의 임무

국방개혁위원회의 임무는 ① 국방개혁의 대강(大綱)을 설정하고, ②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목적·목표·대상기간·범위·추진원칙 등을 검토하며, ③ 국방기본정책서를 토대로 국방비전과 개혁 목표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④ 안보환경 전망 및 미래 우리 군의 위상과 역할을 전망하고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종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군·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내·외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위원회 및 TF의 기능과 업무는 【도표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표 2-1】 국방개혁위원회 및 TF 구성 및 임무



【도표 2-2】 위원회별 기능/업무

구 분		기 능
국방개혁위원회		○ 국방개혁 지침 하달 및 의사 결정
국방개혁 실무위원회		○ 국방부내 의사결정/협의체 운용(국장, 과장급) ○ 국방발전자문위, 관련 부처와 협조채널 구축·유지 ○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국방부 T/F 국방부 T/F	총괄 지원반	○ 미래 국방비전/국방청사진 발전(군 임무/역할 포함) ○ 개혁안 작성 총괄, 대외 협조채널 유지 및 행정지원 ○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등 대외 홍보 지원
	분야별 연구반	○ 국방운영 분야별 개혁안 연구 및 작성 •국방조직반 : 국방부본부 현역편제, 3군 균형발전 등 •인력/인사반 : 진급제도개선, 인력구조, 전문인력 육성 등 •획득반 : 방위사업청, 연구개발/방위산업 강화 등 •동원/예비군반 : 동원제도, 예비군제도 등 •교육훈련반 : 교육훈련제도, 학교교육제도 등 •복지보건반 : 전역자 지원, 장병기본권, 시설·급여 등 •국방정보화반 : 정보화 환경, 국방통합정보체계 등 •군수반 : 군수관리 선진화, 3군 군수통합 등 •시설/환경반 : 시설자원관리 효율화, 군 환경관리 선진화 등 •예산평가반 : 적정 국방예산, 개혁 소요/가용예산 판단 ○ 각 분야별 개혁안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법제화 추진반	○ 국방개혁법 법제화 방안 연구 및 법안 작성 ○ 당정협의 등 입법절차 및 행정
합참 TF		○ 군구조/전력구조 발전계획 및 개혁안 작성 ○ 군구조/전력 분야 개혁안에 대한 군 내외 공감대 형성
국방연구 발전 TF		○ 3군 균형발전, 진급제도, 사법제도 개혁안 발전·검토 ○ 실무위원회 계획에 따라 개혁안 검토 및 작성 지원
관련 기관 (KIDA,국방대)		○ 실무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개혁안 검토 ○ 실무위원회 위원의 인선·파견 및 연구지원

나. 국방개혁실무위원회 및 TF의 업무추진 일정

개혁실무위원회는 업무 추진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주요일정을 계획하고 세부수행업무를 총괄지원반, 분야별지원반, 법제화 추진반으로 나누어 임무를 분장하였다. 일정별 세부수행업무는 【도표2-3】과 같다.

【도표2-3】 일정별 세부수행업무

일자	주요일정	세 부 수 행 업 무		
		총괄·지원반	분야별 연구반	법제화추진반
6월 1주	•위원회 구성 / 신고 •전체 회의	•개혁안 장·절 구성 •개혁안 작성방향 검토	•분야별 개혁방안 연구	
2주	•개혁안 대강 설정 •장·절 편성 검토	•개혁안 대강(大綱) 설정 (당위성/목표/범위) •「미래 국방비전」 검토	•자료 수집 •분야별 개혁과제 연구	•추진계획 보고
3주	•1차 실무토의	•「미래 국방비전」 정리 •실무토의 주관 •분야별 개혁과제 검토	•분야별 개혁안 각국·실 검토 * 필요시 연구과제 부여	•법제화 방안 연구/보고
4주	•「국방비전」 검토보고 •국방관리분야 초안종합	•국방관리분야 종합 •장관개념보고 준비	•분야별 개혁방안 제출	•법안 목차발전
5주	•개혁안 개념보고(장관) •군구조/전력분야 제출 (합참)	•군 구조/전력분야 검토 •국방관리 분야 수정	•분야별 개혁방안 보완 •참고자료 작성	
7월 1주	•개혁안 초안 종합 •2차 실무토의	•개혁안 초안 종합 •실무토의 주관 •중장기 국방정책 검토	•분야별 홍보논리 발전	•관련법 제정 소요 판단
2주	•1차 국장급 토의	•국장급 토의 주관 •중장기 국방정책 보완 •분야별 홍보논리 종합		•프랑스 국방부 인사 방문
3주	•홍보논리/계획 보고 •2차 국장급 토의	•홍보논리/계획 보고 •개혁안 초안 종합 •국장급토의 주관	•홍보자료 작성 지원 •분야별 수정·보완	•법안 초안 작성
4주	•개혁안 장관보고(최초) •NSC 초안 검토의뢰 •국방발전자문위 자문의뢰	•국방개혁안 준비 •국방기본정책서 보완 •순회 설명회 자료 작성		•법안 초안 작성
8월 1주	•자문결과 반영 보완 •국방발전자문위 자문	•국방기본정책서 보완 •자문결과 검토/반영	•홍보자료 작성 지원 •분야별 수정·보완	
2주	•본부장급 토의 •개혁안 장관보고(2차) •개혁법안 장관보고(최초)	•본부장급 토의 주관 •수정안 장관보고 •국민홍보자료 작성		•법안초안 보고
3주	•공청회/세미나 •개혁법안 장관보고(2차) •국민 홍보자료 발간	•공청회/세미나 결과보고 •국민 홍보자료 발간/배포	•분야별 홍보 •분야별 수정 보완	
4주				•법안수정 보고
9월 ~	•국방기본정책서 발간 •국방부 개혁안 확정 •정부 개혁안 확정 •국회 상정	•국방부 국방개혁안 확정 •정책회의/군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 •대국민 홍보		•당정협의 •국회 상정

3. 국방개혁안 발전과정

가. 실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방개혁실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2005년 6월 3일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정책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토의내용은 ① 법제화 추진배경과 경과, ② 국방개혁 추진 기조(안),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국방개혁(안) 작성방향 등이었다.

이 회의에서 국방개혁의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 건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국방관리체제 구축', ② 방위충분성 전력 구비, 기술집약형 군 구조 완성으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 등 3가지 하위목표를 정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안의 발전과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① 국방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 국방개혁안을 작성하며, ③ 국방개혁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④ 법제화함으로써 군내외의 확고한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인 국방개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당시 제시된 추진전략은 【도표2-4】에서 보는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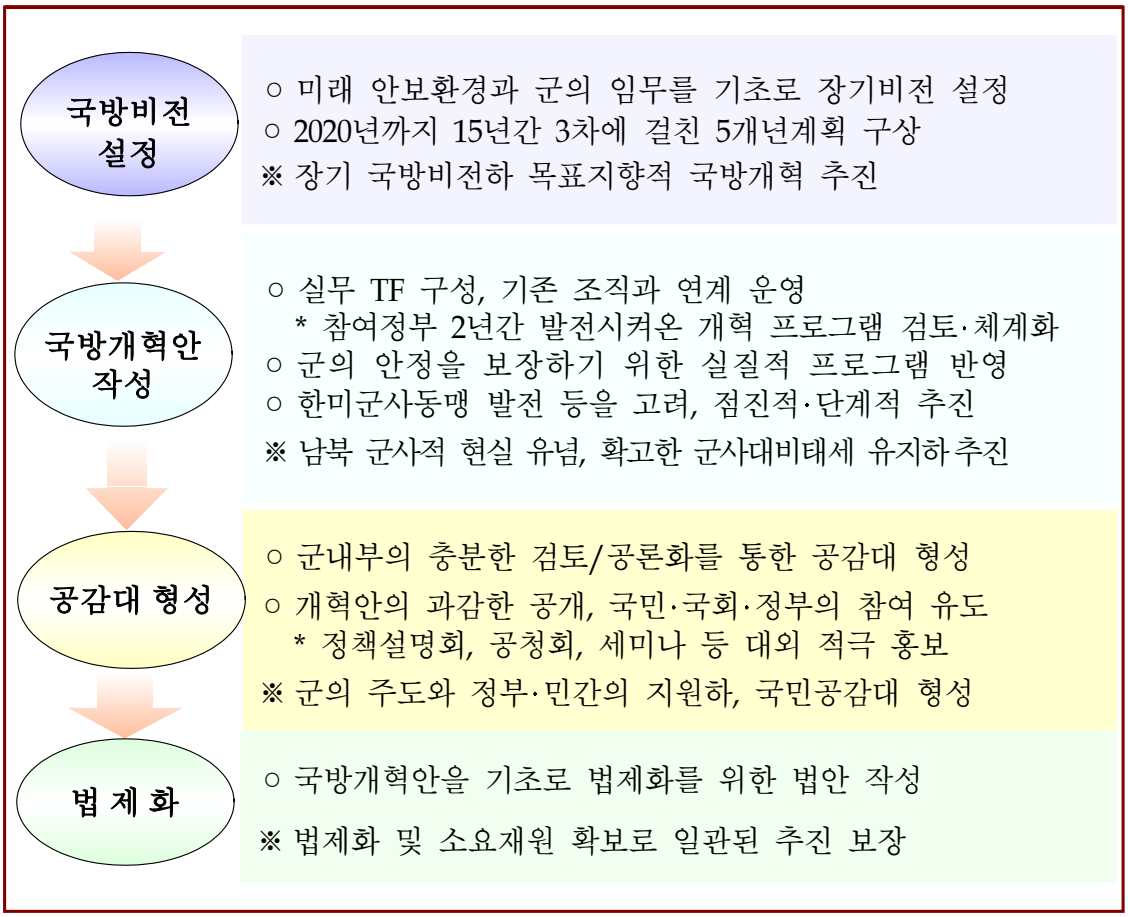
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① 국방개혁의 추진배경을 제시하고, ② 국방개혁의 추진 기조를 설정하였으며, ③ 국방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의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전개하였고, ④ 국방개혁의 법제화 추진방안과 홍보계획을 포함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립하였다. 첫째, 국방개혁 환경, 하부구조 개편 부분은 IT시대의 첨단과학 기술력을 고려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이 다단계의 복잡한 지휘제대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개혁기간과 관련하여 2020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 명확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방위사업청 신설과 군사법제도 개선은 별도의 법으로 추진되지만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예비전력 정예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군 구조개편 및 병력감축을 예비전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정예화하고 적시 동원이 가능한 체제와 물자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임명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 국방전문인력 확충은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각 군 본부 현역과 군무원의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군비율을 5%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도표 2-4】 국방개혁 추진전략



다. 실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세부개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방개혁실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2005년 6월 28일 10시에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신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①국방개혁기본계획(안), ②장관 추가지침 설명 및 의견수렴, ③국방운영분야 개혁과제 목록 조정 및 추가과제 식별, ④각 반별 제시 과제 검토 및 보완 작성방향, ⑤법제화 방안 추진방향, ⑥향후추진계획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분야별 개혁과제 검토는 먼저 개혁과제의 선정 중점을 설정하고 각 연구반별로

분야별 세부개혁과제를 검토하였다. 개혁과제를 선정하는데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던 내용은 첫째, 각 국실에서 제기된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하되 통상적인 업무 성격이 강한 과제는 제외하였다. 둘째, 이외에도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 및 효율성 제고와 슬림화 등의 성향이 강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제기된 개혁과제는 실무자 토의를 통해 재조정하고 분야별 예산소요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회의간 강조되었던 내용은 첫째,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하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총괄지원반과 협조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둘째, 분야별·과제별 토의를 활성화 하되 총괄지원반은 분야별 토의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각 반은 필요시 수시로 토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국방개혁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주간업무를 종합・보고・전파하기로 하였다. 넷째, 차후 토의는 정책홍보실장이 주관하는 국장회의를 7월 8일에 개최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안)과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개혁 법제화 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라. 실무위원회 국장급회의

국방개혁실무위원회 국장급회의가 2005년 7월 8일 정책홍보실장 주관으로 신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목적은 진행사항 중간점검과 개혁방향을 최종 설정하는데 있었다. 참석인원은 국방부 관련국장(11명), 합참 전력발전부장, 연구위원(5명) 등 17명이었다. 회의안건은 ① 국방개혁추진방향 및 군구조 개혁안 검토, ② 국방운영분야 개혁과제 검토 및 쟁점사항 토의, ③ 향후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등이었다. 회의진행은 정책기획관이 국방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합참 전력발전부장이 군 구조 개혁안을 설명한 후 분야별 개혁안에 대하여 관련 국장들이 소관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분야별 주요 검토과제는 ① 각종 지원부대 통합・민영화 추진, ② 주요직위자 인사청문회제도, ③ 여군인력 활용 확대의 세 가지 의제였다.

첫째, 각종 지원부대 통합・민영화 추진은 우선 각 군 군수・교육・경리・복지부대를 대상으로 하며, 개혁 과제화 필요성은 상비병력 축소에 따라 비전투 지원 병력을 최소화하고 전투병력 위주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각 군의 유사・중복 기능과 부대를 과감히 통합하고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의 적극 발굴을 통해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시장 원리 적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

시되었다. 따라서 개혁안 작성은 비전투지원분야 아웃소싱 확대 분야는 국군조직과에서, 기타 기능부대에 대한 통합과 아웃소싱 필요성은 기획조정관실 중심으로 인사국・군수관리관실・복지보건관실 등 각 국실의 협조 하에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주요직위자 인사청문회제도는 6월 24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고시 문민기반 확대 차원에서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방부 주요직위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 해당직위의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적 검증을 거침으로써 국민적 공감하에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여군인력 활용 확대제도는 "여군비율을 5%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검토의 필요성은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혁안의 작성은 인사국에서 여군인력 활용 확대를 과제화 하여 여군인력 소요를 전향적으로 재판단하기로 하였다.

마. 국방개혁안 수립

실무위원회는 6월 24일 장관 보고시 부여받은 추가지침에 대한 검토내용과 국방발전자문위의 개인 연구안 검토 등을 종합하여 국방개혁안을 보완, 2005년 8월 8일 「국방개혁 2020(안)」을 수립하였다. 개혁안은 첫째, 목표연도와 관련하여 "국방개혁 2020 혹은 2015 등"을 검토하였고, 둘째, 기본문 구성은 ① 목적, ② 한반도 안보환경 예측, ③ 개혁의 필요성, ④ 분야별 개요 기술, ⑤ 결론 순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반도 안보환경 예측 및 평가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가 평가・분석・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명확하게 기술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① 남・북관계는 평화 지향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②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는 비군사 분야보다 늦게 발전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관계가 비군사 분야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③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정점시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우리의 군사력 건설을 조정하도록 하고, ④ 국방개혁은 환경변화와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예 : 3년 주기) 환경평가를 통해서 국방개혁 진도와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바. 군 수뇌부 정책간담회 개최

2005년 8월 29일 국방개혁안의 최종점검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합참 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관으로 열렸다. 회의는 먼저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군구조 개혁안의 국방부(안)을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대통령 보고 자료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토론의제는 ① 국방부 장·차관 임명 경과기간, ② 군 주요직위자 인사청문회, ③ 각 군의 간부비율 등이었다.

사.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자문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2005년 4월 6일 발족 이래 8월 18일 제10차 자문위까지 워크샵과 자체회의를 통하여 국방개혁 관련 자문위원들의 연구결과를 토의하여 국방개혁안 작성에 참고토록 제공하였고,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위원별 개인 연구안에 대한 발표 및 토의는 제5차 자문위원회(6월 2일)부터 9차 자문위원회(7월 19일)까지 청와대 서별관에서 계속되었다. 회의진행은 위원별로 연구안을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토의결과를 국방발전자문위원 의견으로 국방부에 통보해왔고, 국방개혁실무위원회에서는 국방발전자문위 개인연구안의 국방개혁안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였다.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반영되었다.

4. 국방개혁안 대통령 보고

2005년 9월 1일「국방개혁 2020」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보고를 위한 참석자는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정책홍보실장, 합참 전략본부장이었으며, 통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NSC사무차장, 국방발전자문위원장이 배석하였다. “21세기 선진국방을 위한「국방개혁 2006~2020」”이라는 제목 하에 ① 국방장관이 모두 발표를 한 후, ② 국방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책홍보실장이 보고하고, ③ 합참의장이 군 구조 개편방향을 보고하였으며, ④ 정책홍보실장이 국방 운영혁신 분야에 대하여 보고한 후 토의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의 간 국방발전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국방부와 합참 주도로 작성한 개혁안을 자문위원회에서 함께 토의하여 왔으며,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개혁의 목표·방법·시기가 지침대로 잘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개혁 추진과정의 후반기에는 국방비가 점차 줄어 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은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국방의 모습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NSC 사무차장은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육군의 사단이 대폭 감축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이 대단한 각오를 하고 만든 개혁안이므로 국방부가 군 내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안이 전체적으로 매우 잘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군이 어려운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적 과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보고된 내용은 큰 변경 없이 결정될 것이며 최종결정까지 개혁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홍보 및 내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국방개혁은 단순하게 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질적으로 정예화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전력강화 내용을 보다 부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주변국과의 전력비교 등도 당당히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후방경계임무의 이관 문제는 안보 관련부서 간 큰 틀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병역제도는 성장과 일자리라는 측면과 전투력의 질적 강화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안보상황이 현저히 변화할 경우 국방개혁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한다는 관련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5. 소요재원 판단

국방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예산의 적기 확보가 중요하다. 「국방개혁 2020」을 기획하면서 국방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혁소요 67조원을 포함한 총 국방비 규모는 동일기간 총 정부재정규모 3,700조원의 16.8% 수준인 621조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소요재원규모에 관한 적정성 여부 문제로 언론·정당·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필요성, 확보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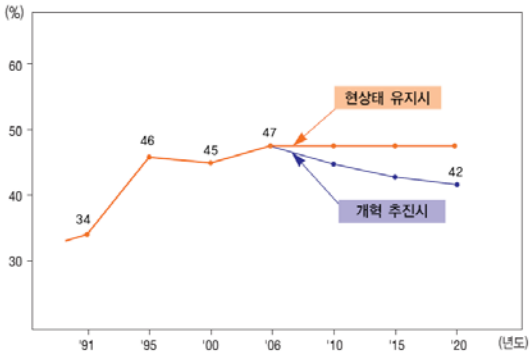
가. 국방개혁 소요재원 규모

1) 개혁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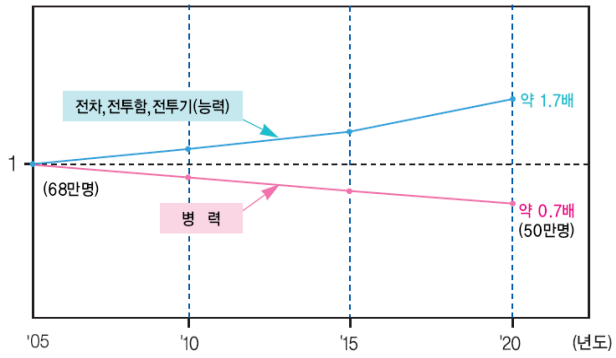
국방개혁을 추진할 2006년~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소요는 국방부, 기획예산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합동으로 검토한 결과 순수 개혁소요를 67조원으로 판단되었으며 첨단무기체계 확보·부대개편 및 창설·병영시설 개선비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순수한 전력투자비는 64조원으로 군 구조 개편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작전요구 성능을 근거로 한 전력증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인력과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소요와 군 의무발전, 병영시설 개선 등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경상운영비 소요는 약 3조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체 경상운영비 중에서 병력유지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는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원수준이 필요하나, 인력운영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폭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5】 인력운영비 비율 추이



【도표 2-6】 병력규모 및 전력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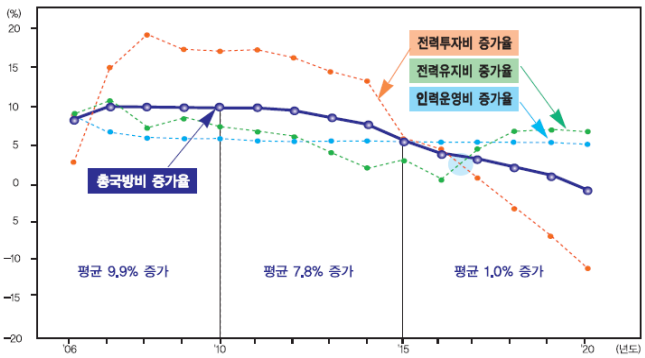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국방개혁을 통하여 병력은 줄지만 실질적인 전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기술집약형의 군 구조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개혁재원은 앞으로 계속 재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 개혁추진기간 중에 개혁소요가 반영된 국방비 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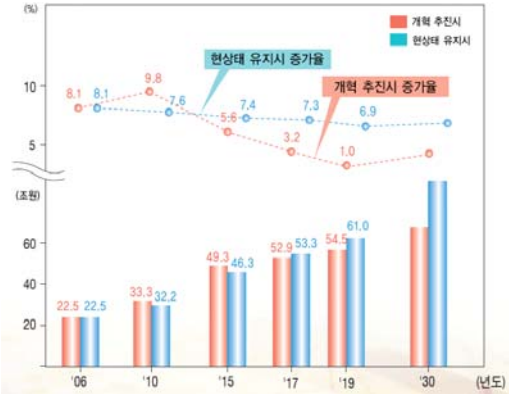
2020년까지 국방개혁 소요를 포함한 총국방비는 6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전력투자비 272조원은 기존 군사력 건설비용과 병력감축 상응전력 획득비용이 포함되며, 경상운영비 349조원은 기존·신형장비 운영비, 우수인력 확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은 개혁기간 총 정부재정규모 3,700조원의 16.8% 수준이다.

이는 개혁초기단계(2010년 이전) 및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단계(2015년 이전)까지는 일정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나, 이후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전환 될 것이다. 국방개혁의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와 대비하면 뚜렷이 나타난다. 【도표2-7】에서와 같이 2017년부터 국방개혁이 현재 상태 유지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시작한다.

【도표 2-7】 국방비 증가율 추이



【 도표 2-8】 국방비 추이 비교



3) 개혁 추진기간 중 국방비 규모와 타국과의 비교

현재의 국방비 규모는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서 분석된 2004년을 기준으로 한 분쟁국가의 GDP 대비 평균국방비 5~6%보다 훨씬 낮으며, 주변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개혁기간 중의 GDP 대비 국방비 평균비율 2.8%는 향후에도 첨단전력 확보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6%에서 2010년에는 2.9%, 2015년에는 최고 정점인 3.0%까지 상승하였다가 개혁기간 말인 2020년에는 2.3%로 저하된다.

【도표2-9】 주변국과 주요 분쟁국의 국방비 규모

구 분	한국	대만	이스라엘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국방비(억불)	157	75	97	431	351	4,393	222
GDP 대비 국방비(%)	2.4	2.5	8.3	1.0	3.7	3.9	4.4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05.9월(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나. 국방개혁 소요재원 확보

1) 향후 국가 경제 전반의 흐름과 정부재정규모 판단

국방개혁 추진기간 중 실질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방개혁 소요가 집중되는 초기단계('06년 ~ '10년)에 국방비가 9%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소요재원 621조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간('00~'05년)의 경상성장률 7%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최근 5년간의 경상성장률이 8%(실질성장율 5.4%, 물가상승률 2.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15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을 7.1%(실질성장률 4.7%, 물가상승률 2.3%)로 전망한데 근거한 것이다.

민간경제 연구기관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가해지고 있음을 근거로 유사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 개혁 소요재원 확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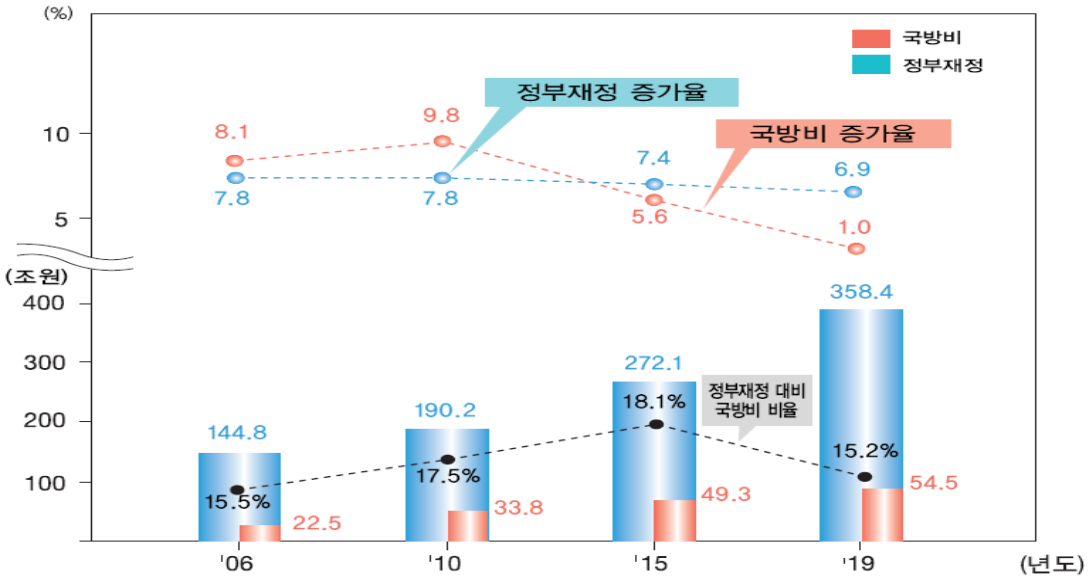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 소요재원이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반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에 대한 투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문민정부 등장 이후 정부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IMF 금융위기 시에는 실국방비가 감소되기도 하였다.

2004년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규모 및 주변국의 국방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비 투입으로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은 물론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혁 기간 중 국방비 평균 증가율 6.2%는 경상성장률(평균 7.1%) 및 정부재정증가율(평균 7.1%) 범위 내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도표2-10】에서 보듯이 개혁 기간 중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평균 비율 2.8%/16.8%는 개혁 추진 초기 단계의 집중투자소요를 감안한 것이며,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2016

년 이후부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2-10】 정부재정과 국방비 추이 비교



특히, 개혁기간 중 연평균 국방비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과거 15년의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배정추세를 볼 때도 재원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하락한 과거 15년(1991~2005년)의 경우에도, 기간 중 평균예산(13.6조원)은 직전년도 예산(1990년 : 6.6조원)의 2.1배 였으나 개혁기간의 평균 국방비는 2005년 예산의 2배 미만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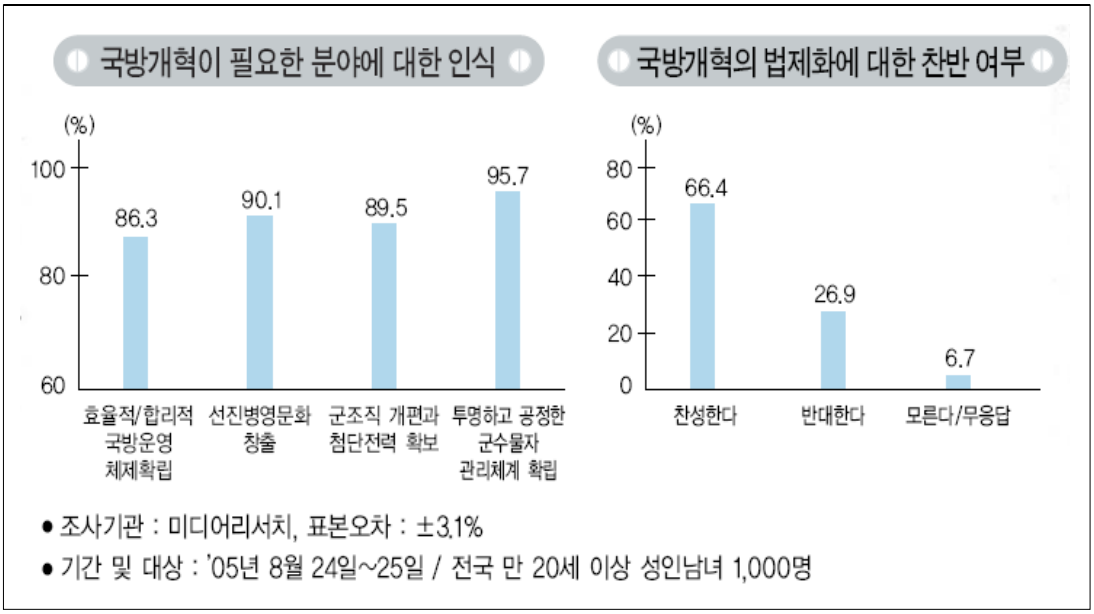
【도표 2-11】 과거 15년간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구 분	직전연도 국방비	기간 중 평균 국방비	배 율
과거 15년('91~'05)	6.6조원('90)	13.6조 원	2.1배
개혁 기간('06~'20)	20.8조원('05)	41.4조 원	2.0배

3)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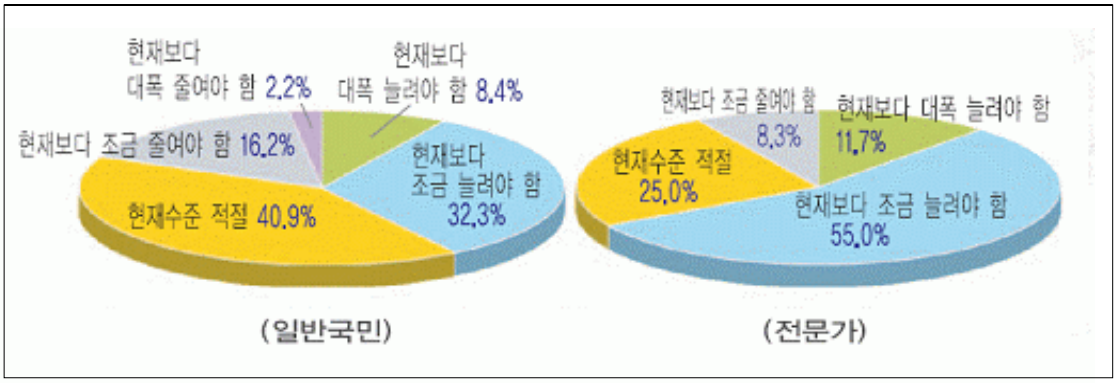
과거의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 아래의 도표와 같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도표2-12】 우리 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05. 8월)



금번 국방개혁은 과거의 실패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민여론을 기초로 군내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 네티즌과의 토론회, 전문연구기관 주관 공청회, 언론사 간부와 안보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관해서도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홍보활동의 세부사항은 제 2장 제3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부분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도표2-13】 국방비 수준에 대한 국민·전문가 여론조사 결과('05. 8월)



⇒ • 「일반국민」은 향후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 18.4%보다 2.2배 높게 나타남

• 「전문가」는 향후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 8.3%보다 8배 높게 나타남.

※ 출처 : 「2005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국방대학교 부설 안보문제연구소, '05.8월

•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 연구소

• 대　　상 : 일반국민(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전문가(국방대 안보 문제 연구소 국방·안보 전문가 DB중 민간전문가 60명)

• 기　　간 : '05년 7월 4일~8월 5일　　• 방　　법 : 면접조사

아울러 국방개혁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병력감축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고용 및 생산 증대로 연계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해 GDP 16.5조원의 경제적 증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300만의 예비군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여 국민편익을 보장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GDP 1,450억 원 증가의 효과가 예상한다. 국방개혁을 통해 추진되는 부대감축은 부대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축소하여 4.7조원의 절감액이 발생하며, 국방민간인력 약 3,000여명 고용증가는 GDP 2.1조원 증가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제2절 국방개혁, 범국가적 과업이 되다

법제화 추진 이전에 국방개혁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국방운영분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운영혁신준비단」과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군구조개편준비단」 등 두 개의 추진기구를 편성·운영하였다.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은 2005년 11월 16일 차관 소속하에 한시적 기구로 발족했으며, 운영기간은 2006년 1월 2일 부터 법 시행일까지로 하였다. 이 조직은 「국방개혁 2020」의 추진과제 중 합리적·효율적인 선진국방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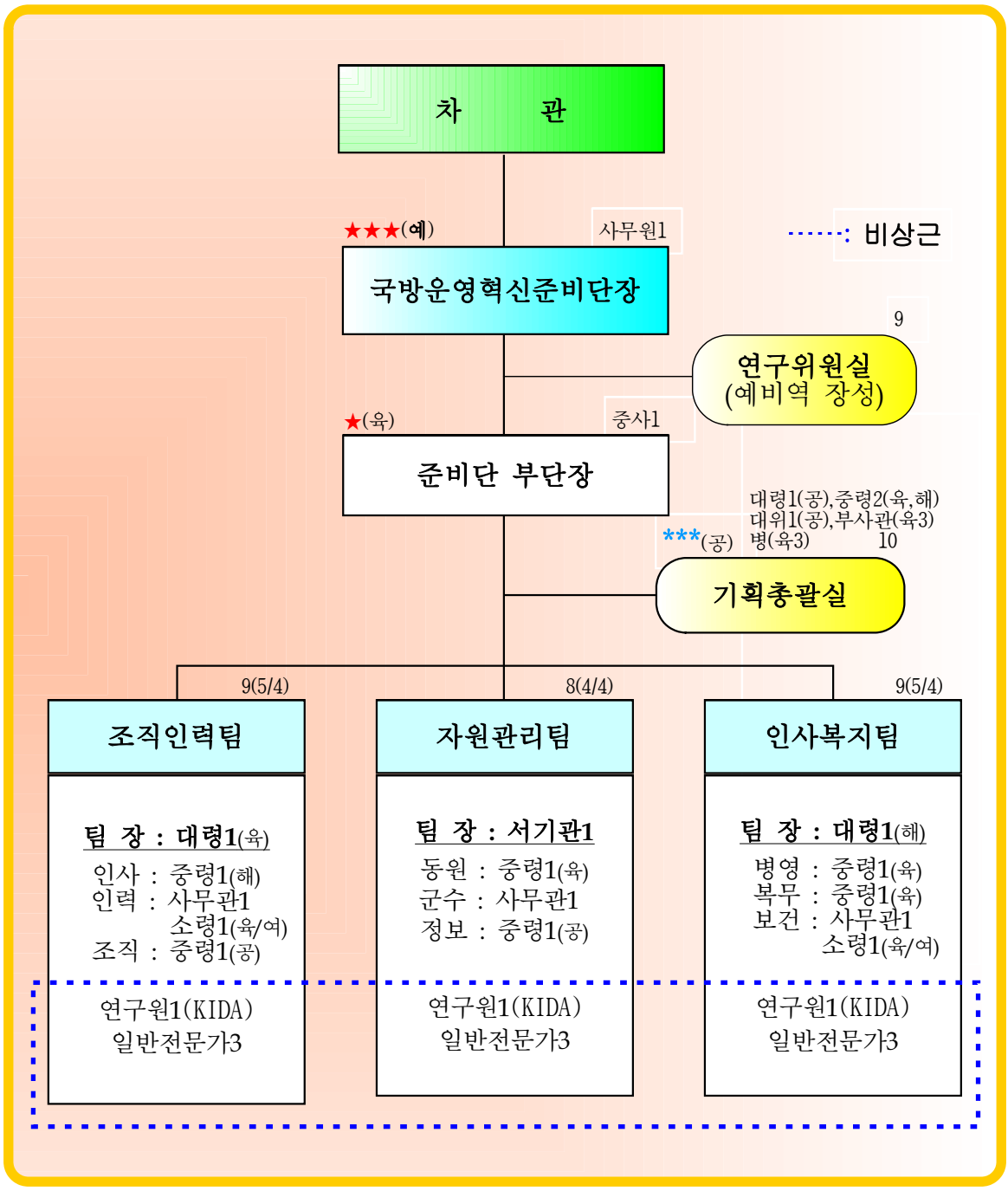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이 약 11개월간 수행했던 임무는 먼저, 국방운영분야 개혁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시행 '안'을 검토하며, 둘째, 시행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셋째는, 국방개혁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업무를 주관하고, 넷째, 국방개혁추진단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

편성은【도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역 중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구위원실은 예비역 장성 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아래에 기획총괄실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3개 팀에는 국방연구원 소속의 연구원 1명과 일반전문가 3명이 각각 소속되어 비상근으로 임무를 수행 하였다.

군 구조 개편 준비단은 「국방개혁 2020」의 추진과제 중에서 군 구조 개편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1월 16일 설치되었으며 국방운영혁신준비단과 마찬가지로 차관 소속하에 한시적 기구로 발족되었고 그 운영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법 시행일까지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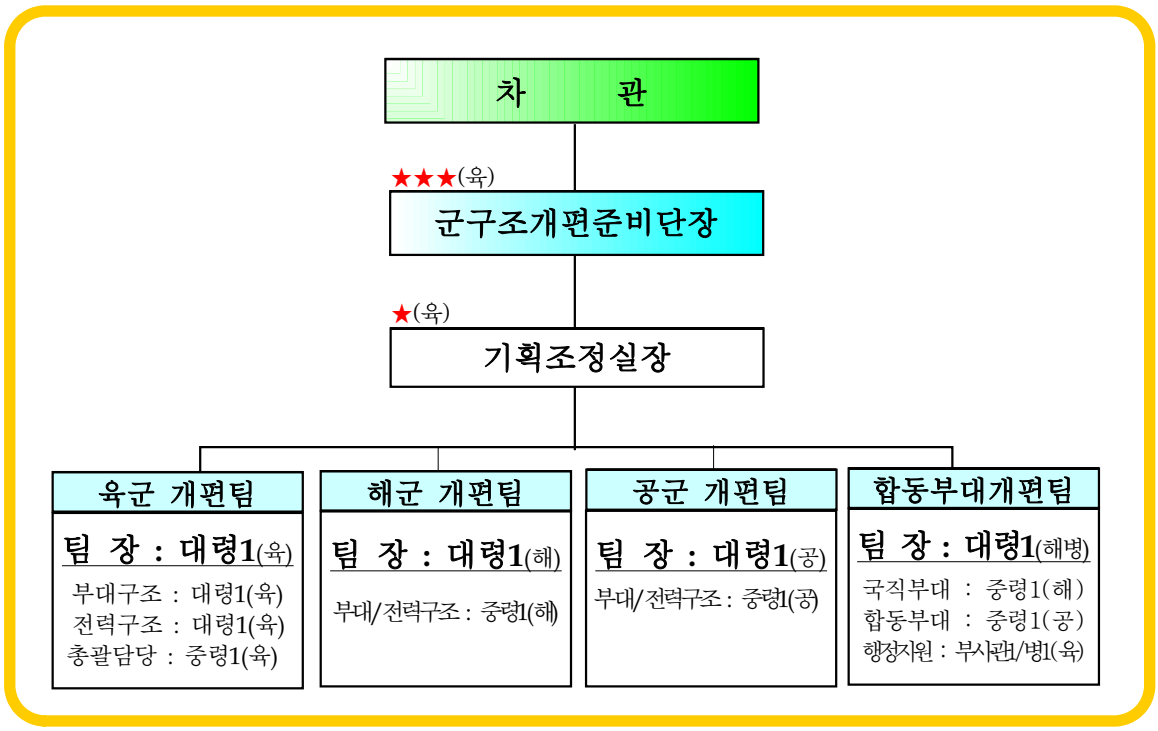
군구조 개편준비단의 임무는 첫째, 군 구조 개편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분야별 시행'안' 검토와 시행실태 확인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셋째는 업무 조정·촉진 및 군 구조 개편 추진 관련 대외기관/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는 것이었다.

【도표 2-14】 국방운영혁신준비단 편성



군구조개편준비단의 편성은 【도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 중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각 육·해·공군 및 합동부대 개편팀으로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도표 2-15】 군 구조 개편준비단 편성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은 설립 이후 준비단 운영계획을 2006년 1월 20일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국방운영혁신 추진 관련 협조회의를 2006년 1월 30일 최초로 실시하여, 국방부·각 군 본부 관련 부장·과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군 본부의 애로사항 및 추진상태를 심층깊게 토의하였다.

이후에 2006년 5월 17일까지 국방운영혁신분야 중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방경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아웃소싱 추진 T/F 설치·운영과 「군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운영분야) 세부 추진계획을 2006년 6월 16일 발간하였고, 국방운영혁신 추진평가회의를 2006년 7월 14일 실시하였다.

국방운영혁신 준비단과 마찬가지로 군 구조 개편 준비단은 군구조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12월 15일에 군 구조 개편준비단 운영계획을 작성하였다. 2005년 12월 20일에는 군 구조 개편 추진 관련 협조회의를 개최하여 합참 및 각 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참고하여 2006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 30일에 각 급 부대에 하달하였다.

2006년 2월 13일에는 국방개혁 1단계 기간에 추진해야 할 군 구조 개편업무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군 구조 개편 1단계('06~'10) 추진계획을 발간하였다. 「군 구조 개편안」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토의를 위해 2006년 3월 13부터 3월 21까지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 2군 사령부 등을 방문하여 실무자 및 지휘관과의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2006년 5월 4일에는 부대 창설・해체・개편 평가를 위한 「추진평가표」를 작성·활용하였다.

제3절 ‘법제화’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

1. 법률안 입안 단계

가. 초기 법률안 성안

국방개혁 법제화 초기단계의 주된 논의는 프랑스 국방계획법의 법제화 과정 벤치마킹의 적정성 여부와 「국방개혁기본법」에 국방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5년 7월 5일 정책기획관 주관 실무회의에서, ‘기본 조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대부분을 부록으로 처리한 프랑스 국방계획법은 상당한 장점이 있으나, 우리 법제 관행과 상이하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법률 제정 형식(총칙-본문-부칙)에 따라 법안을 성안’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1일 발족한 국방개혁위원회에 구성된 법제화추진반이 국방개혁법 법제화 방안 연구 및 법안 작성과 당정협의 등 입법절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방개혁 2020」의 21개 대과제, 80개 소과제 중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 기존의 법령과 중복되지 않는 과제, 그리고 2005년 내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 등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여 법률적 문구로 바꾸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관련 부서와 수차례 수정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25일에 총 6장, 42조항의 「국방개혁기본법」 초안을 완성하였다.

나. 성안 과정에서 논점과 조정내용

「국방개혁기본법(안)」 성안 과정에서의 주요 논점과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등 국방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장교로 전역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 만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었으나, 헌법 제 25조에 규정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과 함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입안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둘째,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방개혁기본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바탕을 두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

사력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질적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고, 병력감축 등 군 구조 개편은 주요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며, 3년 단위로 안보 및 국방개혁 추진상황과 여건을 평가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 및 수정한다는 조문을 삽입하였다.

셋째, 국방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었으나, 국방개혁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며 그 위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방발전자문위원회와도 관계가 있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논의 결과 신속한 정책결정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합참의장의 작전지원 조정권과 관련된 내용은 각군 총장의 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장관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항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키고,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국방부안이 확정된 이후 2005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정부 유관부처의 의견수렴과 10월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관보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수용 가능한 의견들을 반영하였다.

2. 정부 입법절차 단계

법제처 심사는 공식적으로는 입법예고('05년 10월 25일 ~ 11월 14일) 가 종료되

어야 가능하지만, 2005년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11월 4일부터 사전심사를 하였다. 이후 11월 24일 차관회의와 11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2005년 11월 30일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12월 2일 「국방개혁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 국회 심의 단계

2005년 12월 3일 국회 국방위 입법조사관이 사전검토회의를 통하여 도출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12월 20일 법률안 예비검토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였다.

2006년 1월 11일에 열린우리당, 18일에는 한나라당 국방위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여「국방개혁기본법안」법제화 추진경과, 국방개혁기본법의 성격, 법안 작성 방향, 법안 구성,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출된 기본법안(38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6년 2월 3일에는 제258회 임시국회 기간 중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대비한 예비검토 설명회가 있었다.

2006년 2월 7일「국방개혁기본법안」의 원활한 국회의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황병무 교수(국방발전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정책기획관이 국방개혁안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온대원(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정낙근(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정용택(민주당 정책실장), 정택상(민주노동당 진보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김병조(국방대 교수), 정창인(재향군인회 연구위원) 등 7명의 토론자에 의한 국방개혁 관련 주요 관심사항인 국방개혁 법제화 필요성,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군 구조 개편 및 50만 병력규모에 대한 타당성, 국방개혁의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국방예산 확보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2월 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가 있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국방개혁안과 법제화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관련 팀장들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예결위 전문위원들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2006년 2월 16일 제258회 임시국회의 국방위 전체회의가 개회되었고 「국방개혁 기본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의결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의「국방개혁기본법안」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국방개혁기본법안」검토결과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질의 답변을 통해 국방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국방개혁 법제화는 찬성하지만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야간 심도 깊은 토의와 심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전문가 초빙, 상임위 특별소위원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을 통해 법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2006년 3월 23일과 28일에는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방위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방개혁기본법안」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제화 추진의 의의, 추진경과,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과 주요쟁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방위원 보좌관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문 해소와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06년 4월 4일에는 제259회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합동참모본부로 장소를 옮겨 장관 주관으로 국방위원 대상 국방개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합참 작전본부 작전준비태세 보고,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 관련 보고, 합참 북한위협 판단보고, 군사전략 및 전력증강 소요 및 방향 보고 등 비공개 특별보고가 진행되었고 참석대상자간 국방병력 규모, 예산확보, 북한위협 평가, 법제화 등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별소위원회는 2006년 4월 7일(1차), 4월 12일(2차), 4월 14일(3차), 4월 20일(4차), 4월 28일(5차)에 실시하여 법안검토 방향을 논의하고 조문별 심사를 하였고, 공청회는 4월 18일(1차), 4월 26일(2차) 간「국방개혁 2020」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다.

5차례 특별소위원회를 통하여 특위위원・전문 위원실・국방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작성되었다. 주요 목표수치(상비병력 50만 수준 등) 등 특별법적 성격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서 법안의 제명을「국방개혁특별법」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최초 국방부안 38개 조항 중, 6개 조항은 원안을 유지하고, 국방개혁 자문위원회 관련 1개 조항을 삭제하며, 내용 통합으로 4개 조항이 줄고(7개→3개 조항), 27개 조항은 자구수정을 함으로써 최종 심의 결과인 수정안은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4월 18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임길섭(한국국방연구원 개념발전연구실장),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김영호(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훈배(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등의 발표와 국방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국방개혁안과 법제화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4월 26일 2차 공청회에서는 김경덕(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 박주현(한국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장), 설문식(기획예산처 국방재정과장), 장영철(국방부 계획예산관),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 5명의 발표에 이어 국방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상세한 자료제시를 통한 발표로 국방개혁의 당위성 및 예산소요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야당위원들은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2006년 4월 10일과 4월 12일에는 국방부에서 국방부 및 국회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국방개혁기본법안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출입기자 총 26명 중 12명이 교체되어 신임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금번 설명회로 국방개혁 전반의 이해증진에 기여하였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도 국방개혁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이해증진 및 관심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 5월 1일에는 5차 특별소위원회에서 수정한「국방개혁기본법」을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상정이 되지 못함으로써「국방개혁기본법수정안」상태로 대기하게 되었다.

2006년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됨에 따라 신임국방위원들에 대한「국방개혁 2020」내용 설명과 법제화 추진에 대한 협조를 위해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기획관이 대면설명을 하였으며 신임국방위원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 기간동안 열린우리당의 김진표·이근식· 원혜영·안영근 의원, 이강래 예결위원장, 한나라당의 공성진, 박계동, 이성구, 김학송, 김형오 원내대표 의원,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김송자 의원에 대해 개별 대면 설명을 하였다.

2006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법률안심사소위원으로는 안영근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조성태·이근식·김명자 의원, 한나라당 황진하·공성진·고조흥 의원, 민주당 김송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쟁점은 여전히 법안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주요 목표수치 존치에 대한 여부였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과 관련하여 법안에 목표수치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2006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국방개혁기본법」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1:00시부터 23:50시까지 개최되어 법안을 심의하였고, 최종 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기본법·특별법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명칭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방개혁기본법」을 「국방개혁법」으로 수정하였고, 핵심쟁점이었던 주요 목표수치 존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안을 유지하되,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 3년 단위의 목표수준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전제조건을 추가하였다. 예비전력 규모 150만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한다”로 내용을 추가하고 수치는 삭제하였으며, 국방부본부 공무원 확대비율 70%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법안의 목적에 부응토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제1조(목적)에 “북한 핵실험”을 추가하였고, 제13조(합참의장 등의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회는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각 군 총장·방위사업청장은 제외되었다.

2006년 12. 1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전 10:00시부터 개최되어 「국방개혁법」을 심의하였다. 심의과정에서 현행 법률 중 ‘개혁법’이 존재하지 않음이 지적되어 제명은 다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제4조(국가의 기본의무)는 국가는 총체적인 지칭이므로 ‘정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의 기본의무로 수정되었다. 또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 제·개정시 동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는 규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6:00시경 법사위 위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법사위에서 가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당일 13:00시부터 개회하여 타 법안을 의결하였고 15:00시 정회를 선포하였다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기 위해 18:15시경 속개되어 안영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임종인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다. 18:30시경 투표에 들어가 18:35시경 개표결과 출석의원 152명 중 찬성 120명, 반대 17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꼭 1년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것이다.

제4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 홍보의 기본 방향 설정

가. 홍보를 위한 상황 인식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반대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목표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데 두고 추진하였다. 또한 현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슈 즉, 집단별 쟁점이 상이하고 개혁 실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법제화 추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우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홍보 대상 및 분야를 구분하여 국방개혁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은 높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계층별로 개혁안에 대한 관심사항 및 의견이 상이하고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상황인식 결과에 근거하여 홍보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나. 홍보 추진전략과 홍보 수단

1) 추진전략

홍보대상별 쟁점·이슈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홍보대상 별로 상이한 쟁점에 대해 대상별 차별화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국방개혁안에 대한 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국회 입법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위한 지지 여론 확산에 홍보의 초점을 맞추었다.

2) 홍보 수단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였다. ON-Line 홍보로는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 TV 및 공중파를 최대한 이용하였고, OFF-Line 홍

보를 위해서는 공청회, 순회교육, 세미나, 포럼, 언론 등을 이용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다.

홍보기간 중 행사 및 이벤트로 친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계 전문가 간담회, 참전용사 초청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열린 음악회, 군악 연주회, 위문 공연 등을 통한 이벤트 행사로 친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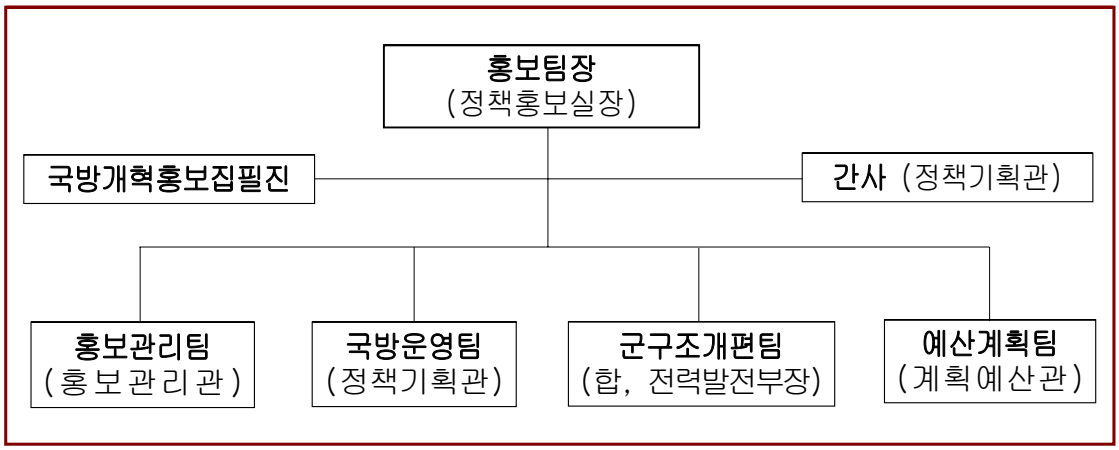
2. 홍보팀 구성 및 임무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와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홍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방부 내에서 구성된 홍보팀은 범정부 홍보팀의 실질적인 추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정부 홍보팀은 국방개혁에 대한 언론·방송 및 학계,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확보와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 대한 설득 및 홍보를 주로 담당하였다.

국방부 홍보팀은 정책홍보실장을 팀장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4개의 팀으로 구성하였다. 그 조직은 【도표2-16】과 같다.

【도표2-16】 국방부 홍보팀 구성도



각 팀은 기본적으로 해당분야 언론상황을 매일 모니터하고 필요시 홍보관리팀과 협의하여 적시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면서 홍보추진현황(전일실적, 금일계획,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매일 10시까지 국방운영팀에 송부하였다.

국방운영팀이「Center」역할을 수행하면서 홍보상황을 종합·조정하고 각 팀의 홍보추진현황을 일일·주간단위로 종합하여 필요시 유관부서에 배포하였다.

홍보관리팀은「일일 국방개혁 관련 모니터 결과」를 작성·배포하며 쟁점이 있는 경우, 관련팀은 즉시 기본입장을 정립하여 홍보관리팀과 협의하며 적시적인 조치 후 간사(국방운영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각 팀별 회의는 주 1회, 전체회의는 격주 단위로 실시하며 각 팀은 홍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식별하여 홍보과제 선정 및 홍보전략 등을 개발, 토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팀은 회의 결과를 회의 실시 다음날까지 국방운영팀으로 통보하고 전체회의 개최시, 각 팀은 회의자료를 회의 2일전까지 간사(국방운영팀)에게 제출하였다.

「국방개혁 홍보 집필진」은 국방개혁관련 언론의 부정적 보도 또는 오보 발생시, 해당분야 집필진으로서 즉각 반론 및 해명사항을 기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언론기고 및 방송 출연 가능한 체제를 구비하여 운영하였다.

3. 홍보방향 및 실시결과

가. 국민 대상 홍보

과거 권위주의적 병영문화의 유산으로 '군대 가면 시간 낭비, 자식 보내기 불안한 군대' 등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국방개혁연구기간 중 발생한 연천 GP 사건 및 '노충국씨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홍보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홍보하면서 내 아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부각시키고 경제적인 군 운용으로 국민경제·복지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둘째로, 군의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알려 국방개혁 지지 여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는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설문조사, 홍보책자 발간, 국방부 홈페이지 활용, 친군화 이벤트 마련 등을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홍보 수단별로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8월 이후부터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여 그 결과를 홍보관계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홍보업무와 관련한 토의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여론조사는 2005년 8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우리 국민이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국방개혁홍보책자는 일

반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설명형 책자 10,000부, 만화형 책자 20,000부를 발간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영문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넷째, '국방부 홈페이지 구축'은 One Stop 정보제공 차원으로 2006년 8월경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방개혁의 당위성 및 필요성, 추진일정, 개혁과제 현황 등을 게재함으로써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홍보기간 중 행사 및 이벤트로 친군적 분위기 조성 분야는 사계 전문가 간담회, 참전용사 초청 행사, 열린 음악회, 군악 연주회,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방개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방개혁에 대해 매우찬성 20.2%, 대체로 찬성 46.3%, 대체로 반대 22.3%, 매우 반대 4.6%, 무응답 6.7%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법제화 추진에 대하여서는 찬성 의견이 6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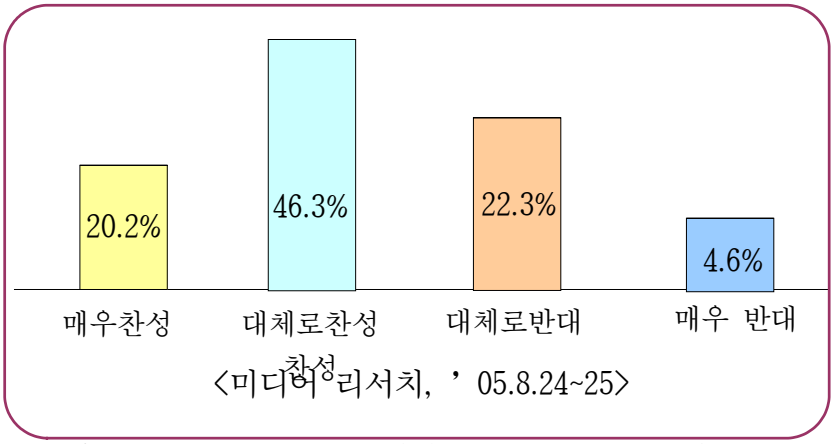
그러나 국방개혁의 분야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세부과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병력규모가 적절하거나 많다'는 의견이 70.0%, '국방비 수준은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1%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45.3%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국방개혁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및 군대생활 개선' 요구가 높았으며 군사력 건설과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병력을 감축하더라도 군사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여론 조사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홍보를 전개한 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전국 대도시 113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한 전광판 광고와 국군방송(KFN)의 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와 국방개혁 홍보책자 배포로 인한 효과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한 여론 형성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는 국민들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홍보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피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홍보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군 간부 및 예비역 대상 홍보

군 간부 및 예비역들은 국방개혁에서 추진하는 군 병력 감축이 국방력 약화로 직

【도표2-17】 국방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와 충고가 있었다. 따라서 기본 홍보방향은 군 간부는 물론 예비역을 포함하여 국방개혁에 대해 '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 및 안정감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노력들을 살펴보면, 첫째, 2005년 9월 8일에 육·해·공군본부 간부대상으로 합참의장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각 군 및 작전사급 부대에 대하여 정책기획관외 관련 실무자 11명으로 구성된 순회 교육팀을 구성하여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 국방개혁안을 교육하여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둘째, 예비역 대상으로는 장관이 2005년 9월 9일에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비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군 내부에서의 국방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으로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각 군 간의 이해관계로 다소 이견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예비역에 대해 각 단체별 방문 설명, 초청 설명회, 홍보 책자 배포 등을 통한 국방부의 의지를 표명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군 병력의 감축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비역들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 국방개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다.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홍보

국방개혁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이 상이하므로 각 정당의 기본입장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차질 없는 국방개혁 추진의지를 표명한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리한 병력 감축에 반대하며 법제화 필

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병영환경 개선분야와 합리적 국방예산 확보 가능성에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국방비의 추가 삭감과 병력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설명 또는 참고자료 제공을 통하여 지지여론을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당정협의 5회, 정당 순회설명 3회, 국방위원 개별 설명 6회, 국방위원 및 보좌진 초청 설명 각 2회 등 정당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국회 회기중에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시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방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방개혁의 법제화 추진에 있어 비록 일부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였지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국회의결에 기본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언론, 여론 주도층 및 NGO 대상 홍보

언론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기본방향으로는 중앙 일간지에 집중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의견수렴 채널을 개설하여 여론수렴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기고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언론에 다양하게 기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고자 네트워크 현황으로는 국방발전자문위원 15명, 정책홍보실 국방정책자문위원 10명, 장관 정책자문단 15명, 국방개혁 실무위원 5명, 재향군인회 회장단 10명, 국방대학교 교수 8명, 국방연구원 9명, 학계 교수진 및 연구진 1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토론 프로그램 대비 출연자 7명을 사전 선정하여 토론을 주도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또한 전문가 세미나 및 NGO 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국방정책자문단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2005년 9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의원, 언론인, 군 간부, 방위산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존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방연구원 NGO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005년 9월 국방개혁에 관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방정책자문단회의는 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군 인사가 아닌 학계 및 연구원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2005년 9월 13일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 관련 언론브리핑을 한 이후 중앙 일간지를 비롯한 방송 등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왜곡보도 및 오보 발생시 즉각 대처하여 정정 보도 및 반론을 기고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즉각적이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언론보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NGO 단체나 여론 주도층 등 모든 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필요 사안을 선별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홍보 책자 및 자료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에 집중하였다. 특히, 장관이 최초로 네티즌과의 대화를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홍보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반대표명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국방개혁에 대한 홍보의 종합평가

우리 군이 창설된 이래 국방분야의 특정사안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한 적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군내부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국방개혁' 문제를 전 국민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홍보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방향, 추진중점, 홍보대상, 홍보방법 등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방개혁을 주도한 실무자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은 국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최초부터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왜곡보도를 막는 것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은 부가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장
2020년, 우리 군의 미래상!

제1절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방

제2절 작지만 강한 군대

제3절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제1절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방

1.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조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대 국가의 안보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군 고유 영역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에 상응한 민군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군관계는 대표적으로 문민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간인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민간인 국방부장관 등 정치가집단이 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민통제는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심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민통제를 위한 원칙들이 헌법, 정부조직법 및 국군조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 구성단위인 국방부본부 조직이 현역군인 위주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국방정책을 수립·집행할 문민공무원 인력양성이 미흡하였고 민간분야의 낮은 관심에 따른 민간 국방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국방운영분야에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활용할 수 있는 문민기반이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방부본부의 주요직위에 주로 현역을 보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직된 현역군인의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군사적 입장이 우선 고려됨으로써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연계된 국방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제한이 되었다.

또한, 각군 중심의 사고로 인해 각 군간 균형적인 발전과 통합전력 발휘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국방부본부 조직이 군인들에 의한 의사결정체제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국방조직의 경직성이 심화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의 경직성과, 상위직에 대한 일반직공무원의 진출 제한으로 인해 우수 공무원들이 국방부 장기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장하는 정부 구성단위로서 국방부가 정부가 정한 국가대전략 아래에서 정부정책을 국방정책에 합리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며 각 군 간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정 및 통제를 통해 3군의 균형발전을 달성하여 각 군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

방부본부에 군인이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위 이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여 정책이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정부 출범부터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관점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안보 및 국방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참모조직에 문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민기반 확대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내·외의 여건은 이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나. 국방부본부 문민화 도입

2003년 1월, 국방부에서 참여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방부본부 문민화 필요성을 최초 제기하였다. 국방부본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직위가 현역군인 위주로 보직되어 있어 잦은 보직이동으로 현역군인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충분한 발휘가 제한되며 소속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3군의 중립적 입장에서 국방정책을 일관되고 객관적 입장에서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실장 직위에 대한 민간인력 확대를 통한 국방정책의 객관성,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2003년 3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방조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방부 공무원의 인력구조를 적정 피라미드형 직급체제로 조정하여 공무원의 상위진출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분야별 전문화 직위를 지정하고 보직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추구하는 국방조직의 문민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조직과 기능의 정비를 심의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한 참여정부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2003. 6. 3)에서 국방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 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 인력증원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상위직위 진출이 제한되는 현실태를 보고하고 국방부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적정 피라밋형 구조로 개선하여 공무원의 상위직위 진출 확대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도표 3-1】 2003년 당시 일반직과 현역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군 인
국 장	16	4	12 (현역 9, 예비역 3)
과 장	62	31	31
실무 담당급 (사무관/중령)	474 (100%)	171 (36%)	303 (64%)

이러한 국방부 조직정비 계획에 대해, 취임초기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들의 문민통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국방부의 군인은 줄이고 공무원은 확대하는 것이 국방부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오해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문민화가 단순한 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문민통제의 핵심요소라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전까지 예비역장군 출신으로 보직시켜 왔던 1급 직위인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공무원을 보직하게 되었으며 2003. 3. 20일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 승진 보직됨으로써 문민화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연구개발관에도 공군 소장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로 보직(2003. 8. 26.)하는 등 국방업무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인 국장급이상 직위에 대한 공무원 보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 2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주관한 참여정부 조직정비 회의에서, 국방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국방 문민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현역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국장급 상위직에 현역국장은 필수직위 위주로 최소화하고 공무원 국장 직위를 확대하며 중하위직은 공무원과 현역을 균형되게 편성하여 상호 균형과 보완을 통해 조직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역군인 40명은 각군으로 원복하고 이에 대체하여 공무원 4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보고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문민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문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민화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부 현역국장 직위에 대한 현역과 일반직공무원 복수직위화는 국방부 문민기반 확대에 크게 도움

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일반직공무원 단수직위로 전환이 필요함과 아울러 국방운영의 중요 직위인 정책실장, 군수국장, 인사국장 및 획득국장 등 중요직위에 대해서는 군인에서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2003년 9월 19일 국방개혁 추진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차관보급 1개 직위를 문민직위로 추가하여 2개 직위로 확대하고, 4개인 국장급 문민 공무원직위를 8개로 확대함과 아울러 국방부 공무원을 국방 전문관료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안과 인사관리 방침을 보고하는 등 국방부본부 문민화의 구체적인 기본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2003년 9월과 10월의 3차례에 걸쳐(2003. 9. 19, 9. 24, 10. 11) 국방부 기획조정관실(고경석 국장, 문점수 팀장)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국방조직 및 문민화 관련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국방부 공무원 정원 범위내 직급 조정을 통한 상위직 확대로 문민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국방자원(인력, 예산, 전력투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육·해·공군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정·배분하기 위하여 국방부본부의 현역 대 일반직공무원 직위 구성비를 50대 50으로 균형화하며 5급 공채 확대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가 수월한 것만은 아니었다. 문민기반 확대는 실제 국방운영을 담당하는 국방부 공무원의 정원확대가 필수적이나, 정부 조직과 정원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기구 및 정원 억제 방침을 이유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정원 확대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에 걸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통해 2003년 12월에는 일부 현역 국장급 직위에 대한 일반직공무원과 군인의 복수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부 실무공무원의 정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전까지는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국방부본부 군인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방부본부 문민기반 확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04년 3월 22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하

여 현역중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실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현역의 복수직으로 신설하고, 또한 현역 국장직위 4개를 현역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전환함으로서 현역직위에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무계층에서는 현역 중·소령이 담당하던 9개 직위를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는 등 가시적인 문민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특히, 현역중장으로 보직하던 정책실장은 2004년 6월 21일 예비역장군으로 보직하여 문민화 기초를 이루었으며, 국방부본부 문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06년 12월 18일에는 정책홍보본부장(2006년 1월 1일에 국방부는 본부·팀제 도입으로 정책실장은 정책홍보본부장으로 변경됨)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방부 문민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로써 2004년 3월 22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한 1단계 문민화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도표3-2】 2004년 국방부본부 문민화계획 (1단계)

구 분	현 행	개 선
차관보급 (4개직위)	· 정책실장을 현역 단수직에서 공무원/현역 복수직으로 조정	
	·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공무원) · 정책실장 (현역) · 획득실장 (공무원/현역)	· 좌 동 · 정책실장 (공무원/현역, 복수직) · 좌 동
국장급 (16→18개 직위)	· 정책기획관 등 4개 직위를 현역 단수직에서 공무원/현역 복수직으로 조정	
	· 현역 (9) : 모두 현역 단수직	· 현역 (10) : - 현역 단수직 : 5 (동일) - 현역/공무원 복수직 (5) : 법무관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군사시설국장, 공보관(신설)
	· 공무원 (7)	· 공무원 (8) : 복지보건관 신설
실무급	-	· '04~'07 4년간 46개 현역직위를 공무원 직위로 전환 - '04년 9명, '05년 11명, '06년 13명, '07년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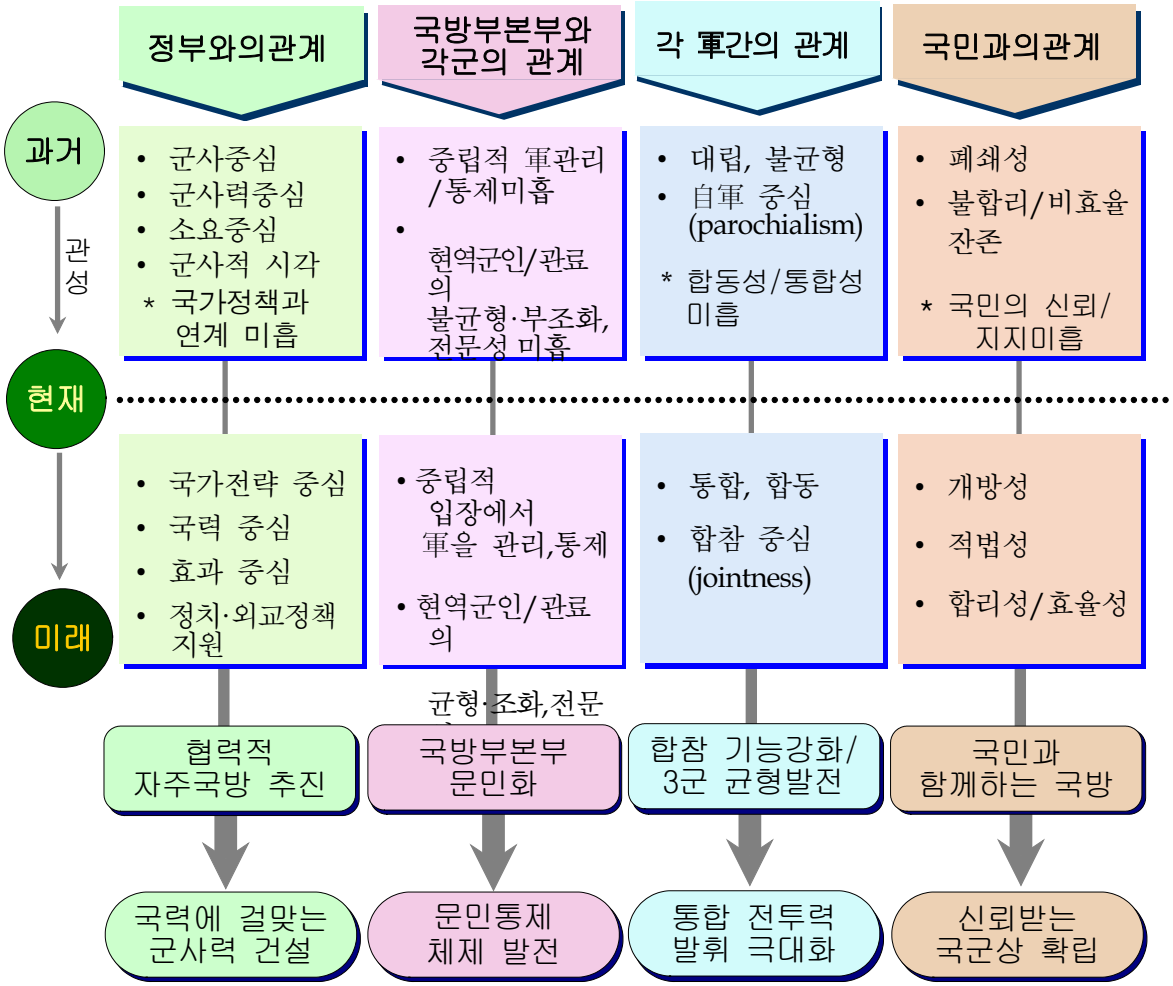
다. 국방부본부 문민화의 본격 추진

국방부의 문민기반 확대는 2004년 7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내실화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윤장관은 취임 전 작성한 연구논문

「국방조직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도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장관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서「새로운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한 국방운영을 주창하고 그 일환으로 국방부본부와 각 군과의 관계를 조망하고 효율적 국방운영을 위해서는 문민통제 체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방부본부의 문민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하였다.

【도표3-3】 문민화 개념 및 기본방향



윤장관은 2004년 8월 16일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위해 국장급이상은 2006년 말까지 전원을 문민으로 보직하되 예비역의 경우, 육·해·공 각군의 비율을 2:1:1로 조정하고, 과장급 이상은 2006년 말까지 75%를 문민으로 편성·보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와 국방, 국민과 군대, 각 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본부

문민화와 민간 전문관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하던 문민기반 확대기조를 반영하며 각종 정책을 합리적으로 연결·조정하고 육·해·공군 3군간 균형적인 군사력 건설과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민간관료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인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본격적인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8월 26일부터 시작하여 2004년 11월 8일 장관에게 보고된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안)은 우선 현역이 보직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역 필수직위를 식별하고 이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민간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및 현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전환 가능년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국·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은 군인은 필수직위 위주로 최소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필요 직위는 현역을 유지하되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대외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직위,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민간인력 확보 가능 직위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환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조직의 안정 및 민간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구분하여 국장급은 '05~'06 2년 동안, 과장급은 '05~'07 3년 동안, 담당급은 '05~'09 5년 동안 전환하도록 조정하였다.

2004년 8월 26일 국방부본부의 문민화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당시 국방부본부 공무원과 군인의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도표3-4】 2004년 8월 당시 국방부본부 인력 현황

구 분	계	공무원(명)	%	현역(명)	%
계	725	379	52	346	48
국 장	16	7	44	9	56
과 장	57	30	53	27	47
담 당	652	342	52	310	48

※ 획득/연구개발관실, 장·차관, 실장급 이상, 정책보좌관(3), 위관이하, 기능직 제외

한편 국방부본부 문민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군인보다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기간 내에 문민화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며, 외국의 경우 국방분야 민간인력의 상당수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군출신 예비역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환되는 직위의 현역들은 보직관리가 되지 않아 경력관리에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우려는 문민화 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사항들로서, 문민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문민화와 육·해·공군의 균형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추진될 수 있었다.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근무 중인 현역 중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신분을 전환하여 활용토록 하고, 개방형 제도를 활용하여 예비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확보하며 국방부 자체 양성된 공무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여 국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현역군인의 보직관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근무하는 군인에게는 보직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고, 국방부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신분을 전환하여 활용하며 부득이 각 군으로 복귀해야 하는 현역은 합참, 각 군의 정책기능을 보강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문민화에 따른 현역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민화 추진기간을 '05~'09년간 5년으로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 속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렇듯 국방부는 문민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장급 회의(2004. 10. 15~20), 국장급 회의(2004. 10. 27) 차관보급 회의(2005. 1. 14) 등 직급별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문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민화 추진계획(안)은 NSC, 청와대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2005년 1월 19일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도표3-5】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 (2005.1.19, 2단계)

계급별	현 행			조 정 (현역)		전환계획	
	전 체	현 역	(%)		(%)	인원	시기
합 계	725	**346**	48	**207**	29	139	’05~’09
국장급	16	**9**	56	**4**	25	5	’05~’06
과장급	57	**27**	47	**16**	28	11	’05~’07
담당/실무자	652	**310**	48	**187**	29	123	’05~’09

※ 획득/연구개발관실, 장·차관, 실장급 이상, 정책보좌관(3), 위관이하, 기능직 제외

라. 문민화 주요내용

1) 공무원 정원확대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확대를 위해 국장급은 현역국장 9개 직위 중 군사보좌관,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동원국장 등 4개 직위는 현역으로 계속 보직하되, 법무관리관, 국제협력관, 인사국장, 군사시설국장, 공보관 등 5개 직위는 ’05~’06년까지 2년에 걸쳐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급은 현역과장 27개 직위 중 11개 직위는 ’05~’0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담당급인 중·소령이 담당하는 123개 직위는 ’05~’09년까지 5년에 걸쳐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전환직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된 획득정책관실과 연구개발관실은 전환직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현역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선발·활용함으로써 국방부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임용에 비중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 전환대상 국·과장 7개 직위 중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다.

2) 전환되는 현역의 활용계획

국방부본부 문민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현역 인력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기간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방부 근무기간 종료시에는 상부기관인 국방부에서 습득한 직무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로 합참, 각군본부, 지구사에 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현역군인의 군 배치를 통해 전투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3) 공무원 확보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현역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에 대한 공무원 충원에 있어서는 현재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승진 발탁하고 행정고시 출신을 신규 충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타부처 우수 공무원의 전입을 추진하는 등 우수 신규인력을 공무원 내·외부에서 충원하며, 현역군인에서 신분 전환한 예비역에 대한 특채와 이공계 출신 박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충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대학에 군사학과 개설 및 군사학과목을 개설하여, 국방·안보 관련 저변 확대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직 - 교육 - 승진을 연계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국방·군사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며 직급별·단계별로 의무교육 이수체계를 정립하고 군 관련 교육기관에 국방 전문/계열별 단기교육과정 신설, 선진국 국방기관 등에 공무원 파견근무와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마. 추진계획의 부분 수정 및 법제화

2006년 1월 1일자로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국방획득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수행하던 국방획득과 연구개발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국방부는 차제에 국방부본부 조직을 국방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팀제 도입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문민화 대상직위의 변동과 함께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문민화 대상직위 중 일부 직위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되어 문민화 전환직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문민화 추진계획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문민화 변동소요를 반영하여 2006년 5월 10일「국방부본부 현역 편제 조정(문민화) 추진계획」을 수정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표3-6】 국방부본부 직위조정 현황 (2006. 5. 10일 수정 후, 3단계)

직급별	전체	’06년 6월 1일 현재				’09년말			
		현 역	%	공무원	%	현 역	%	공무원	%
합 계	709	271	38	438	62	206	29	503	71
국장급	15	4	27	11	73	4	27	11	73
팀장급	68	23	34	45	66	20	29	48	71
담당급	626	244	39	382	61	182	29	444	71

※ 장·차관, 본부장급 이상, 정책보좌관(3), 위관이하, 기능직 제외

【도표3-7】 계급별 연도별 전환 현황 (수정 후, ’05~’09년)

구 분	계	전 환 연 도				
		’05	’06	’07	’08	’09
합 계	129	32	32	23	21	21
국장급	5	3	2	-	-	-
팀장급	10	4	3	3	-	-
담당급	114	25	27	20	21	21

한편 2006년 12월 28일 제정 공포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방부의 계획으로만 추진하던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도 국방부 공무원의 구성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군인직위는 필수직위 위주로 최적화시켜 나가도록 규정하였다.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법제화하면서 최초에는 2009년까지 직급별로 국방부정원의 70% 이상을 공무원으로 보하도록「국방개혁법(안)」에 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정원 비율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을 경직되게 운영하게 된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공무원 비율 및 목표시한을 규정하게 되었다.

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의 핵심은 국방부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확보와 아울러 현재 근무중인 국방부 공무원을 전문가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원-육성-보직관리 등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방적 공무원 충원을 통하여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방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공무원의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국방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체계적 보직관리를 통하여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공무원, 예비역,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로 우수 인적자원을 충원함으로써 국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먼저, 2009년까지 충원 대상인력의 20% 이상을 5급 공채 출신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민기반 확대로 인해 현역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박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충원을 통해 국방부 민간전문인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표3-8】 국방부 민간전문인력 충원실적 (2005~2007)

구 분	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인원(명)	46	5	8	26	4	3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직위 중 민간에 개방된 개방형 직위에는 국방전문가 충원을 위하여 예비역 고위 장교, 민간 우수인력 등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공모직위에는 국방업무 유관부

처와 인사교류 및 직위공모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계부처와 정책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부의 인적자원 충원 이외에 국방부에 이미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단일 위원회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면접평가제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국방인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우수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통해 국방운영 및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적자원 폭 넓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발전

국방부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 실천과제인 교육훈련체계 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7년 1월 1일 공무원교육훈련체계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의무학습시간 이수 외에도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방전문교육과정 중에서 1개 과정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상시학습체제 속에서 국방부 공무원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이후에는 국방부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3개 국방전문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전문교육과정 추가소요를 정밀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도표3-9】 국방대학교 신설 단기 국방전문교육과정(2006~2007)

과정명	안보정책과정	조직인력과정	정책/홍보과정
교육목표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분야 전문성 제고	국방조직/인력분야 전문성 제고	정책홍보분야 전문성 제고
과정운영	국방대학교 직무연수부		
교육기간/인원	2주/연 2회, 60명	2주/연 2회, 60명	1주/연3회, 90명
교육대상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현역		
시행시기	2006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또한 국방부는 성균관대학교와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고『국방핵심MBA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국장, 팀장 및 사무관 등 중견공무원들에게 민간의 현대적 경영지

식이론 습득과 국방정책관리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방경영전략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표3-10】 국방핵심MBA 교육과정 개요

교육대상	과정 운영기간	교육기간/시간	운영기관
국장급~사무관	'07.9.4~'08.5.29 (3개기수 구분)	3개월 / 야간 3시간	성균관대학교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교 직무연수부를 확대 개편하여 국방인재육성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부처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체계적인 보직관리

국방행정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무중심의 체계적 보직관리를 위하여 「경력개발관리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수립하여 2007년도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보직경로제 도입을 통하여 전문성의 강도에 따른 직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서기관 및 팀장의 직위를 2~3단계로 구분하여 난이도가 낮은 직위에서 높은 직위로 보직을 관리하고, 전문관 선발 확대를 통하여 장기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문민화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국방부는 민간관료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인력구조로 개편하는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통하여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이 확대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관료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면 중립성 및 균형적, 통합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어 정부정책과 국방정책의 원활한 연결·조정이 가능해 지며 육·해·공군 3군간 균형적인 군사력 건설을 통해 3군의 균형된 발전과 통합적 군사력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개혁2020의 수립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일련의 국방개혁 제도화는 문민화 추진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방개혁의 구체적 실천과정에서도 문민화가 변함없이 정착되는 한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문민화의 지속적 추진 및 발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국군통수권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2.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후보자의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군내에서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존경받는 인사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민군관계 정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국방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절차는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방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재임 중 확고한 지휘권 보장을 통한 소신 있는 지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 구조상 합참의장의 임명 대상인원이 극히 소수이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취지와는 다른 문제로 지휘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청문회의 비공개 운영 등 신중한 인사청문회 진행이 필요하다. 향후,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군 지휘관의 자질 및 도덕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대군 신뢰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3. 국방 민간인력(군무원) 활용 확대

우리 군은 국방업무의 전문성·다양성 요구에 비하여 민간인력 기여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인력의 비중은 미국·영국(32%), 독일·프랑스(22%) 및 일본(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비병력이 감축되므로 현역은 전투·작전 위주로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대·병력규모 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인력의 확대 및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 민간인력 활용 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력감축 기조 아래, 각 군 본부 등 상급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의 군인직위 가운데 민간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직위에 대하여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군 병력의 3.9% 수준인 2만 6천여 명의 군무원 정원을 2020년까지 군 병력의 6% 수준인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병행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개방직·계약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4. 우수한 군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군구조개편과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우리 군이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첨단장비 위주로 정예화 되면서 병력소요가 줄어들어, 2011년 이후에는 많은 잉여자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병역의무에 대한 불형평성 문제가 커지게 됨으로써 병역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미래 국군의 정예화, 과학화를 대비하여 첨단장비와 신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전문 기술분야 인력획득이 절실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술 특기병 위주의 숙련병 인력 구조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유급지원병제는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연장복무하게 하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 시 확보가 곤란한 분대장・레이다병・정비병 등 전투/기술 숙련인력(유형1)과 첨단전력 위주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한 차기전차・한국형구축함(KDX)・유도탄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유형2)으로 나누며 전자의 경우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 연장복무하고, 후자의 경우는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월120만원 수준으로 연장복무기간에만 지급하며, 퇴직금을 합하여 약1,5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기간에 월60만원의 지원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급지원병의 계급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일반병과 동일한 계급으로 복무하지만,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을 부여하여 간부에 준한 대우를 받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도입규모는 '유형1'이 1만명, '유형2'가 3만명이며, '08년 2,000명 시험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2,000~3,000명씩 늘려 '20년부터는 총 4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병 의무복무만료 후 연장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공포('07.7.27)하였고,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인사관리・보수 등에 관해 관련법령을 정비 중이며, '08~'12국방중기계획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

5.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 등 양성평등 의식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시책으로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군 인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군 특성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여군인력 확대 수준을 2020년까지 장교는 2.7%에서 7%, 부사관은 1.7%에서 5%로 확대하도록 결정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군 활용직위 분석을 통하여 각 군의 연도별·병과별 활용 수준을 결정하였다. 전투병과는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상황을 고려하여 10%내의 제한적 확대를 하고, 기술병과는 각 군의 병과별 특성을 고려 20%내의 부분 확대를 하며, 행정병과는 각 군별 35% 수준내에서 최대한 여군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각 군별 특성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여군활용 수준을 결정하였다.

6. 국방획득업무 통합 및 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06년 기준 22조 5,129억 원의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 및 전력유지 등의 전력투자비는 7조 4,994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33.3%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수차례의 국방획득제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및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첫째,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주요의사결정이 군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과도한 보안기준 적용으로 투명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둘째, 조직이 국방부, 각 군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었다. 셋째,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현역군인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외부 민간 전문가의 활용도 미흡하였다. 넷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였고, 획득사업 관련 기초자료가 통합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평가가 제한

되었다. 다섯째, 방산업체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경영혁신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국외 도입위주의 전력증강 정책으로 국가 방위산업 및 R&D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주요의사결정이 국방부·합참·각 군 등 군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엄격한 보안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추진과정 및 결과의 공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투명성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한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국방부,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유사업무 수행조직의 기능상 중복이 발생하였으며, 책임소재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현역군인은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어려웠다. 공무원은 실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달본부, 각 군 사업단에서의 경험축적이 제한되었고, 현역군인은 야전과의 순환보직으로 장기적인 전문성의 축적이 제한되었으며, 외부 민간전문가의 활용도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참여의 요구가 강화된 가운데 국방획득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논의는 2003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획득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서 군운영 합리화 차원에서 획득제도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04년 1월 획득제도개선방향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립하였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먼저 국방부, 각 군 및 획득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3주간 집중적인 현지실사(2004년 4월 7일~4월 30일)를 실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관련기관 협의 및 당·정·청 협의회(2004년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2004년 9월 9일), 공청회(2004년 9월 17일, 12월 7일)와 수차례의 국방획득제도개선

위원회 및 현안조정소위원회 회의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보고·진단(2005년 1월 10일)을 거쳐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으로서 “청” 신설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월 19일 대통령 보고회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신설청의 명칭을 방위사업청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와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증·개편하여 확정된 제도개선방안의 구체화 및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공청회 및 당·정 간담회, 방산업체 간담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년 7월 22일)하여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획득절차 및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방위사업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다. 방위사업청 신설

2005년 4월 임시국회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음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에서 획득분야 정책업무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로 2005년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야당은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핵심업무인 획득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장관 예하에 차관조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방위사업청 신설문제를 논의하였지만, 여·야 표결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제외한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방위사업청 신설은 무산될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끈질긴 이해·설득 노력에 의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발의안이 2005년 6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22일 법률 제 7613호로 공포되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제반 작업과 국방획득제도 개선의 지속을 위하여 대통령훈령으로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2005년 7월 25일 제정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개청준비단을 발족하여 방위사업청 조직 설계, 인원 선발 및 방위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의 국회통과가 필수적이었다.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그럴 경우 종전에 군무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던 조달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또한 기존 계약사업의 물자 인수, 대금 지불의 집행근거가 미비하여 혼란이 예상되었으며, 신규 사업추진 절차 마련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방위사업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최대의 현안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획득기능의 통합이라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기본 제도개혁 방향 및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합참 및 각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국회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 200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드디어 2006년 1월 1일자로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게 되었다.

방위사업법 국회통과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방위사업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이 함께 지연되었으며, 개청 초기에 업무 인수, 인력 충원, 각종 규정・절차 및 제도 정립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 획득과 자주국방 건설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오랜 숙원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방획득업무 추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개청 추진간 갈등관리

방위사업청 개청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각군은 획득분야 조직 변경에 반대하였으며, 국방조달본부 군무원의 신분전환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획득 정책의 핵심인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중 어디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획득제도개선단 간 이견이 있었으며, 군 획득인력의 인사관리 방안과 획득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 등을 극복하고 제도개혁을 관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게 될 현역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부여하는 문제였다. 획득제도개선단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자군 이기주의적 업무행태가 지속되어 제도개선의 근본 취지인 획득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청장에게 군인에 대해 교육, 보직, 진급추천, 진급공석 등 일정 범위의 인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초에는 각군 및 합참의 획득 분야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

해서도 방위사업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필요성 검토 후 방위사업청 근무인원에 대한 인사권으로 한정하였다. 획득 병과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군인사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안을 수정하였다. 청장의 군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사법에 명시하도록 추진하였으며, 반대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획득비리는 시스템과 사람(인사)의 문제하는 현실태를 인식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지휘권을 방위사업청장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이견을 제기하여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국과연과 국방부는 전략비익 무기체계 개발, 국방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장관 보좌를 이유로 지휘권의 방위사업청 이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획득제도개선단은 국과연을 업무 통제하던 국방부 연구개발관실이 방위사업청에 통합되므로 방위사업청이 국과연을 직접 통제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안)에 명시된 정책적 통제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획득정책과 관련하여 국방중기계획 수립 주체에 관한 갈등도 있었다. 국방부는 전력투자 분야 중기계획 수립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핵심 정책기능이므로 국방부가 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집행 업무를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획득제도개선단은 방위사업청이 정부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중기계획을 국방부에서 수립할 경우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내부조직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획득제도개선단의 요구는 소요제기를 제외한 모든 획득 분야 업무를 방위사업청이 관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안)에는 방위사업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획득정책 수립을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여 중기계획(안)을 방위사업청이 작성하고, 중기계획 수립은 국방부가 담당하도록 조정되었다.

각종 반대의견들을 무마하고 설득하기 위해 국방획득제도개선단(단장 : 이용철 전 법무비서관, 부단장 : 이선희 예비역 공군준장)은 국방부와 각군,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 노력하였다. 공청회 등 회의시 많은 현역군인들과 의견충돌이 있었을 때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 파견근무 중이던 소수 장교들이 기존 현역군인을 중심으로

한 획득체제가 각종 비리의혹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이를 시정 및 개선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개혁추진에 앞장섰다.

방위사업청 개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2005년 5월 획득분야 비전문가이고 코드인사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온 이용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사표를 내고 방위사업법과 군인사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던 때였다. 획득제도개선단은 단장 부재를 틈타 반개혁인사들이 개혁추진에 저항하고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획득T/F가 각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개혁추진에 반대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무엇보다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의 개혁 추진을 돕기 위해 구성된 '방위사업청개청지원T/F'에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국방부 및 각군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극복하고 개혁을 관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개청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방위사업청 개청을 적극 후원하였다.

마. 국방획득제도개선 주요내용

1)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획득업무의 적법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지속 되었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사항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는 「방위사업법」을 2006년 1월 2월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2006년 2월 8일)과 동법 시행규칙(2006년 4월 24일)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담당자들의 자의적인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사업에 책임을 지도록 정책실명제와 청렴서약을 하였으며,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 관련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투명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감시와 평가 및 시정 요구 등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고, 사업추진단계별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감시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업관리부서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하는 클리닉 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사업 착수단계부터 적법성을 확인하는 사전법률검토제도 시행을 통해 분쟁 발생률을 감소시켰다(2005년 22건 → 2006년 16건).

2)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성 제고

국방획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분산된 획득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된 조직·인력을 통합·단순화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국방부장관의 정책수립과 지휘감독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정책조정 및 계획수립 기능을 두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 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개념과 무기체계별 긴요도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범위 내에서 획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안정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간 재원배분 협의를 정례화하며 전력투자비, 경상운영비,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사업관리 기능이 국방부, 각 군 등으로 분산·중복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책임 한계가 모호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예산, 협상·계약, 품질보증, 종합군수지원 기능 조직을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편성하여 소요결정 이후부터 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 책임자의 관장 하에 책임 운영하는 “통합사업관리(IPT, Integrated Project Team)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추진단계에 선행연구단계를 신설하여 사전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종전의 전력기능별 예산구조에서 방위사업청 조직과 연계된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로 개선하였다. 사업별 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예산관리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예산과목구조를 변경하였고, 과학적·체계적 획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무기체계 사업의 성능·비용·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획득관련 조직의 통·폐합 및 획득관리시스템 개선으로 2006년도의 경우 개청초기 업무 인수, 인력 확보, 각종 규정·절차·제도 정립 등으로 사업 착수가 3개월 정도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실적이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도 각각 전년대비 0.2%씩 감소하였다. 또한 조달행정 소요기간은 2005년도 평균 228일에서 2006년도에는 186일로 단축되었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력구조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역군인 및 공무원 중심의 인력구조로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활용이 제한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상 장기간(7~10년)이 소요되는 업무를 단기간(2~3년)에 순환 보직되는 인력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 축적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를 획득전문 인력으로 우선 충원하고 장기 보직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인원 선발은 신분별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역량 발휘를 위해 공무원과 현역군인 및 각 군간 균형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역군인의 경우 안정된 인력구조 유지를 위해 임관연도별 적정인원을 유지토록 하였다.

획득전문 인력에 의한 방위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후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보직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청렴의무 위반자 등은 선발 및 주요보직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폭넓은 인재Pool 활용을 위해 다른 부처의 우수 공무원 영입과 통상직, 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4급 이상 주요직위는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잠재역량과 업무경력, 전문성이 우수한 인력을 영입토록 하였다.

【도표 3-11】 직위공모 실시 대상 (4급 이상)

구 분	국 장 급 (10)			과 장 급 (54)			
충원방법	개방형	내부공모	정부부처 직위공모	내부공모	정부부처 직위공모	계약직	특별채용
직위 수	3	5	2	32	8	7	7

국방대학교에 국방사업관리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획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위탁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차원의 인력관리와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하여 인사관리 로드맵과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국방획득전문 교육기관(교육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4)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위산업은 경쟁력 제고와 수출 촉진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후발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9년 1월 일괄 폐지하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동안 절차 재정립과 기존 방산업체의 경영 개선 등 경쟁체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신규사업 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기간 이미 투자된 인원 및 시설·장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며 제도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부문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한정된 방위산업 수요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정부차원의 방산수출지원 및 시장개척활동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간 협력협정 체결과 공동위원회 개최, 방산전시회 참가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KOTRA와 방산수출 관련 업무지원협정을 체결('06.4)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반을 확보하였다.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산자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수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네트워크 보강을 위해 주요 수출대상국가에 방산수출협력관 파견을 추진 중이다.

방산수출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파키스탄('06.5), 우크라이나('06.12)와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산협력협정 체결 국가를 24개국으로 확대하였다.

5)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 국방연구개발 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체화하고 미래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 및 국방핵심기술기획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개별체계를 대상으로 소요시기, 성능, 기술수준, 발전추세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무기체계별 연구개발의 경우 필요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각 핵심기술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핵심기술의 활용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2005년 이후 매년 15% 이상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년 18%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그간 취약했던 핵심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투자 중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을 핵심기술 개발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시키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방산업체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분석·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2007년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체·학계·연구소 등 민간분야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대형 민·군 겸용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와의 공통과제를 식별·추진하고 있다. 개발된 민·군 겸용기술의 군 소요와의 연계를 통한 실용화 증진을 위하여 '국방핵심기술기획서'의 체계-기술 로드맵에 민·군 겸용 기술을 반영하였다.

대학의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 개발에 접목하고 우수 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대학에 국방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국방S/W설계특화연구센터 등 7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신규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산업체·학계·연구소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 비율을 확대시킴으로써 2011년에는 최소 50%이상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 사용자 중심의 군수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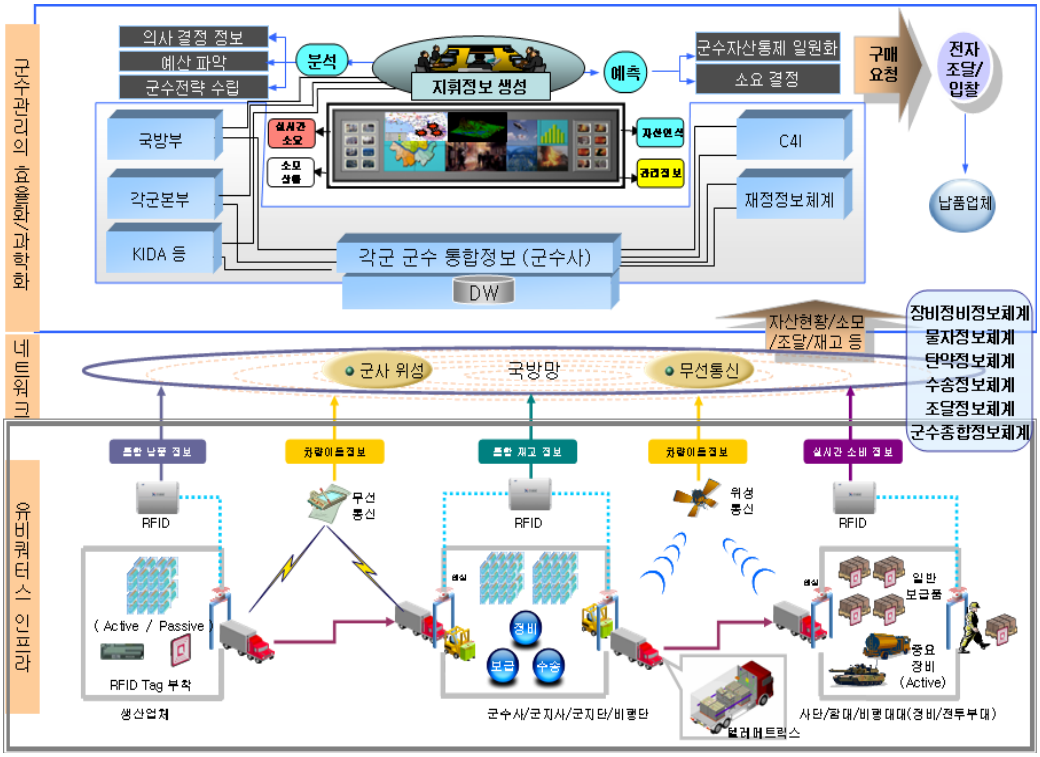
무기체계의 고도정밀화, 다양화에 따라 운영 유지비의 증가 등 국방 자원관리를 위한 환경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분야에 발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방군수분야에서 주목할 세 가지 큰 환경적 변화가 있어왔다. 첫째, 미래전 양상에 따른 선진화된 군수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둘째, 최신의 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군수분야 통합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셋째, 군수지원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객관적 평가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수분야의 개혁방향은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자산 가시화 및 효과적인 작전지원을 위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특혜 시비 및 품질저하의 요인이 되는 국방조달 방법의 혁신,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가. 웹 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군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방탄약정보체계, 국방물자정보체계, 조달정보체계 등 대부분 정보체계들이 장기간 운용으로 노후화되고 체계 간 연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군수기능별 단위정보체계는 단일 컴퓨터상에서 종합군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편성부대의 자료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표 3-12】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개념도



따라서 전군의 군수자원을 가시화하고 군수지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단계로 2009년까지 장비정비·수송 등의 군수기능별 정보체계를 신규개발하고 노후화된 정보체계 성능을 개선하며, 2단계로 2014년까지 물자·탄약·장비정비를 통합하여 단일의 웹 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군수 내·외부 체계 간 연동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국방조달의 경쟁 확대

국방조달은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특혜시비·품질저하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 및 업체들로부터도 형평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표 3-13】 '05년 수의계약 현황

합 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기 타 수 의 계 약				
		계	보훈단체	사회복지법인	특별법인	농공단지
133건	57건	76건	35건	9건	27건	5건
3,130억원	1,448억	1,682억	648억	139억	828억	67억

현재의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 품질보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단체 수의계약품목과 기타 수의계약품목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경쟁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단체 수의계약품목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경쟁으로 전환한다. 2006년도에는 시범품목(피복, 식품류)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체간 경쟁계약을 실시하며, 2007년부터는 전면적 확대를 추진한다. 기타 수의계약품목은 국방부 자체계획에 의거 관련단체 및 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 2020년간 연차별·점진적 경쟁으로 전환한다.

다.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행 군수지원부대에서 사용 중인 재고보충율, 소모삭제율 등은 사용자(전투부대) 보다는 공급자(군수지원부대) 위주의 군수활동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군수활동의 포괄적 결과인 군수준비태세 향상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공급자 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용자를 위한 공급자의 제반 군수활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수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군수준비태세 및 사용자(전투부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국방군수자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의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2005~2006년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007~2008년간 각 군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지표를 시험적용하며 2009년 이후에 전 군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표 3-14】 사용자 중심의 군수성과지표 현황

기 능	성 과 지 표
공 통	사용자대기시간(CWT)
소 요	수요예측 정확도
조 달	조달소요기간
보 급	보급단계별 소요 기간
	적정 재고수준
	급식 만족도
	피복 만족도
정 비	장비 가동율
	정비소요시간(RCT)

국방부는 군수분야 국방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군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혁적 노력이 부분적 개선을 뛰어넘어 총체적 군수지원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각 군별 특성과 여건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조정 및 통합하여 3군 공통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달분야에서는 관련 단체 및 업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정보화는 국방발전과 개혁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서 지휘통제와 전장관리의 자동화를 통해 군사력의 질적 변환을 도모하고, 국방자원의 디지털화와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국방관리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정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디지털화와 전자적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국방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추진 시스템과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화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현재는 체계적인 소요관리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보체계 소요관리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군별로 상이한 데이터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호환성과 체계

통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전문 시험평가 및 인증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 소요의 불명확성 해소,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사적 아키텍처 개발은 2006년 국방부에 대한 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를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정보기술의 청사진이 될 전사적 아키텍처는 범정부 아키텍처와 연계가 가능하고 각 군과 관련 조직의 아키텍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국방 정보통신망체계 구축

국방 정보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최초 2006부터 2015년까지 계획된 기간을 2008년까지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 내용은 노후한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또한 추가로 국방망 사업을 통해 WAN 증속 및 LAN 구축을 병행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인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를 군 전술종합통신망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

국방정보체계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군사작전 수행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는 정보보호체계(보안관제체계, 바이러스방역체계) 성능을 개선하고 컴퓨터 침해사고대응반(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을 확대 편성 중에 있다. 또한, 국방 정보통신 기반보호규정을 제·개정하고 정보보호 발전계획을 수립('06.3월) 하였으며 민·관·군 정보보호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전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추진목표는 정보보호기반을 완성하고 다수준·다계층 정보보호 역량을 확보하며 선진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라. 국방정보화 기능·조직 발전

국방정보화 업무 발전 및 기능 정립을 위해 작전 및 정보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정보화 발전연구단을 운영하여 국방정보화 문제점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국방정보화 발전대책으로 9대 발전과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2006년 6월에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정보화발전 연구단에서 제시한 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각 군의 추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안)을 작성 중에 있다.

국방정보화 추진체제의 종합적 개선을 위해 향후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을 지원하는 체계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화 도메인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2006년 11월에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화 전 영역에 대해 일원화된 정책 및 조정통제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체계와 연계된 획득이 가능토록 정보화획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2006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 조직 통·폐합의 일환으로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1단계('04년~'07년)로 226개소를 61개소로 통합하는데 약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단계('08년~'12년)에는 4개소로 최종 통합하는 데 약 1,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운영개념 및 기능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체계 통합아키텍처를 2006~2008년에 설계하여 2009년에 통합하고, 국방정보체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국방 데이터 공유 환경을 2007년까지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체계의 일관성 있는 구축 및 상호 연동·통합이 가능한 통합성이 보장되는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을 보장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통신망체계 및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 사회 IT 발전추세를 선도적으로 수용하고 미래 국방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보화추진조직 발전, 군과 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9. 전투근무지원 분야 아웃소싱 확대

21세기 새로운 국방환경 아래에서 국제적으로 전략 및 전술, 군사력 증강 분야를 제외한 비전투부문과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쟁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유지한 가운데 경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y)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행정기관에서도 45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비병력의 규모 조정과도 연계하고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현재 군은 시설물관리·청소·조경 등 일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투근무지원 분야 전체에서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군은 전투·작전업무에 집중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 중 민간의 비교우위 분야와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기존 조직을 경량화하여 병력 집약적 군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행정차량정비, 복지시설 운영 등 전투·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이 쉬운 분야에서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2007년부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대상기능에 대한 운영실적,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에 대한 의욕 등 객관적인 업체선정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위탁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민간위탁 업무내용, 비용의 정산방법과 지불조건, 계약기간의 개시 및 종료 시기,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화하며, 해지의 사전 통지 의무조항이나 가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위탁업체와 전·평시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며 비상대비훈련 계획 수립과 훈련·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업체의 파업 등 서비스 단절에 대비, 관련법령 정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보안유지와 관련해서는 군사정보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나. 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전투근무지원 분야 중에서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

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개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한 후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정비창, 보급창, 전산소, 인쇄창, 시설분야, 후방병원, 복지단 등의 부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집행적·사업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위해 대상부대에 대한 현지 확인과 관련 분야 종합토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현지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제도의 완비성을 확보하고, 대상부대 선정기준 정립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대상부대 선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부대장 채용, 부대장의 인사·재정상 자율권의 범위, 성과계약서 체결과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 운영심의회·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할 것이다

2007년도에 3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대상 부대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평가지표를 계량화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과 성과향상 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전·평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보다 빠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0.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군 의료서비스를 국군장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국군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군 작전 및 의료환경 변화에 적합한 의무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무지휘조직체계를 단일화하고, 의무지원을 의무작전과 의무행정으로 전문화하여 운영하며, 군진의학조직체계도 재정립하여 군 특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가. 수요자 중심의 의무지원능력 보강

아플 때 적시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병 개개인에 대한 진료기본권 보장 및 접근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소속부대 지휘관의 진료보장을 의무화하고 군의관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 복무 중 건강검진 미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역전 5~6개월 이내의 병사를 대상으로 간기능 검사 등 20여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 소견자는 군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평가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우수 의료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군의인력의 충원방법을 다원화하고, 군의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국·공립병원의 일정수준까지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장기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유자격 전문 의료지원인력 확보로 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MRI, CT 등 최신 의무장비와 물자를 보강하여 환자의 조기진단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야전 의무지원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단급 의무대를 군병원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차등 보강하고, 야전의무 시설·장비의 모듈화·표준화를 추진하며, 환자의 후송능력 증대를 위하여 항공의무후송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며, 진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방사단과 전방병원 위주로 외래환자 전용버스를 보급하고, 개선형 구급차를 조기 배치하고 있다.

또한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의무 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병된 질병은 군 병원에서 완치 가능토록 질병관리체계를 개선하며, 민간병원과 협진체계를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군인가족 및 예비역 진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군수도병원을 3차 진료기관의 진료수준으로 향상시켜 군 최고 병원으로 육성하고, 향후 가칭「국방의료원」이 건립되면 임무를 전환하며 국방의료원 설립시 국방의과대학원 운영을 추진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진료능력을 상시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군 특수 의학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군진의학 연구 및 예방의무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해외파병지역의 풍토병, 화생방, 해양잠수의학, 항공우주의학 등 특성화 분야의 집중육성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체

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나. 군 의무조직체계 개선

전·평시 효율적인 의무지원체계 확보와 군 작전 및 의료환경 변화에 적합한 의무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군 의무지휘조직체계 단일화는 의무인력, 장비, 시설 등 의무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보장과 의무군수지원부대 통합, 그리고 1, 2차 의무부대 능력 보강 및 군병원 효율화를 우선 시행 후 추진하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육·해·공군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를 통합, 시범운용 후에 의무부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군 병원의 운영체계도 개선해서 병원별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문화 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급성기 치료시설과 정양환자 치료시설을 마련하여 급성기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환자관리 및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11. 군 사법제도 개선

현재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조직, 수사 및 군사재판 절차의 혼재로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여 장병 기본권 보장과 군내 부패 예방 및 척결 등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시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 사법제도 개혁 추진 경과를 알아보면, 먼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 사법 업무의 독립성이 조화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정립하였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5년 1월 12일 대통령에게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건의하였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을, 7월 18일 '군사법원 및 군검찰 중립방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국방부는 군 내·외 의견수렴과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법률안을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혁방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군 검찰의 중립성 강화, 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장, 군사법 경찰에 대한 사

법적 통제 강화,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제도 도입 및 징계영창제도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군사재판도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기강과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제고된 군 사법 제도 운영을 확립함에 목적이 있다.

12. 국민 편익증진 대책 발전

우리 군은 평상시 기본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항상 국민과 함께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장·사격장 소음,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서, 군 구조 개편 및 배치 조정 시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민원방지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국민 편익증진 대책을 발전시키고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민원해소를 위한 군 운영여건 개선

국방부는 그 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민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군용시설 이전 요구,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수립 요구,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요구 등 재원을 수반하는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민원해소는 물론 군 운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0년까지 군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군사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력배치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군사시설의 통합과 집약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발전시켜 군 부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활용해야 할 시설과 유휴시설을 판단해야 하며, 시설 재배치는 비교

적 이전 소요가 없는 기존의 넓은 부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대한 산재된 군소부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유휴시설은 매각하여 이전소요가 발생하는 부대의 이전비용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재배치계획(Master Plan)이 수립되면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며, 군사시설의 조정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군부대 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여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군 주둔지나 훈련장에서 유출되는 오·폐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다. 우리 군은 환경보전을 위해 1995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환경전담부서(과)를 설치하였으며, 군부대 발생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2002년부터는 매년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질환경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둔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오·폐수처리시설을 매년 확보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2,367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27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각 군에서 설치대상부대를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질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발생 오수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용량 200톤/일 이상의 대형오수처리시설 111개소를 민간업체에 기술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시설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나. 「군 소음 대책 특별법」 제정 추진

군에서는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군 소음대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은 민・군 겸용 공항을 포함하여 45개의 비행장과 1,400여개소의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장의 대부분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간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비행장 주변지역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민・군 겸용 공항이 민간 항공사에 개방되면서 민간 항공기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욕구가 증가함으로써,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격장은 대도시와 떨어져 있지만 사격소음, 항공기 소음(공대지 사격장의 경우), 사격 중 안전거리 확보 문제 등 비행장에 버금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 군용 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및 사격장 소음문제를 개별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군용 항공기, 사격장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이 소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비해 지역개발과 세수 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군은 가능한 한 소음을 경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정비소음저감을 위해 방음정비고(Hush House) 13개소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일과시간 비행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야간비행과 공휴일 비행을 규제하는 등 훈련시간을 축소하는 한편, 비행경로와 비행 고도조정, 사격횟수, 야간사격 시간 조정 등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 소송제기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 훈련여건을 보장하며, 신뢰받는 군대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가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정 추진 중인「소음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 구역을 소음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지정고시 하여 구역별로 건축을 제한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방음창 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주민복지시설, 공공시설사업 지원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이주대책 실시, 방음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피해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군사시설 Master Plan을 2007년까지 수립하고,「국방 군사시설 기본법」을 2009년까지 정비하여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등 91개의 환경관련법과 국방관련 법규와 훈련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의 훈련,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 오폐수 처리시설을 강화하여 군부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비행장・사격장 주변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3. 예비전력 정예화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선진 각국은 국방재원과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비전력은 긴요전력 위주로 운용하고, 예비전력 비중을 증대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비전력 운용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휴전선으로부터 수도권까지 짧은 종심을 고려할 때 전쟁 초기 신속한 동원능력이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동원관련 법령이 전·평시로 이원화 되어 있고, 예비군 관리체제도 미흡하며 예비군의 훈련여건이 열악하여 동원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한된 국방재원과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잠재역량을 전력화하기 위한 동원체제와 적정규모의 예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상비전력에 상응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동원관련 법령 정비

현재 동원관련 법령이 이원화 되어 있고 동원시기가 상이하여 평시 인력 및 물자동원에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위기상황 발생시 예비군 운용 및 병력동원은 가능하나 인력과 물자동원은 제한된다는 점이다. 전시대비는 물론, 테러, 재해·재난 등에도 다양한 사태 발생시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동원관련법령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원관련법」을 정비하여 국가위기상황에 유연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테러·재해·재난사태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필요한 부대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 예비군부대 편성 및 관리체제 발전

우리 군은 대규모 예비군을 유지하고, 자원관리 위주의 예비군부대 편성 및 운용으로 전투력 발휘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부대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향방물자 부족으로 효율적인 향방작전도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규모를 2020년까지 150여만명 내외로 감축하면서 효율적인 향방

작전을 위한 부대편성을 발전시키고 운용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역수준의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여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으로 육성하고, 민·관·군 통합작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된 예비군 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 동원의 신속성과 실효성 보장

사회 교통망, 첨단기술 발달 등 사회 환경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동원계획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도권 동원병력을 신속히 소집하여 전방이동이 용이하도록 동원지정체제와 집결지를 조정하고, 전국단위에 산재된 동원병력을 효율적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철도, 버스노선을 활용한 수송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의 풍부한 민수용 물자와 민간업체에 대한 활용체제를 발전시켜 전시 즉각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 동원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동원센터를 운영하여 동원자원의 집행과 관리를 하고, 행정관서의 병력동원 집행체제를 보완하여 동원소집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대전 추세와 작전계획에 부합된 동원단계 및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라. 예비군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예비군의 개인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예비군훈련 관리부대의 훈련전담 여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군훈련은 신분별, 연차별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토사단 예하의 대대단위에서 예비군훈련과 훈련장을 담당하다보니 훈련장 관리여건 제한, 비표준훈련장 이용으로 성과달성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체제를 단순화하고, 훈련연차를 조정하면서 예비군임무에 따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위주훈련을 위하여 예비군 자원수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고려하여 현대화·과학화된 통합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여 연중 운용하면서 훈련일정 및 장소 등은 예비군이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개인수준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보상비는 훈련경비와 수당을 현실화 하여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증가할 계획이다

제2절 작지만 강한 군대

1. 군 구조 개편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재원 하에서 첨단전력 보다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그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전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전략과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되도록 전력은 첨단화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예화 된 군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과거 군구조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의지를 갖고 부분적인 구조변혁에 집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안정된 국방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술위주 질적 첨단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지휘·부대구조

합참은 현 합동군 체제하에서 합동성이 강화되고,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제가 보강될 것이다. 정보본부의 군사정보 수집과 생산, 운용기능이 강화되고 작전본부의 합동작전 계획 수립과 수행체계가 보강될 것이다.

각군 본부는 고유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전투지원, 교육훈련 및 동원 등 군정과 관련된 임무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방부 및 합참의 기능과 연계하여 유사기능 및 부서를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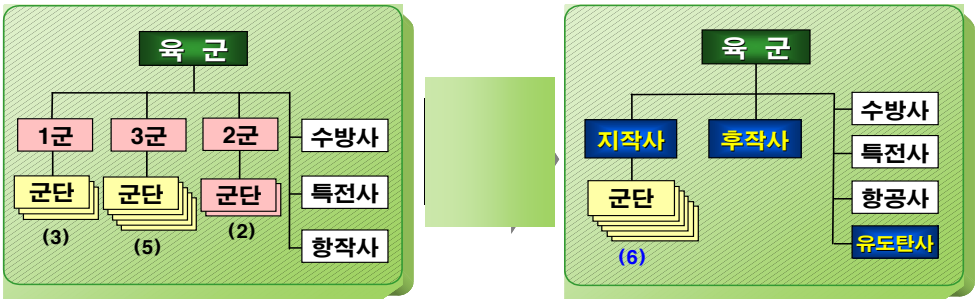
또한, 부대수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육군의 경우에는 2군사령부는 2개 군단을 해체하고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며, 해군은 함대사 지휘체제 단축을 위해 전투전단을 해체하고, 공군은 비행단의 작전지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행전단을 해체하는 등 지휘계선을 단축할 예정이다.

육군은 대규모 병력과 다양한 부대구조를 유지하여 운용유지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지휘통제체계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다단계 지휘구조를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군은 병력 17만 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기동과 타격력을 보강하여 전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생존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세기동전 수행이 가능한

작전적・전술적 유연성을 보유한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도표3-15】 목표년도 육군 부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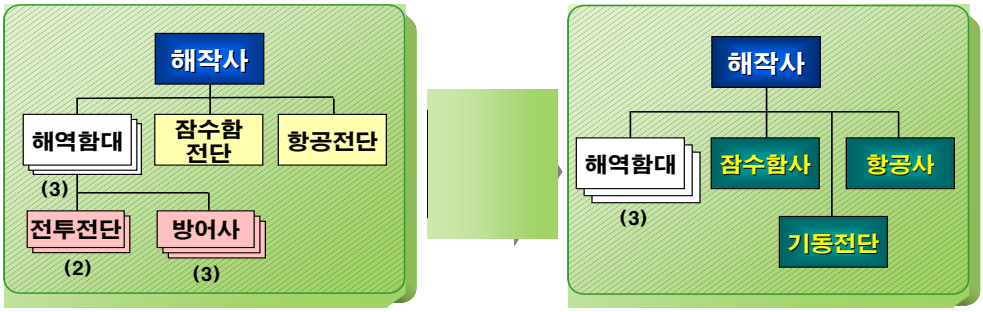
부대구조는 중간계층이 단축되고 부대 수가 축소되는 반면에 단위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다. 즉, 현재의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47개 사단, 3개 기능사령부 체제에서 2개의 작전사령부, 6개의 군단, 20여 개의 사단, 그리고 4개의 기능사령부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군단 및 사단의 경우 감시, 결심, 타격 및 기동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고, 독자적 전투근무지원 기능의 편성으로 작전영역이 현재보다 약 4~7배로 확장되는 등 그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전방지역 군단에 GOP 경비를 위해 정보화 및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갖춘 경계 전담여단이 편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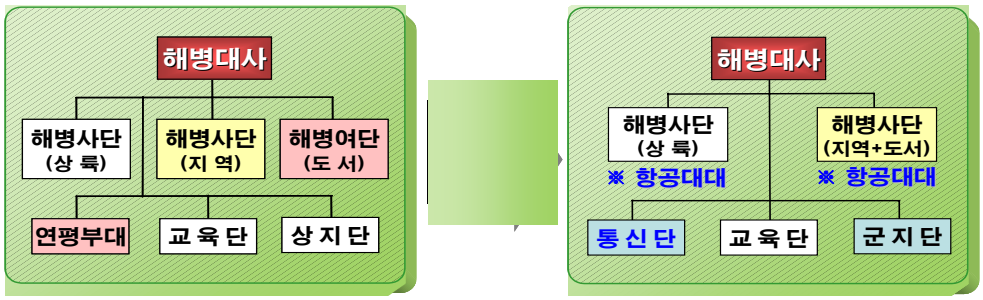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제에서, 중간 지휘제대인 5개의 전투전단과 방어사가 축소되어 3개 함대사, 잠수함사, 항공사 및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수상함 전력은 함정의 척 수는 줄게 되나 중・대형함(차기호위함, 이지스함 등)으로 보강되어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되고, 잠수함과 항공전력은 미래 전장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력이 보강되어 현재의 잠수함 전단과 항공전단이 각각 사령부급으로 개편될 것이다.

해병대는 도서 및 연안방어와 신속 대응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지 기동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도표3-16】 목표년도 해군 부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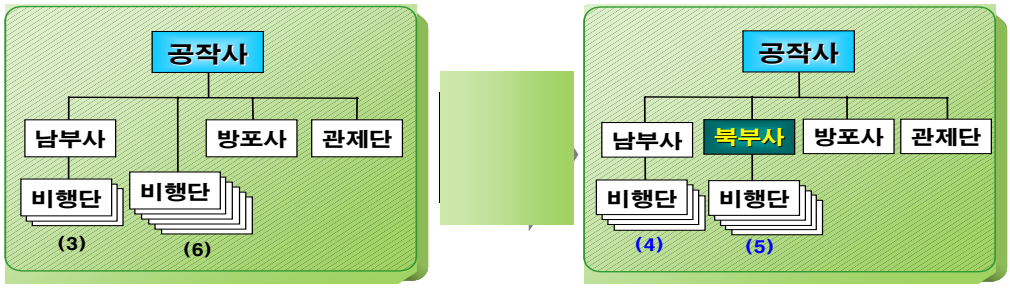


【도표3-17】 목표년도 해병대 부대구조



이를 위해 해병사단에 상륙 및 기동헬기를 갖춘 항공대대를 창설하는 등 현재의 대대급 상륙능력에서 미래에는 여단급 상륙작전능력을 보유한 융통성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도표3-18】 목표년도 공군 부대구조



공군은 High-Low Mix 체계가 최적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방위권 내 공중우세권 확보를 위해 북부전투사령부가 추가로 창설되어 2개 전투사령부, 방공포사령부, 방공관제단 체제로 개편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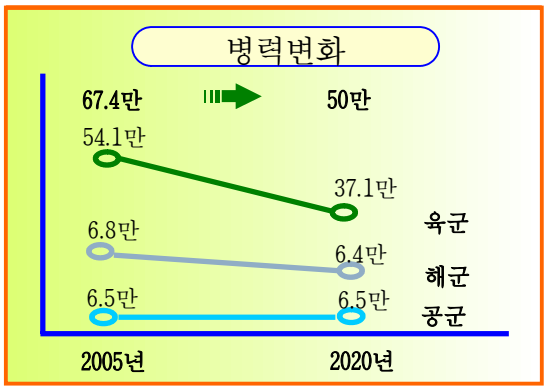
주요 전력은 F-15K 등과 같이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와 함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지원기도 확보될 것이다. 대공방어도 SAM-X, M-SAM 체제 등으로 보강되어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작전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동원전력의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동원훈련과 증·창설 준비는 향토사단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동원사단은 현재 평시 유지되고 있는 동원사단이 해체되고 전시 적정규모가 창설되어 운용될 것이다. 전시 전방부대에 대한 보충은 대대단위로 정밀 편성하여 부대보충을 시키는 개념으로 발전될 것이다. 예비군 규모는 상비병력 감축과 연동하여 축소, 정예화 하고 이를 위해 신분 및 주특기별 맞춤형 훈련관리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나. 병력구조

첨단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상비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군사전략 개념과 전장권역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전력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였다. 2005년 말 현재 68만여명 병력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며 상비병력은 전투임무 수행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즉 해·공군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은 18만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도표 3-16】 각군별 병력구조 변화



병 중심의 병력집약적 군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개편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력규모의 조정과 연계하여 군별·신분별 구성을 조정하여 최적화 하여야 한다. 병력감축에 따라 육군의 병력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해·공군의 비중은 확대된다. 병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간부의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각 군의 상비병력 40% 이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구조 개혁은 대북군사대비, 전력화기간, 군 구조 개혁 예산확보, 병력감축 및 부대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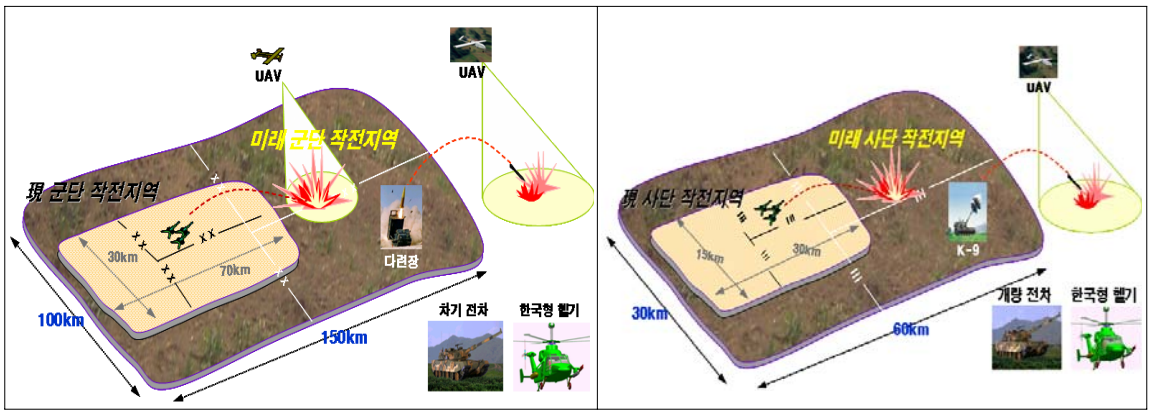
1단계는 군 구조 개편 착수 및 본격화단계로서 2010년까지 상부구조를 우선 개편하고 개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군 구조 개편의 중간목표를 달성하는 단계로서 2015년까지 상부구조 개편을 완료하고 하부구조 개편 및 배비조정을 시험하며,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3단계는 목표로 했던 군 구조를 완성하는 단계로서, 하부구조 전력화 및 개편, 그리고 부대배비 조정을 완료하여 2020년 목표연도에 군 구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2. 전력체계 발전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권역별 전력운영개념을 근거로 군구조와 연계하여 제대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구조로 설계하였다. 첨단화·과학화·정예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제대별 실시간 감시-결심-타격이 가능한 복합 전력체계 발전, 제대별 전력발휘의 완전성 및 균형성 보장, 군 구조 개편 시기를 고려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토록 능력을 확보하며 기동·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도표 3-17】 군단 및 사단의 능력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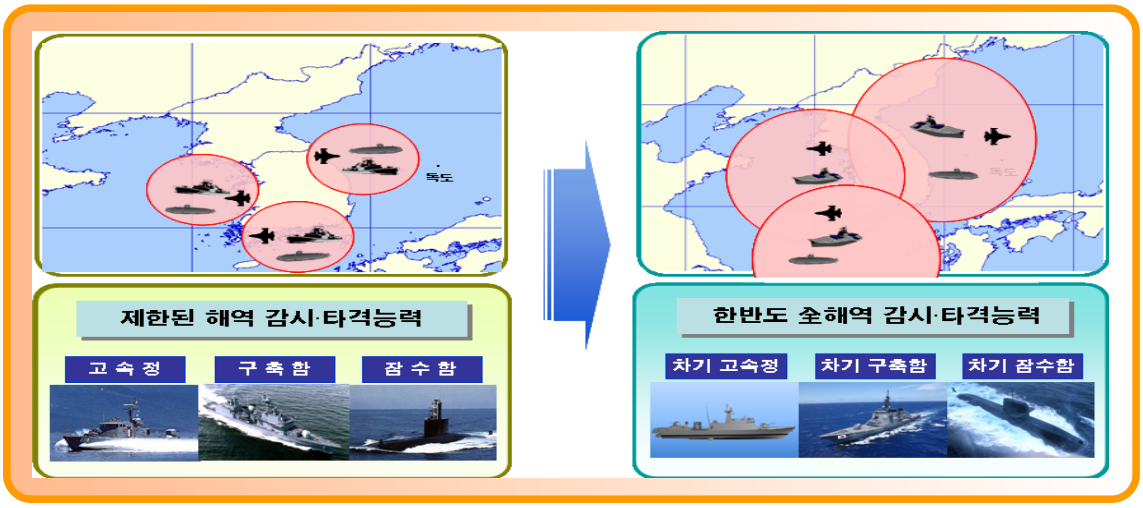
구 분	군 단		사 단	
	현 재	개 선	현 재	개 선
감시·정찰	UAV	차기군단 UAV	TOD	UAV
타 격	자주포	차기다련장	견인포	자주포, 차기다련장
기 동	전차(M48, K-1) 장갑차(K-200) 헬기(500MD, AH-1)	차기전차 차기보병전투장갑차 한국형 공격헬기	전차(M48) 도보 위주	K-1 개량전차 차륜형 장갑차



육군은 부대 수 감소에 따른 제대별 작전지역의 확장에 대비하고 공세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동력·타격력·생존성·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고도 UAV, 차기전차, 차기보병전투장갑차, 한국형 기동 및 공격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며, 군단급 및 사단급의 전력전환 계획 및 능력의 변화는【도표 3-17】과 같다.

해군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전략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동시에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하기 위하여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과 차기잠수함을 확보하고 항공전력을 보강하며 전력화가 완료시에는 한반도 전해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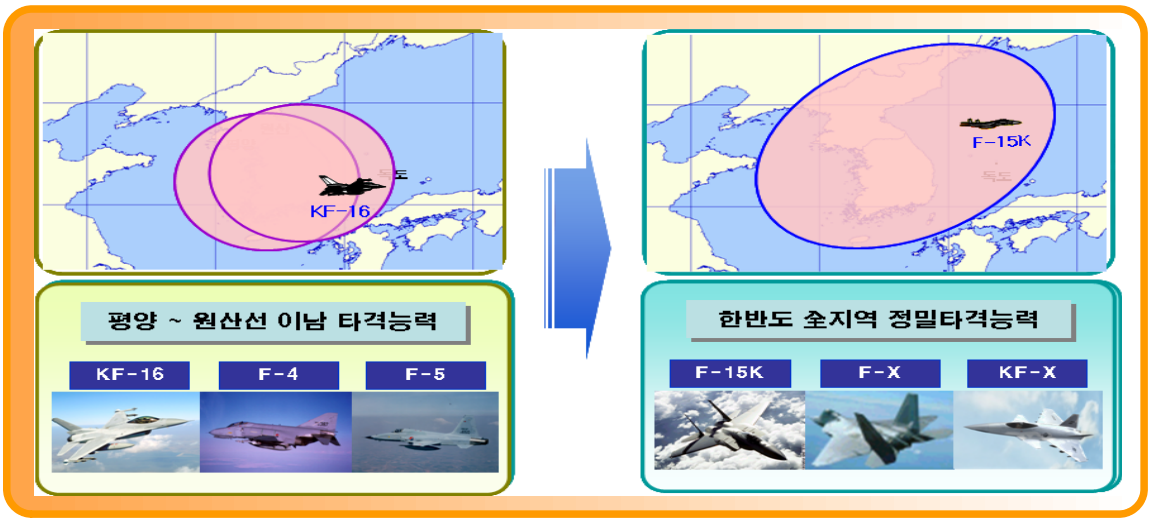
【도표3-18】해군의 능력변환



공군은 현대전의 중추전력으로서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능력을 구비하며,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지상 및 해상작전 수행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용 국방재원 및 협소한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전투기는 고성능 항공기와 저성능 항공기를 최적으로 혼합하여 420여대 규모로 정예화 할 계획이다.

전력화할 항공기는 F-15K, F-X, KF-X, A-50 경공격기,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으로 현재는 평양~원산선 이남으로 제한되는 타격능력이 2020년에는 한반도 전지역으로 확장된다.

【도표 3-19】 공군의 능력변환



개혁 관련 전력소요는 2005년과 2006년에 소요가 다수 결정되어 「'07~'11 중기계획」과 「'08~'12 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군 하부구조 및 편성의 확정 등 선행조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소요가 수정·보완되고 있다. 특히 지상전력 소요 중 일부가 미결정되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전력화가 추진되어 군구조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가 결정되고 및 중기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요는 여건과 환경의 변화, 예산의 가용성, 부대개편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 단위로 보완되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전력화시기와 소요량을 조절되게 된다.

국방개혁 완료시에는 정보·감시(ISR) 능력은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지휘·통제(C4I) 능력은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정밀타격(PGM) 능력은 개별 무기체계의 수량은 감소하나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로 전투효율 면에서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다.

3. 합참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균형편성

합참과 국직/합동부대의 3군간 균형 편성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여건이 불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합참, 국직/합동부대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합참의 편성 및 보직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참의 편성과 보직 시 몇 가지 제한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첫째,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둘째, 합동참모본부 직위는 각 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해·공군별로 구분하여 보직되어야 하는 필수직위와, 구분 없이 보직될 수 있는 공통직위로 지정하되, 공통직위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육·해·공군을 2:1:1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관급 장교의 공통직위는 군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직위에 동일한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나. 국직/합동부대 지휘관의 3군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의 편성비율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육·해·공군 비율을 3:1:1로 보직하며, 각 군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부대·기관의 장의 직위에 동일한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은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다. 국방부, 합참 및 연합부대 장교의 보직

국방부, 합참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직위 장교의 보직은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교를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 합참 및 연합부대 합동직위 지정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며, 각 군에서는 일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합동특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3절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IT에 의해 주도되는 개인주의적이며 창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성장한 장병들은 집단적·권위주의적 병영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괴리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군 복무를 의미가 없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고, 목적의식 없이 제대날짜만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요과제가 되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은 꿈과 목표가 있고,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과 충실한 복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어진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선진 병영문화 추진은 군이 강력한 전투력을 구축하여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다.

1. 병영문화 개선의 목표와 비전 설정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포괄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05.6.21,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2005년 7월 22일에 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MBC 정상모 논설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8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현역과 민간전문가, 예비역 장병 및 병사 부모로 구성된 45명의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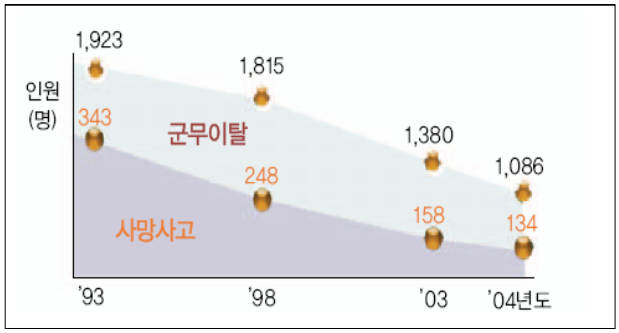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지원단은 다시 병영생활, 자기계발, 복무환경, 사고예방, 복무제도의 5가지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병영문화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부대방문 및 실태확인 35회,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 여론 수렴 1,124건, 정책간담회·세미나·전문가 및 관련자 초빙 토론회 34회. 기타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 열린 마음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병영문화의 현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첫째, 사회와 병영의 문화적 괴리감이 존재

하고 있었다. 인권보다는 임무가 우선되고, 권위주의가 일부 잔존하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의식 부조화 및 사회발전 속도 대비 병영 환경이 낙후하였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적극적인 군 개방 노력이 미흡하고, 군 복무간 목표의식이 없으며,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잘못된 관행과 대형 사고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도표 3-20】 10년간 군무이탈 및 사망사고



셋째,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의 추진이 미흡하였다. 의식변화보다는 외형적 제도의 보완에 치중하였고, 병영 내부의 문제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표 3-21】 '05년 군 관련 주요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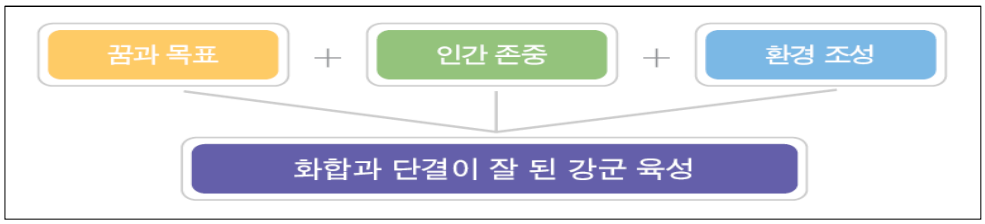
육군훈련소 화장실 관련 가혹행위	'05. 1. 20.
병영내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심각	'05. 6. 10.
GP 내무반에서 일병이 총기 난사	'05. 6. 19.
목적의식 없이 제대날짜만 기다리는 병영생활	'05. 6. 20.
30도 넘는 침상서 30명 '칼잠', 수용소 같은 내무반	'05. 6. 23.

위 도표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보고된 우리 병영문화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다. 앞에서 분석한 현상과 국민에게 투영된 병영문화를 토대로, 병영문화의 근본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의 병영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분석을 토대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선진 병영문화'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VISION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선진 병영문화'란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생활의 총체"를 말한다. 병영문화의 개선은 국방개혁의 목표와 국가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그리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선진병영문화의 패러다임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도표 3-22】 선진병영 문화의 패러다임



2.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가. 장병 가치관 확립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장병 가치관의 재확립이며, 먼저 군의 리더인 간부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간부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영관장교 이상 직무교육 시 의식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급 이하부대 간부들에 대한 상담학, 갈등관리기법 등을 실습/체험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간부의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병사를 기본인권을 보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병영저변의 실태를 파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공동체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2006년 외주용역)하여 병영생활과 연계된 체험학습 생활화로 장병 대상 민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전문연구센터(2006년 외주용역)를 설립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일부로서 군의 특성, 간부와 병간의 가치관 괴리 현상, 신세대 병사의 심리변화, 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가치에 대한 검증 등 지휘관들에게 병영생활에 관한 제반 행동과학적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건전한 군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발전시켜 참군인을 육성토록 추진할 것이다

나. 자기계발 여건 조성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영생활 중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우선 전 장병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사 8~10명당 1대 기준으로 인터넷 PC를 보급, 중(소)대단위로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설치하여 군 복무간 정보화 단절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은 또한 더불어 어학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정부의 청소년실업 해소특별법과 연계하여 군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10월까지 설치 공간이 가용한 부대에, 12월까지는 격오지 부대에 우선 설치하는 등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5만 여대의 인터넷 PC를 설치할 것이다. 특히 중·대대장 및 주임원사에게 사이버 상담방용 인터넷을 동시에 보급하여 인터넷상에서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자격증 과정 이수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군 e-러닝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과 연계하여 ‘군 e-러닝 학습콘텐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이버지식 정보방’ 구축과 연계하여(2006년 11월 완성)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어학, 취업, 전공, 대학진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군 교육훈련 학점 및 평가인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를 2006년 1월 25일 구성하여,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졸병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및 방송통신대 강좌 수강으로 학위를 취득토록 여건을 보장해 주며, 고졸미만 병사가 희망할 때는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도표 3-23】 e-러닝 시스템 구축

개인 자율시간을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대대급 생활관에는 병영시설 현대화 공사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격오지 중대급 생활관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말까지 책장과 양서(良書)를 400권씩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연 100권씩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독서여건을 개선하여 장병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군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군 특기직무 및 교육훈련 내용 중 신설 가능 자격 종목을 검토·발굴하기 위하여 '군 자격제도개선 위원회' 교육부 산학협력과 및 한국 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2005년 10월 19일부로 구성·운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확대 및 군 특수(전문)자격 경력의 국가공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총 300개 중 30개 종목 발굴 예정). 아울러, 필요한 법률제정 추진과 함께 국방자격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로「국방자격지원센터」설립을 준비하는 등 장병들에게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제시하여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토록 유도하고 있다.

다. 군 복무 인센티브 부여

군 복무 장병들의 전역전 사회적응능력 부여를 위해 전역예정자들에 대한 미래 직업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병영에 구축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진로와 고용정보 등을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 산하의 Work-net(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및 채용정보와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성 및 진로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능력 부여를 위해 e-러닝 시스템을 2006년 9월부터 각급부대로 보급하여 활용함으로써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직업기초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현실화 차원에서 GP 및 DMZ 근무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NLL 작전요원의 함정 근무수당을 위험수당으로 전환하여 인상하고, 800m 이상 고지 상주 근무자를 특수지역에 포함시켜 수당 현실화 차원에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복무의욕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병 봉급을 국가재정 및 국방개혁 성과를 고려하여 병영 생활간 필요한 최소비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3. 인간 중심의 '신바람 나는 군대'

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기본적 권리(통신의 비밀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기본권상담관 운용, 고충처리 및 의견 건의권 등)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전투원으로서 군인의 의무(충성의 의무, 명령 복종 및 실행의 의무 등)와 기본적 권리의 제한(집단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 제한, 영리행위·겸직 금

지 등)을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군 인권정책 및 장병 인권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2일부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인권담당관 직위인 '인권팀'을 신설하여 운용중이다. 또한 각 군에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하여 예하부대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감독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다.

장병 인권보장에 관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민·군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보장기구를 군외 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군 고충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하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예하부대·소속기관에서 제기하는 모든 고충민원(의료, 구타, 가혹행위 등)을 처리할 것이다.

나. 자율적 생활보장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적 관심사항인 국방정책이나 각종 사고의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하여 국민을 이해시키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입대 전 병영생활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병영 개방정책으로 대국민 신뢰감을 형성토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병 외출·외박제도 개선 등 외부와의 괴리감을 없애며, 규정과 방침에 대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부대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병사 내무생활을 개인생활 보장이 가능한 자율형 일과표로 개선하여 장병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후 취침시간에도 24:00시까지 자율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자기개발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군기 및 규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과업 후 생활관으로 '퇴근'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부대활동과 개인시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율」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개인별 훈련 수준 미달자는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하부대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병영문화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생활화하는 등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선진형 리더십 개발

선진형 리더십 정착의 성패는 우수한 간부의 선발에서부터 출발한다. 직책별·계급별 핵심역량을 식별하고 과학적·객관적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 및 활용할 수 있는 간부선발제도를 개발하여 2007년까지 시험적용 후 자질이 우수한 간부를 선발할 것이다.

2007년부터 초급간부가 갖추어야 덕목과 리더십을 구체화하여 양성교육 과정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간에는 제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교육시키고, 군 간부의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위해 리더십을 체득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의지와 부대운영 철학이 중요하므로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을 대상으로 지휘계통이 아닌 전문기관에 의한 해당 지휘관의 리더십 진단, 평가, 조언체계를 신설하여 재임 중 스스로 검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중심의 리더십 함양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부사관의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부사관 종합발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군의 말단 조직의 리더인 분대장들의 실질적인 권위신장 및 지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월 2만원씩 지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잠정편성 분대장을 포함한 전 분대장(영내하사 포함)에게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분대원 인원수를 고려, 지휘활동비를 지급하여 지휘권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같은 군대'

가.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부적합자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에서부터 징병검사과정에서 인성검사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거나 임상심리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징병검사 전담의사를 일부 민간의사로 대체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현역복무에서 제외토록 신검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역 복무부적합자 선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2007년부터 CT(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핵의학 검사기 등 첨단 정밀신체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환자의 과거 병력(病歷)을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치성(간질 등) 및 정신질환자를 사전 발견하여 조치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의 정도를 객관화, 세분화하여 활용하는 등 징병검사체계를 계속 보완함으로써 복무부적합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입대 5일 이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식별 및 처리해야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식별이 곤란하다. 사실 확인 및 처리기간을 신병교육 수료 전까지로 확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기간 동안 지휘관(자)의 관찰을 통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인원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신병교육기간 중 발견된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으로 역종 변경시켜 자대에서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즉, 5주간의 관찰과 의무심사위원회, 동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하여 재분류시키고, 자대 배치 후 발견된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처리 권한을 장성급부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사고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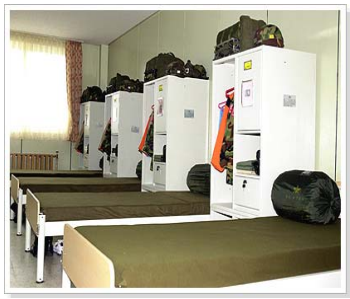
각 군의 사고사례 분석 전파 및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전산화 미구축으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사고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DB화하고 자료 공유 및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급부대에서 사고분석 자료를 손쉽게 활용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육군표준인성검사와 같은 인성검사체계를 개발·적용하여 복무부적응 병사를 과학적으로 식별하여 전문기법(육군의 Vision Camp)을 통한 병원관리를 통해 복무적응을 유도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병영내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담학, 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에 의한 장병 기본권 전문상담관을 연대급 1명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사고예방활동에 관하여 조언하고 심리치료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험운용 하였으며, 그간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운영 규모를 설정할 것이다.

2006년 8월부터 대형사고 발생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비상설 기구로 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고의 유형에 따라 전문조사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수사, 신속 정확한 공보,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사고처리의 전문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다. 병영시설 개선



내 집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선진병영문화 조성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병영시설 개선은 우선 생활관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고, 개인당 2평 정도(기존 0.7평)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신세대장병의 성장환경을 고려, 기존의 '수용'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군 구조 개편 계획 및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시설개선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기준 단가와 시설유지비를 현실화하며 격오지 부대 및 열악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업목표 및 기간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기존 계획에서 1년을 단축하여 2009년까지 병영시설의 50% 이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1단계 기간 중에는 GP와 격오지부대 등 군 구조 개편 후에도 위치 변동이 없는 부대부터 우선 개선하고, 2단계에는 이미 현대화된 부대와 1단계에서 제외된 부대를 개선하며, 건물 구조는 가능한 한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방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시설 패키지화는 건물로부터 냉·난방 공조시스템 및 기반시설 보완까지 GP는 전체 개선 소요를 반영하였다. 격오지 부대와 대대급 통합 생활관은 국방재정을 고려하여 건물과 비품까지만 우선 구비하고, 2007년부터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영문화 개선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추진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할 것이다.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Feed-Back 함으로서 선진 병영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할 것이다.

병영문화의 산실인 예하부대에 대하여는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한 효율적 정책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관련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병영문화 모범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간·배포하여 타 부대에 벤치마킹하게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일반국민과 장병,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화합을 굳건히 하기 위해 병영문화개선 과제를 국방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홍보영상물 제작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병영문화 개선 관련 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병영문화개

선 평가위원회, 인터넷 및 언론 등 각종 듣기 기능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모니터하고 이를 반영 할 것이다.

병영문화개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간부들의 가치관 및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병사를「국가의 부름에 응한 기본인권을 지닌 인간」으로 보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인격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간부들의 의식 전환에 발맞춰 병사들도 자신들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통찰과 함께 자신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군대 복무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여 목적 없이 제대 날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의식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선진병영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진정예강군”이 육성 될 것이다.

제4장
국방개혁,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제1절 국방개혁을 전담할「국방개혁실」의 탄생

제2절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제3절 소요예산의 확보, 개혁의 필수조건

제1절 국방개혁을 전담할「국방개혁실」의 탄생

1. 국방개혁추진단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호 연관된 개혁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06. 10. 12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국방운영혁신준비단」과「군구조개편준비단」을 통합하여「국방개혁추진단」으로 확대·편성하였으며, '07. 7. 26일부로 장관 직속기구인「국방개혁실」을 국방부 직제에 반영, 설치하였다. 앞으로「국방개혁실」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개혁실」편성은 1실, 2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개혁실장은 육군 중장, 군구조개혁관은 육군 소장, 국방운영개혁관은 현역 육군 소장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편성하였다.

국방개혁실 편성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방운영 혁신과 군구조 개편 분야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둘째, 장관 직속기구로 국방부 직제에 반영하며, 셋째, 각 팀은 개혁과제별 업무 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구조 개편이 육군 위주로 추진됨을 고려 육군의 편성 비율을 증가시키고, 다섯째, 직제 반영시 공무원 정원 통제에 대비하여 가능한 현역 위주로 편성하였다.

국방개혁실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둘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셋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넷째, 국방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다섯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여섯째,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일곱째, 대내·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여덟째,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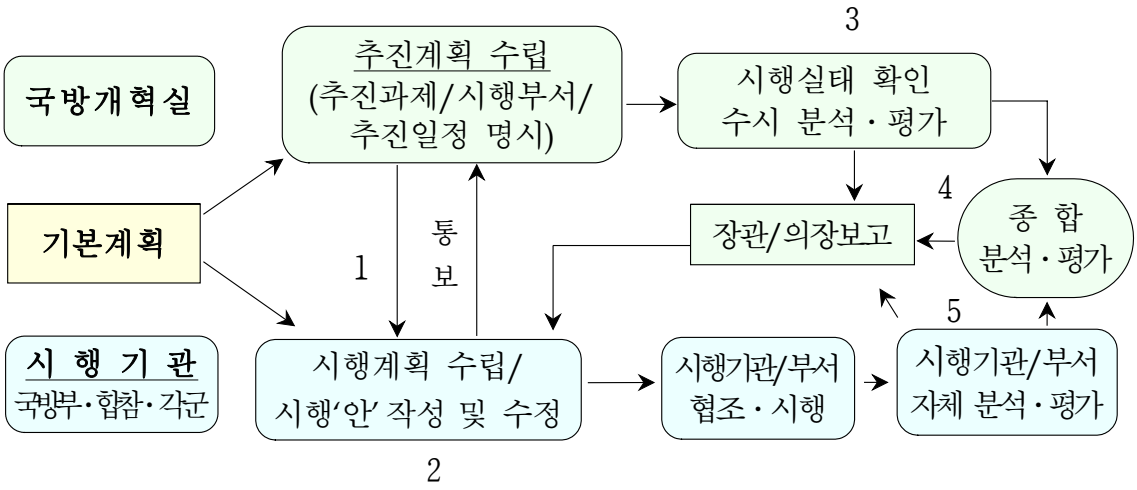
업무추진은 기본계획을 기초로「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달하고 국방부·합참·각군 본부간 이견 발생시 이를 조정·통제한다. 또한, 시행기관/부서의 시행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분석·평가한다.

시행기관/부서는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안)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조정소요 발생시 합동참모회의/군무회의에 상정하여 의사결정 후 조치하고 국방부·합참·각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의 업무추진 절차는【도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국방개혁 추진기구인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5년단위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둘째, 시행기관은 기본 및 5년단위 추진계획에 근거한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셋째, 국방개혁실은 개혁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통제·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국방개혁실은 매년 2회 종합 분석·평가 및 수시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한다. 다섯째, 시행기관/부서는 주기적(분기)으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도표 4-1】 업무추진 체계도



2.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구성이 되면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는 대상은 각 행정부의 차관급으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국가보훈처차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3인 이내의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 등이다.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다.

제2절 관련 법령의 제·개정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령 제·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만으로는 정부부처의 모든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세세히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거나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세부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이 위임사항과 필요사항으로 구분된다.

【도표4-2】「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사항

법조문	위임 사항	필요 사항
1조		목적
5조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8조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9조		보고 등
11조	국방부의 공무원 구성비율	
13조	민간인력 활용확대	
16조	각 군별·연도별 인력 확충비율	
19조		합동직위
		합동직위 보직
		합동 전문자격
23조		합동성위원회 운영
		합동 전투발전업무 강화
		합동군사교육체계 발전
24조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시기
25조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	
26조	간부비율의 조정	
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 전환시기 등	
	경계임무전환 관련 관계기관 역할 및 협조	
29조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 지정 및 순환 보직	
30조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등의 순환보직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정해야 할 법률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및 '장병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에 대한 것이다.또한, 개정해야 할 법률은, 「군 인사법」, 「병역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합동참모본부 직제」, 「각 군본부직제」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이 시행되는 2007년 3월말 이전까지 제정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관련법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할 예정이다.

제3절 소요예산의 확보, 개혁의 필수조건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안정적이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재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정치적 환경, 정부의 재정상태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군 내부적으로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주기적인 국방개혁 추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방위사업청 등 예산소요 제기 관련 기관과 부서들이 합동으로 사안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획득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편성 관련 유관부처와의 협조가 중요하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의 1년 단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방개혁과 관련된 소관 분야별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소요재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안보 관련 부처나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 내에서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변함없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국회 설득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경우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치 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의 정치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환경과 국회 구성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함없이 국방개혁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설명회 개최, 요구자료의 적시적인 제공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국회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군의 자발적인 노력이 일치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성원이 부족하면 개혁의 성공은 어려워진다. 국방개혁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변함없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의 추진 경과, 기간별 성과, 단기적·중장기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제5장
‘21세기 선진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며…

참여정부는『국방개혁 2020』을 준비하면서 한국군이 위치한 현재의 좌표와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의 좌표는 어디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면서 국가방위의 보루로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를 위하여 지금 바로 국방체제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실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국방개혁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거에도 수차례의 국방개혁을 시도했는데, 왜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의지의 부족이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개혁 추진에 필수적인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국방개혁 2020』을 성안하고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한 중요한 과업이 법제화였다. 부록에 첨부된 바와 같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노력은 땀과 정열로 점철된 과정이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국방개혁 홍보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전국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법제정에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설명·보고 등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고되는 날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제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국방개혁 20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국방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된 바로 이 시점이 우리 군의 변화와 국방의 혁신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이다.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날 우리 군은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위용을 갖추고 선진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국방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 변모될 것이며, 선진 민주시민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 정예강군'은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확대된 국방영역에서의 국익을 수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비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안정과 세계 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어떠

한 난관과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완수한다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기초를 닦은 국방개혁이 우리의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과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계획대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 록

1.「국방개혁 2020」추진 일지

2. 역대 정부 국방개혁 사례

3. 외국 국방개혁 사례

4. 국방발전자문위원회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6.「국방개혁 2020」홍보 실적

【부록 1】

국방개혁 추진 일지 (2005.5 ~ 2007.11)

일 자	주 요 내 용
2005. 5. 17	개혁 실무위원 T/F 구성
6. 1	국방개혁 실무위원회 운영 * 국대원 교수(3명), KIDA 연구위원(2명) 포함
6. 9	제1차 국방개혁 실무위 회의
6. 13	국방개혁 대통령 자문위 전체회의(계룡 스파텔)
6. 27	국방개혁안 장관 1차 보고
7. 7	국방개혁 국장급 토의
7. 11 ~ 13	· 프랑스 국방개혁 관계관 방한 및 토의 - 프랑스 국방부 행정국장 중장 Roudiere - 국방대 및 KIDA 강의, 1사단 방문
8. 2	국방개혁안 장관 중간보고
8. 4	NSC 실무토의
8. 8	국방개혁 관련 당·정 협의
8. 29	· 정책간담회 * 합참 및 각 군 본부, 국방부 관련 실·국장
8. 30	기획예산처 장관 협의
9. 1	국방개혁안 대통령 보고
9. 7	국무총리 보고, 연합사령관 대면 설명
9. 8	· 계룡대 순회교육 * 합참의장 및 정책기획관
9. 9	· 국방개혁안 관련 당·정 협의 및 한나라당 방문 설명 · 재향군인회, 성우회 방문 설명
9. 12	국회 국방위 보고, 전군 지휘관 회의
9. 13	언론 브리핑
9. 14	민주노동당 방문 설명
9. 15	논·해설 위원 초청 정책 간담회
9. 16	정책회의

일 자	주 요 내 용
9. 20	군무회의
9. 21	성우회 초청 행사
9. 23	제16차 국방 NGO 포럼 개최
9. 29	국방개혁안 관련 '네티즌과의 대화'
10. 14	주한 외국 무관단 대상 소개
10. 26	국방개혁 관련 전문가 토론회
11. 14	국방개혁 홍보책자 발간
2006. 1. 11	국회 전문위 대상 설명
1. 19	베넷박사 초청 토론회
2. 3	국방위 법률안 예비검토 설명회
2. 7	KIDA 공청회
2. 16	국방위 전체회의
2. 17	국방위 법안 심사소위
3. 23	국회의원 보좌관 설명회
4. 4	국방위원 초청 설명회
4. 7 ~ 5. 4	국방위 법안 특별 소위(4.7, 4.12, 4.14, 4.20, 4.28, 5.4)
4. 10	국방부 출입기자단 초청 설명회
4. 12	국회 출입기자단 초청 설명회
4. 17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4. 18 ~ 5. 2	국회 국방위 공청회(4.18, 4,26, 5.2)
6. 29	신임 국방위원 대상 국방개혁 설명
7. 6	신임 국방위원 보좌진 초청 설명회
7 ~ 8월	신임 국방위원 대상 정책 설명
12. 2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 대통령 공포
2007. 2. 12	「국방개혁 '07~'11 추진계획」 발간
3.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7. 26	국방부 국방개혁실 직제화
10. 31	육군 9·11군단 해체
11. 1	육군 2군사령부 해체, 제2작전사령부 창설

【부록 2】

역대 정부 국방개혁 사례

□ 국방태세 발전방향 : 노태우 정부('88.2~'93.2)

개혁환경 및 목표	• '87년 6.29선언 이후 국정 전반의 제도 개선 •' 88.5.16 노 대통령, 군 구조/방위력개선 관련 종합 검토 지시 • '88.8.18 연구계획 보고 •***2006년 목표*** :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독자적 군사전략 정립" - 군사전략 구현할 공세적 군사력 건설 - 통합전력 발휘 위한 군 구조 개선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 무기체계 한국화, 국방과학기술 선진화 - 적 무기체계 연구 및 역이용 기술 개발 •무형전력 극대화 - 군 간부의 정예·전문화, 전문적 전략연구센터 운영 - 자발적 범국민적 안보지원체제 유도
군 구조 개혁	•***합동군제 시행(' 90)***, 현 병력수준 범위에서 군사력 건설/유지 •합참 정보/작전 기능 강화, 각군 본부 기획·관리, 정보·작전기능 통합 •국직 유사부대 통·폐합 (국군정보사, 통신사, 국군 참모대학)

□ 21세기 국방태세 연구안 : 김영삼 정부('93.2~'98.2)

개혁환경 및 목표	• '신한국 창조' 위해 국정 전반 개혁 •21세기 안보환경 획기적 변화 예측 ※ 북한 위협 급격 소멸, 공존/통일 가능성 농후 판단 (김일성 사망, ' 94.7.9) •***1995-2010년 목표*** : "21세기 대비 미래 국방정책 발전"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특이사항 없음" * 통일 이후 군 구조 및 배비 계획과 통합군제에 대한 해·공군 반발로 국방개혁 연구자체가 무산됨
군 구조 개혁	***(연구 수준)*** •통일 후 병력 수준 •국방부본부+합참 단일 조직, 군정 및 군령 통합, 각군은 총사령부로 조직 •국직기관 신설 : 병기본부, 관리본부, 법무본부, 국군사관학교, 국군군수사 등 •국군체육부대, 군사법원, 품관소 해체
소요 예산	전력투자비 79조 3,977억원 판단

□ 5개년 국방발전계획서 : 김대중 정부('98.2~'03.2)

개혁환경 및 목표	•IMF 상황,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 개혁차원의 「5개년 국방발전계획」 수립 •국가경제규모 축소로 국방비 중장기 국방발전기획서(안)의 소요 대비 16.4-23.1% 부족 •*1998-2003 5개년 계획* : "경제난 극복 차원 효율적 군 운용"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18대 과제 73개 세부과제 발전 - 군 구조 개선 - 방위사업 정책 개선, 국방정보화 - 병역제도 개선, 합리적인 인사관리 - 복지 및 처우 개선, 대군 신뢰도 증진 - 환경친화적 군 관리, 효율적 군수자원 관리 - 국방재원의 안정성 보장, 운용의 효율화 등
군 구조 개혁	•국제협력국(군사외교+국제협력+해외정보) •1·3군 해체, 지작사 창설, 2군→후작사 •계룡대 본사, 3군 대학 통합, 후방병원 축소(10→5) •국군체육부대, 간호사 해체 •국대원+국참대+국방정신연구원 통합 •국군수송사, 국군화방사 창설 등

【부록 3】

외국 국방개혁 사례

구분	미 국	일 본
추진 배경	•냉전체제 붕괴이후 다변화된 위협 대비 •9.11 테러 이후 변화된 위협 성격 대비 군사력 변화 필요 •21세기 전쟁양상 변화 대처	•국제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 대비 •미일 동맹 강화위한 일본의 역할 요구 부응 •본토 직접침략 가능성 저하에 따른 첨단무기 확보 필요
목표	•합동작전과 합동조직 강화 •합동 및 다국적군 지휘통제 능력 향상 •상설 합동기동부대 사령부 및 합동기동부대 유지 •신작전개념 개발 및 실험	•다기능 탄력적 실효성 있는 방위력 건설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미래 군사 첨단화 기도 •합동성 및 통합성 강화
추진 내용	•육군: 작전사·지원사령부로 재편, 전략적 거리에서 작전적 기동실시 가능한 목표군 건설 •해군 : 부대네트웍 구축으로 해상타격, 해상방패, 해상기지 능력을 결합하여 통합전장내 지해공전력 완전 통합 •공군 : 항공우주적 우세, 정보 우위, 전지구적 공격, 정밀교전, 전지구적 신속기동, 기민한 전투지원 목표 달성위한 7개 형태 기동부대 편성	•통막에 군령권 부여, 합동작전 지휘체계 보강 •지상전력 : 병력감축 경량화, 기동화, 첨단화로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개편 •해상전력 : 원거리 투사능력 신장 •공중전력 : 원거리 감시, 작전, 투사능력 신장 •MD 구축 관련능력 보강
추진 방법 (근거)	•근거 : 군사변혁법안 의결 ('03.4) •합참 및 각군 비전 발전 •합참과 국방부 차원의 목표와 개념 제시 : '01 QDR, '02 NSS	•근거 : 방위계획 대강('04.12.10) •안보관련 법제 추가 정비 : PKO 협력법, 대테러특별법 등
시사점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및 조정 적극 추진 예상 •한미연합작전위한 우리 군의 군사혁신 추진 병행 필요 •안보여건 변화 적극 대응위한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국방 개혁 추진방안 정립 필요	•원거리 작전 등 방위력 증강과 국제적 역할 수행위한 법정비 병행 •대테러지원과 파병 등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 및 국제적 지위 향상 기도

구분	중 국	러시아
추진 배경	•역내 위상 제고위한 군사력 건설 필요 •이라크전 등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 위력 실감 및 선진국 군과의 격차 해소 필요	•구소련 붕괴후 전반적인 군 정비 및 정예화 필요성 대두 : 경제현실에 부합한 군사력보유 •대규모 군사위협 감소 등 위협 양상 변화에 대처
목표	• '질량 규모적·과학기술 밀집형' 군사력 건설 •미일 위협대비 및 남방진출 •군 과학화와 합동성·통합성, 미사일·우주전력 강화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위한 군사력 건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선진 군 양성 •신속기동능력 제고 및 전략 핵 전력 유지
추진 내용	•지상: 대규모 병력감축, 전문 인력과 무기 첨단화로 정예화 된 기동군 건설 •해상: 대양해군 목표로 무기 체계 대형·신형화 추진 •공중 : 원거리 투사능력 위해 신예 전투기 배치 및 우주력 독자개발연구 집중 •제2포병전력: 미 본토 도달 가능한 ICBM 개발, 대만해협 미사일 집중배치	•군사전략을 수세적 방어위주 전략에서 공세적으로 전환 •2015년 목표로 첨단무기·장비 현대화 •지휘통제 기능 조정, 효율성 확대: 국방부와 총참모부 기능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 합동군 체제로 전환 •군구조 개선: 지해공 3개 군종 체제로 전환 •병역제도 변경(모병제) 및 군 병력 감축계획 수정
추진 방법 (근거)	•근거 : 당군사위 내부 의결('03.9) •장기간 master plan 에 입각, 3단계 목표 설정하여 추진	•근거 : '01 ~ '10 군사력 발전계획 ('01.3) •각종 계획과 법령을 통한 군 개혁 추진 •상부 군구조는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 : 국방법 개정('04.6) 으로 총참모부가 국방부 예속
시사점	•국방예산관련 엄격한 비밀주의 채택하 추진 •대규모 병력감축과 무기·장비 현대화 완성되면 실질적 군사강국 부상 예상 •해군력 강화로 서해지역에서의 잠정수역 문제관련 중국군의 실력행사 대비, 우리 군의 무기체계 과학화 절실	•장기 계획에 입각 지속적 개혁 추진 •군사강국 지위 유지위한 최적 군사력건설 지속 •국방부장관 중심 개혁가속화 및 군사력 정비에 주력

구분	영 국	프 랑 스
추진 배경	•전략환경 변화 : 직접적 군사 위협 소멸, 위협의 다양화 •제한된 국방자원으로 효율성 극대화 필요 •합동군 중요성 증대 및 군사 강국들의 군사기술 혁명 추세	•프랑스 국경 직접적 군사위협 소멸 • '유럽방위 유럽화' 위한 독자적 군사력 확보 필요 •걸프전 교훈: 장기 군사개혁 필요성 대두
목표	•전투부대 우선의 군사력재편 통한 국방비 절감 •전력구조 개편 통한 전장 환경에 신축 대응 •장비 현대화: 핵심전력위주 증강	•징병제 폐지 및 직업군제 도입 •군규모 축소, 군 효율성과 투사능력 향상 •군사력 현대화: 핵 억제력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신속대응군 대응체제로 개편 •법제화 추진, 개혁추진력 보장
추진 내용	•국방부 중복기능 통폐합, 20% 인원 감축 •모병 홍보업무 민간 위탁 •장비·군수 계약절차 정비, 군사시설 및 지원체계 정비 •영국군의 3개 방위역할 선정, 비상대기군 전력 강화 •합동성 강화: 합동신속전개군 능력 제고, 합참 능률성 강화 •장비 현대화	• "2015 신군사력 모델" 설정 및 개혁안 법제화 •징병제 폐지, 직업군제로 전환 •군병력 감축: 57만을 43만으로 •전력 및 부대구조 개편 : 핵 억제력 유지, 육군 연대 44개 축소, 항모위주 전력 확보, 공군 차세대 전투기 중심의 현대화된 전력 유지 •국방예산 증액, GDP 대비 2%대 유지 •미래형 장비획득 위한 방산 정책 조정
추진 방법 (근거)	•근거 : 국방개혁법 (Front Line First) •국방장관 직속 연구단 창설 -법제화-개혁 추진	•근거 : '97 ~ '15 국방개혁 장기 기획안 •3단계 국방개혁법 제정하여 안정된 개혁 추진
시사점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가능토록 군 역할·임무 도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국방 효율성 제고 •법제화 통한 지속적 개혁 보장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 및 3군 균형된 전력 증강 추진	•법제화통한 안정된 국방개혁 추진 보장 •국방예산 효율적 운용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군 구조 개혁 통해 실질적 군사력 강화·국가 경제 기여

구분	독 일	호 주
추진 배경	•독일 연방군의 임무 확대 요구 •독일 연방군의 국제화·다국적 군화 요구 증대 •징집인구 감소, 장비운영 여건 열악 등 연방군 현실적 제한 사항 극복방안 마련 필요	•Howard 수상의 선거공약 “작은정부” 실천 일환 출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언권 강화위한 군의 평화유지 능력 제고
목표	•새로운 환경하 임무수행 가능한 독일 연방군 육성 •NATO, EU, UN, OSCE 등 동반자 국가와의 효과적 협력 가능 연방군 건설 •국방력 건설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유 확보 •군 운영과 국방행정에 새로운 기업경영기법 도입	•국방예산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력의 현대화 추진 및 점증하는 국방운영비 인상 요인 해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국방 개혁 추진
추진 내용	•연방군 병력 감축 : 34만명→28.5만명 •지휘구조의 단순화 및 지원 부대 규모 축소 •장비와 물자의 현대화 •복무기간을 9개월로 축소	•군인력 감축 : 병력 10% 감축, 군 고위직 20% 감축 •국방업무중 가능분야 민간 이전 •기능 중복분야 통폐합 •군용물품과 시설 운영합리화: 잉여 시설 매각, 부대 재배치 •국방위기관리능력과 기구 강화 : 전략 전구사령부 창설 •군 복지혜택 확대로 양질의 국방인력 확보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기구 개혁
추진 방법 (근거)	•근거 : 연방군 개혁안 •국방진단종합보고서 작성이후 정부와 민간 중심으로 ‘연방군 개혁안’ 완성 •바이체거 전 대통령 주관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개혁안 연구	•근거 : RMA 계획안
시사점	•전직 대통령 바이체거 주도의 특별위원회 설립 등 적극적인 국민공감대 형성 통해 정치적 지원 유도. •법제화로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 •과감한 민영화 등 운영혁신 •합동성 강화, 소수 정예화 주력	•인력감축과 함께 국방력 현대화로 아태지역 발언권 강화시도 •국방개혁을 예산절감이 아닌 전투능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 : 절감된 국방비를 전력증강 및 군인 복지에 투입

【부록 4】

국방발전자문위원회

□「국방발전자문위원회」설치

2005년 3월 14일 청와대는 국방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전임 총장 등 국방·안보관련 분야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발전자문위원 명단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방향, 국방개혁 과제 및 법제화, 군사외교 전략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게 되고, NSC 사무처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었다.

【초대 국방발전자문위원 명단】

위원장	황병무(국방대 명예교수)	
간 사	서주석(NSC 안보전략실장)	
위 원	• 김충배(KIDA 원장, 예)육군중장) • 박춘택(前공군참모총장, 예)공군대장) • 백종천(세종연구소 소장, 예)육군준장) • 양병기(청주대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장정길(前해군참모총장, 예)해군대장) • 최명상(항공우주진흥협회 상무, 예)공군준장) • 한용섭(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 정국본(해병대 전략연구소 부소장, 예)해병소장)	• 노훈(KIDA 책임연구위원) • 문정인(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 심경욱(KIDA 책임연구위원) • 이철기(동국대 교수) • 이현숙(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함택영(경남대 교수) • 황동준(국방경영연구원장)

□「국방발전자문위원회」활동

2005년 4월 6일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수여받는 것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날 11:00시 위촉장을 수여받고 황병무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은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으며, 이후 8월 18일까지 1회의 워크샵을 포함해 10차례의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자문위** : '05. 4. 6(수) 11:00 ~ 13:00 / 청와대
- 참석자/내용 : 황병무 위원장 등 자문위원 16명/위촉장 수여 및 오찬 간담회

○ **제2차 자문위** : '05. 5. 3(수) 10:00 ~ 13:00 / 국방부, 국방업무보고 설명회

○ **제3차 자문위** : '05. 5. 9(월) 15:00 ~ 17:0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 : 위원장(주관), 위원 15명, 간사, 국방부 기획조정관, NSC 행정관 3명
- 주요내용 : 자문위 운영 및 추진일정, 분야별 자문팀 구성방안 토의

○ **제4차 자문위(워크샵)** : '05. 5. 20(토) ~ 21(일) / 계룡대 스파텔(유성)
- 참석자 : 황병무 위원장, 자문위원 13명, NSC 전략기획실장(간사) 및 행정관 2명,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관, 정책기획관, 전략기획부장, ADD소장
- 주요내용
  - 1일차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보고(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개혁입법 추진계획보고(국방부 기획조정관), 국방부 발표 질의·응답
  - 2일차 : 독일·프랑스 국방개혁사례 소개(심경욱 자문위원), 프랑스 법제화 사례 설명(김무일 前 프랑스 국방무관), 자문위원 자체 토의

○ **제5차 자문위**: '05. 6. 2(목) 16:00 ~ 17:4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내용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4명, 간사, NSC 행정관 2명 / 국방부에 제출할 개인연구(안) 작성방향 토의

○ **제6차 자문위** : '05. 6. 23(목) 16:00 ~ 18:0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내용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3명, NSC 전략기획실장(간사) / 국방부 개혁 입법(안)에 자문위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인연구(안) 발표와 '군 및 부대구조' 관련 토의

○ **제7차 자문위** : '05. 7. 7(목) 15:00 ~ 18:0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내용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3명, 간사 / 개인연구(안) 발표와 토의

○ **제8차 자문위** : '05. 7. 15(토)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내용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3명, 간사 / 개인연구(안) 발표와 토의

○ **제9차 자문위** : '05. 7. 19(목) 16:00 ~ 17:4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내용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3명, 간사 / 개인연구(안) 발표와 토의

○ **제10차 자문위**: '05. 8. 18(목) 16:00 ~ 18:30 / 청와대 서별관
- 참석자 : 위원장(주관), 자문위원 13명, 간사, 국방부 기획조정관, 각 군 정작부장
- 주요내용: 육·해·공군본부 개편 관련 사항, 국방개혁 전반에 걸친 자문사항

※「국방개혁2020(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05. 9. 1일까지의 개최실적임.

자문위원들은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개인별 전담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위원회 자체 워크샵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종합한 연구결과를 국방개혁안 작성에 참고하도록 국방부에 보내왔다.

【국방발전자문위원 개인별 연구주제】

구 분	개 인 연 구 주 제
황병무 위원장	① 국방기획관리제도 개선 ② 합동차원의 미래전 기능 및 위상 정립
백종천 위원	①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 구조 ② 국방부·합참 위상 강화
박춘택 위원	① 미래 한국군의 위상 ② 전력 건설방향
심경욱 위원	① 미래지향적 국방목표 재정립 ② 미래 군사력 건설방향
노 훈 위원	① 육군구조 개편 ② 예비전력 정예화
장정길 위원	① 국방부 직할, 합동부대 균형편성 ② 병역처분 기준변경·군내교육 강화
함택영 위원	①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 ② 한국의 국방정책 및 국방비
최명상 위원	① 3군 균형발전 방안 ②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방향
정국본 위원	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기조 ② 군 구조 및 군사력 건설방향
황동준 위원	① 한국군 위상 및 발전 기본개념 정립 ② 국방 민간인력 운영개념 재정립
한용섭 위원	① 2015년의 바람직한 군 구조 ② 합참의 권한 강화방안
이철기 위원	① 적정 군사력에 대한 평가 ②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방향
김충배 위원	① 군 상부조직의 통합성 강화 ② 무형전력 확보, ③ 중장기 적정군사력과 투자규모 확보

□「국방발전자문위원회」연구결과 및 후속조치

국방부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은 국방발전자문위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국방개혁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과 추가 반영소요를 식별하였다. 이렇게 식별된 사항은 추가적인 토의를 거쳐서 국방개혁(안) 작성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연구결과의 반영결과는 아래의 두 번째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방발전자문위원 연구결과】

▲ 미래군 위상, 상부구조 개편 분야

ㅇ **미래군 위상**

• 현실태 진단
- 지리적 개념의 국방목표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역내 균형자 역할 수행을 위한 대응전력 확보 미흡
- 소수의견으로 국가 대전략 미설정과 국가안보전략 추진과제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 개선 방향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미일변도의 안보협력관계 재고' 의견도 제기
  * 한미동맹의 개편방향 의견 제시(소수 반대의견)
    ① 순수하게 방어동맹으로 한정
    ② 미군의 주둔권에 대한 통제강화
    ③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와 한미연합지휘체제 개편
    ④ 유엔사령부(UNC) 해체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의 한국 이양
    ☞ 중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체제와 동맹체제의 병존형태' 모색
- 국방목표 및 군사전략 기조의 변경, 재설 의견 제시
  * 국방목표 : 분쟁예방, 무력침략 격퇴, 국익의 전략적 방호, 국제안보에 대한 책임분담 등 포괄적으로 재정의
  * 군사전략 기조
    ▸ 통일전 : 북한 위협위주(평시 : 선별적 억제, 전시 : 즉응반격)
    ▸ 통일후 : 잠재적 불특정 위협 대비(전수방위를 위한 공세적 방위)
-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 **상부구조 개편**

• 현실태 진단
- 미래전 대비 비전 및 방책발전에 있어 합참의 구심역할 미흡
- 자군 중심의 사고와 군별 이기주의, 견제 과다로 합동전 수행 제한
-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참, 국방부 주요 직위에 육군 중심 편성으로 의사결정 왜곡
- 3군간 기능 중복부대 별도 보유로 국방운영의 비효율 과다

• 개선 방향
- 국방부 중심의 양병 기능체제로 발전
-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부구조 변환
  * 합참의장 권한 강화 법제화, 합동 근무특기 신설, 장군 진급조건으로 합참직위 경험을 필수 조건화
  * 3군 균형보직 : 합참·국방부에 해·공군 직위 확대, 국직·합동부대, 장군직위의 군별 순환보직 실시
  * 소수의견 : '통합군으로의 개편', '양병 및 용병기능의 일원화' 연구안도 있었음.
- 합참기능 보강 : 군수·인사권한 확대 부여, 합동수준의 전투발전 조직 창설, '합동 비전' 작성 주무부서 설치

○부대구조 및 적정 군사력 규모

- 현실태 진단
  - 창군 이래 병력집약적 군 구조 계속 유지
    * 현 병력규모는 인구대비 1.4%의 규모이며, 운영유지비가 국방비의 48~50%, GDP 대비 1.4% 수준임. ☞ 운영유지비가 국방비의 40%, GDP 대비 1.2% 전후 수준에서 유지 가능하며 인구대비 1% 수준으로 병력규모 축소 필요
  - 선진국과 주변국 정예화 추세에 부응, 미래전 대비 부대구조 슬림화·과학화 시급
  - 입대자원 감소, 북한위협의 비대칭화, 군 기피현상으로 기존의 부대구조 유지 곤란
- 개선 방향
  - 중·장기 계획하에 질 위주의 정예군으로의 감군 추진
    * 병력규모는 45~50만 수준으로 축소 주장이 주류
    * 지휘계선 간소화 추진 : 중기 실행목표를 구체적 제시 의견에 상당수 공감
      ① 지휘통제통신능력 조기구축으로 지휘계선 단축
      ② 최소 2개 군단을 1개 군단으로 통합(사단 동시축소 추진)
      ③ 군사시설의 전반적 재검토 및 장기 개선계획 수립
  - 3군간 유사기능 수행하는 사관학교·군수부대 통합, 중복투자와 운영상 비효율 제거
  - 예비전력 정예화
    * 예비군 : 308만→150만 수준 감축, 간부중심의 상근예비역제 도입
    * 과다한 현재의 임무를 '동원 및 향방작전 수행'으로 단순화
  - 근무지원 기능부대는 과감하게 민간 아웃소싱 추진
  - '평화체제 및 통일국가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파격적인 수준의 소수의견도 제시
    * 총 병력은 24~28만명, 군별 비율은 60:20:20으로 구성
  - 또 다른 소수가 중앙군-실전예비군, 지방군-경찰조직으로 안보시스템을 이원화 제시

○ 군사력 건설 방향

- 미래전을 대비하여 질적 전력 중심으로 보강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 조기 확충,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 화생방 방호전력 보강
- 한국형 C4ISR, 기동성 제고를 위한 헬기전력 보강 필요
- 해·공군 전력을 보강하되, 전략무기는 현 동맹체계를 활용하고 연구개발에 주력
- 첨단장비를 활용한 DMZ 경계체제로 전환
- 장거리 감시체계와 투사능력 제한적 확보 : 신속반응전력으로서의 전략 기동능력의 상비전력화 추진
-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 구비
- 소수가 중기 소요전력과 재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개선 보장 의견도 제시

○ 국방운영 및 관리제도 혁신

- 국방 기획관리제도 개선
  - 군/기관별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임무/목표 중심의 재원배분 보장
  - 군사 소요결정의 합리화와 과학화 추진, 사업계획 내실화,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기획의 중심문서화 될 수 있도록 개선
- 병역처분 기준 완화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
-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일원화하여 '국방직 공무원'으로 개선
- 군 고유가치 존중문화 및 리더십 강화, 병영문화 선진화, 민군 신뢰증진 등 무형전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국방발전자문위원 연구결과 반영 결과】

구 분	국방발전자문위 의견	반영 여부	비 고
미래군 위상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의 유지·발전 긴요	• 국방개혁안 본문에 반영	기반영
	• 국방목표 및 군사전략 기조의 변경, 재설정	• 국방목표 변경여부 연구중	차후 검토
		• 군사전략 '08-'20 JMS에 발전된 개념 수록	기반영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 한미 공동연구 수행 중	기반영
상부구조 개편	• 국방부 중심의 양병 기능체제로 발전	• 국방획득제도 개선 등	기반영
	•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부구조 전환 - 합참의장 권한 강화 법제화, 3군 균형보직 - 합동근무특기 신설, 장군진급 조건으로 합참직위 경험 필수화 검토 필요	• 합참의장 권한 강화, 3군 균형편성 등 반영	기반영
		• 합동근무특기 신설 방안 연구중	반영 검토
		• 장군진급 조건으로 합참 직위 경험 필수화는 대령 직위가 제한되어 비경험자와의 형평성 논란 예상	미반영
	• 합참기능 보강	• 합참의장의 작전지원 통제권 • 합참대학 합동부대화	기반영
부대구조 및 적정 군사력 규모	• 중·장기 계획하 질 위주의 정예군으로 감군 (00~00만)	• 2020년 목표 병력 00만	기반영
	• 지휘계선 간소화 추진	• 후작사 창설, 해·공군 전투전단·비행전대 해체 등	기반영
	•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신설		기반영
	• 3군 유사기능 부대 (사관학교, 각군 대학, 군수부대) 통합으로 비효율 제거	• 각군 사관학교/각군 대학 : 합동군 하에서 각군의 고유한 장교양성/교리발전 기관이 필요	미반영
		• 군수부대 :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군수부대의 조정, 일부 부대 해체, 통·폐합	일부 반영

구 분	국방발전자문위 의견	반영 여부	비 고
	• 예비전력 정예화 : 00→00만 수준 감축, 정예화	• 합참에서 개혁과제로 선정	기반영
	• 근무지원 기능부대 민간 아웃소싱 추진	• 책임운영기관 선정/운영, 민간위탁 추진, 전투근무지원부대 아웃소싱 확대 등 반영	기반영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향	• 미래전을 대비하여 질적 전력 중심 보강 - 독자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 조기 확충 - 종심지역 정밀타격능력, 화생방 방호전력 보강	• 전력체계 발전에 반영	기반영
	• 기동성 제고 위한 헬기전력 보강	• 기동 헬기 확보	기반영
	• 합동차원의 정보작전 조직을 발전	• 합참의 조직 보강	기반영
	• C4 체계와 ISR 체계를 연계 발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정보전 방책과도 연계	• C4ISR 체계 개발 반영	기반영
	• 해·공군 전력 보강, 전략무기 연구개발 주력	• 해·공군 첨단전력 확보, 핵심전력 연구개발 능력 확충	기반영
	• 첨단장비 활용 DMZ 경계 체제로 전환	• GOP 경비여단 창설	기반영
	• 장거리 감시체계 및 투사능력 제한적 확보 * 전략 기동능력 상비전력화 추진	• 장거리 감시수단 확보, 제한적 투사수단 확보 * 전략기동능력 상비전력화는 추가 검토	기반영
	•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 구비	• 정밀타격능력 확충	기반영
	• 중기 소요전력과 재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전력 개선을 보장	• 예산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미반영
국방운영	• 국방비 차입제도 도입	• 현행 예산체계상 가능여부 검토	검토중

구 분	국방발전자문위 의견	반영 여부	비 고
및 관리제도 혁신		필요	
	• 군/기관별 예산배분 지양, 임무/목표 중심의 재원배분 보장	• 「방위사업법」에 반영	기반영
	• 군사 소요결정의 합리화, 과학화 추진	• 합참의 소요 제기부서 보강	기반영
	•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기획의 중심문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국방기획관리제도 개선	기반영
	• 사업계획 내실화,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국방기획관리제도 개선	기반영
	•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 - 군내 고충을 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감독관에게 청원하여 해결	• 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신중 검토 필요	검토중
	• 병역처분 기준 완화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	• 모집위주 징모혼합제 전환	기반영
	•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일원화하여 '국방직 공무원'으로 개선	• 방위사업청은 일원화 추진 • 기타 기관은 검토 필요	검토중
	• 군 고유의 문화, 리더십 발전	• 병영문화 개선에 포함	기반영

【부록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097 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 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안보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등)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민간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장교의 진급) ①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제21조(중장 이상 장교의 보직관리)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정원의 한도 안

에서 보직되어야 하고, 정원으로 정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4장 군 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켜야 한다.

③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

하여야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

③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록 6】

「국방개혁 2020」 홍보 실적

□「범정부 홍보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정부홍보점검팀」과 국방부「홍보팀」으로 구성
  - 「정부홍보점검팀」: NSC 사무처를 중심으로 홍보비서관실 협조하 구성
  - 「홍보팀」: 국방부 주관, 정부부처·연구기관 전문가 포함 구성

    ※ 4개 실무팀 : 홍보관리, 국방운영, 군 구조 개편, 예산

○ 운 영

- 언론보도 사항을 모니터하여 적시 대응
- 홍보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일 국방개혁관련 모니터 결과」, 「일일 홍보추진 현황」, 「주간 언론보도 분석 및 홍보 계획」 작성 배포
- 「홍보팀」 회의는 격주 단위로 개최하여 기간중 홍보활동 분석 및 향후 홍보방안 토의

※ 언론보도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 및 홍보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홍보 업무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홍보결과

○ 일반국민 대상

홍 보 활 동	기 간
○ 민간 홍보 전문가 홍보 컨설팅	'05. 7. 13 ~ 8. 2
○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 24시간 언론 모니터 체제 유지 • 「일일 언론 모니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05. 8. 19~계속
○ 쟁점현안 토의(NSC 주관)	'05. 9. 12
○ 여론조사 • 국민대상 전화 여론조사(1차, 2차) • 국방홈페이지 방문 네티즌 대상 여론조사	'05. 8. 24~25 '05. 9. 15~16 '05. 9. 1~9

홍 보 활 동	기 간
○ 네티즌과의 대화 * 참석자 : 장관, 사회자(김어준), 네티즌 20명 /오마이뉴스(생중계)	‘05. 9. 29
○ 홍보용 책자 설명형 발간/배포 (10,000부) * 배포 : 국회, 유관부처, 언론기관, 예비역 및 대대장급 이상	‘05. 11. 10
○ 홍보용 책자 만화본 발간/배포 (20,000부) * 배포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민원실, 열차/버스 대합실 등	‘05. 12. 7
○ 홍보용 책자 50문 50답 발간/배포(4,000부) * 배포처 : 언론기관, 여론 주도층, 정부 부처	‘05. 12. 7
○ 온라인 이벤트 행사 * 행사내용 : 독후감 쓰기, 퀴즈대회, 찬반 설문조사	’05. 11. 21 ~ 12. 21
○ YTN 방송 광고 * 내용 : YTN 매체 이용 1일 3회 광고 (15초 광고)	’06. 1. 1～31

○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홍 보 활 동	기 간
○ 당정협의	‘05. 8. 8, ‘05. 9. 9
○ 정당순회 설명회(한나라당 · 민노당)	‘05. 7. 7, 9. 9, 9. 14
○ 국방위원 개별설명(조성태, 김성곤, 안영근, 김명자, 이근식)	‘05. 9. 7, 9. 8, 11. 7, ‘06. 2. 2
○ 국정감사	‘05. 9. 22 ~ 10. 11
○ 국회의원(황진하, 송영선) 언론 보도자료 중 쟁점사안에 대한 답변 작성	-
○ 한나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방문	‘05. 11. 15
○ 국방위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대상 국방개혁 설명	‘05. 12. 28
○ 국방위 입법조사관 요구자료 제출	‘06. 1. 6
○ 열린우리당 의원보좌관 대상 기본법안 설명회	‘06. 1. 11
○ 국방위 한나라당 보좌관 대상 설명회	‘06. 1. 18
○ 베넷박사 초청 국방개혁 토론회(국회 귀빈식당/황진하의원 주최)	‘06. 1. 19
○ 정동영 전장관 병력감축관련 발언분석 보고	‘06. 1. 24
○ 신임 국방위 입법조사관 대상 국방개혁 설명	‘06. 1. 26
○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이근식의원) 대면설명(정책기획관)	‘06. 2. 1

홍 보 활 동	기 간
○ 고위 당정회의(국회귀빈식당/정책기획관)	‘06. 2. 2
○ 국방위 법률안 예비검토 설명회(기본정책팀장)	‘06. 2. 3
○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 (정책기획차장 및 담당팀장)	‘06. 2. 8
○ 국방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진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06. 3. 23
○ 국방위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06. 3. 28
○ 국방위원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합참회의실)	‘06. 4. 4
○ ‘국방개혁 2020’ 1차 국회주관 공청회 개최(국회 국방위) * 발표자 : 김영호, 김훈배, 이태호, 임길섭, 차두현, 홍관희	‘06. 4. 18
○ ‘국방개혁 2020’ 2차 국회주관 공청회 개최(국방위) * 발표자 : 김경덕, 장영철, 설문식, 박주현, 정창인	‘06. 4. 26
○ 국회의원 대면설명(노회찬, 송영선 의원 보좌관)	‘06. 6. 23
○ 국방위원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8명/합참회의실)	‘06. 6. 29

○ 여론 주도층 및 NGO 대상

홍 보 활 동		일 자
언론 브리핑 (4회)	• 국방개혁(안)	‘05. 9. 13
	• 입법 예고	‘05. 10. 25
	• 국방개혁 소요 예산검증 결과	‘05. 10. 27
	• 선진병영문화 비전	‘05. 10. 27
언론과의 대담 (33회)	• 월간신동아 인터뷰 (장관)	‘05. 9. 12
	•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정책홍보실장)	‘05. 9. 14
	• CBS ‘뉴스레이더 5부’ (정책홍보실장)	‘05. 9. 14
	• SBS ‘아침저널’ (정책기획관)	‘05. 9. 14
	• KTV ‘대한민국 건군 57돌 군을 말한다’ (정책기획관)	‘05. 9. 28
	• SBS ‘뉴스추적’ (정책기획관)	‘05. 9. 28
	• KBS-1라디오 ‘국방브리핑’ (공보과장)	‘05. 9. 30
	• 코리아 타임즈 ‘국방개혁 2020’ (장관)	‘05. 10. 25

홍 보 활 동		일 자
	• KTV '이슈라인' (정책기획관)	'05. 10. 27
	• 국군방송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정책기획관 등 12회)	'05. 10. 5~
	• 국군방송 '출발새아침' (국군조직과장 등 12회)	'05. 10. 7~
정책 설명회 (7회)	• 국방대학교 교수 및 학생	'05. 7. 12
	• 기무학교 기간간부 및 학생장교	'05. 8. 11
	• 국회 국방위원	'05. 9. 12
	• 국방부 기자단	'05. 9. 13
	• 국방담당 논·해설위원	'05. 9. 15
	•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50명	'05. 11. 2
	• 홍보 집필진	'05. 11. 11
세미나 (6회)	•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 (국방대)	'05. 9. 8
	• 국방개혁 공청회 (국회 박진, 황진하 의원실)	05. 10. 21
	• 전문가 토론회 (열린우리당)	05. 10. 26
	• 국방개혁과 적정 국방비 (한국국방연구원)	'05. 9. 15
	•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 (전략문제연구소)	'05. 11. 8
	• 제 10차 국정과제 토론회 (총리실 산하연구회)	'05. 9. 16
NGO 포럼 (2회)	• NGO 대표 초청 간담회 (국방부)	'05. 11. 3
	•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	'05. 9. 22
칼럼 사설 등	○ 언론 칼럼 및 사설 게재 • 언론기고 : 20회, 사설 : 22회 • 보도자료 배포 : 14 회	·
	○ 「국방개혁 홍보 집필진」 구성 및 운영 • 국방개혁관련 언론의 부정적 보도·오보 발생시, 즉각 반론 및 해명기고 •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언론기고 및 방송 출연	'05. 10. 6 ~계속
공청회 (2회)	• 국방개혁 추진과제와 전략 (대전대군사연구원)	'05. 12. 16
	• 국방개혁 2020 법제화 (국방연구원/프레스센터)	'06. 2. 7

ㅇ 군 및 예비역 대상

홍 보 활 동	기 간
○ 합 참/각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순회교육	‘05. 9. 8
○ 1, 2, 3군사령부 순회교육	‘05. 9. 8~9
○ 해군작전사령부 순회교육	‘05. 9. 9
○ 주요지휘관 회의	‘05. 9. 12
○ 공군작전사령부, 자운대(각군 대학) 순회교육	‘05. 9. 12
○ 정책회의	‘05. 9. 14
○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 •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장단 • 성우회 회원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05. 9. 9 ‘05. 9. 21
○ 군단급(13개부대) 순회교육	‘05. 9. 27~30
○ 군무회의	‘05. 9. 29, 10. 10
○ 국방일보 국방개혁 관련내용 게재 •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한다.」(8회 연재) • 「국방개혁 정예강군으로 가는 길」 (9회 연재)	·
○ 기무사 순회교육	‘05. 10. 18
○ 육군 사단장반 순회교육	‘05. 11. 2
○ 해군 작전사령부 순회교육	‘05. 11. 8
○ 연합사 순회교육	‘05. 11. 11
○ 미2사단 순회교육	‘05. 11. 17
○ 장성 e-mail 발송 (“국방개혁기본법안과 국무회의 의결 관련하여”)	‘05. 11. 30
○ 역대 국방주요인사(85명) 초청「국방개혁 2020」설명회	‘05. 12. 7
○ 역대 국방주요인사 초청「국방개혁 2020」 설명회 • 국방회관/역대 국방 주요직위자 85명	‘05. 12. 7
○ ‘06년도 해군 전대장반 교육 (정책기획차장)	‘05. 12. 20
○ 육군 위탁교육생 대상 국방개혁 설명 (중앙군사교)	‘06. 2. 15
○ 국방대 정신교육단 전임교수 대상 국방개혁 설명 (정책기획관)	‘06. 2. 20
○ 기무사 전직부대원 대상 국방개혁 설명 (정책기획관)	‘06. 2. 22
○ 육군 ‘06-1기 사·여단장반 교육 지원	‘06. 4. 27, 5. 3

□ 일반 언론매체 홍보결과

○일간지 대상

홍 보 활 동	기 간
○ '국방개혁 2020' 관련 장관 인터뷰 *국방개혁 소요예산 2020년까지 약 620조원 소요 등	'05. 10. 25
○ 국방비 소요 예산 관련(조선 등 4개 매체) • 합동 검증결과 2020년까지 필요한 총국방비는 621조원 추산	'05. 10. 29
○「달라진 병영」(방송3사) • 고운말 쓰기, 세족식 등 선임병들의 특권 대신 희생을 생활화 • 병영문화를 개선해보려는 육군 노력소개	'05. 11. 5
○「합참조직 강화」(연합/중앙) *남북관계 변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대비, 대북정책과 신설 등	'05. 11. 10
○「예비군 훈련 확 바뀐다」(전매체) * 2007년부터 안보교육을 인터넷으로 하고, 사격 불합격 땐 재훈련을 받는 등 예비 군 훈련방식이 크게 바뀜.	'05. 11. 15
○ 군장병 급식 관련 (매경・세계) • 내년부터 장병 식단에 황태찜 등 '웰빙' 식단 제공 예정	'05. 11. 18
○ 장관, 의무간담회 관련 보도 (전매체) * 2010년까지 군 의료 서비스 개선 및 권역별 통합 진료 예정	'05. 11. 24
○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보도 (서울) • 국방개혁 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계심을 풀고 국방비 분담에서 실리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05. 11. 28

○ 정부 매체 대상

홍 보 활 동	기 간
○ 코리아플러스 (국정홍보처, 격주간지) 국방개혁 특집 *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 2020 제하로 보도	'05. 10. 24
○「국방개혁,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한다 • 국방개혁 전반에 대한 국방장관 인터뷰 내용 보도 (2회)	'05. 11. 23~24
○ 전광판 광고 (옥외전광판 113개소)	'06. 1. 1~31

○ 군 매체 대상(시리즈 / 기획특집)

홍 보 활 동	기 간
○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 한다" 기획보도 * '국방개혁 의의와 추진방향' 등 총 8회 시리즈 보도	'05. 10. 5~ 11. 3
○ 국방개혁기본법안 보도자료 송고	'05. 10. 25
○ 국방개혁관련 국군방송 질의 답변정책기획관	'05. 10. 24
○ 국방일보 시리즈, '정예강군으로 가는 길' 기획 보도 * '병력 50만 시대와 징모 혼합제 등 총 13회 시리즈 보도	'05. 10. 11 ~ 11. 24
○ 국군방송 출발 새아침 (기본정책과장)	'05. 11. 25
○ 「국방개혁 50문 50답」 기획보도 * '안보환경 평가' 등 총 3회 시리즈 보도	'05. 12. 15 ~ '06. 1. 31
○ 국군방송,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수요 초대석' * 국방개혁의 필요성 (국방부 홍보관리관 출연 등 출연)	.
○ 국군방송,'국방개혁' 캠페인 광고	'06. 1. 1~31

○ 토론회 및 쟁점 관련사항

홍 보 활 동	기 간
○ 공군학술 세미나 (장관기조연설)	'05. 9. 8
○ 국방개혁안 관련 주요쟁점 및 입장 정리 (시민단체 등 쟁점정리)	'05. 9. 11
○ 민주노동당 제시 국방개혁 7대과제 답변	'05. 9. 16
○ 국방개혁 주요쟁점관련 Q&A 작성 (국감대비)	'05. 10. 6
○ 국방개혁 관련 전문가 토론회	'05. 10. 26
○ 국방대학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특강 (장관 특강)	'05. 11. 18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특강 (장관특강)	'05. 11. 23
○ 외신기자 클럽 세미나 장관기조연설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06. 5. 24

○ 기 타

홍 보 활 동	기 간
○ 언론매체 * YTN 광고 • 인터넷 홍보	'05. 12 ~ '06. 1 '05. 11. 21 ~ 12. 21
○ 국방부 출입기자단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18명)	'06. 4. 10
○ 국회 국방위 출입기자단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13명)	'06. 4. 12
○ 정책고객(PCRM) 초청행사시 국방개혁 2020 법제화 소개	'06. 5. 17

□ 외국인 대상 홍보 실적

홍 보 활 동	기 간
○ 한미연합사령관 대면 설명	'05. 9. 9
○ 제4차 SPI회의시 설명	'05. 9. 29
○ 주한 외국무관단 초청 설명	'05. 10. 14
○ 제37차 SCM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 설명	'05. 10. 21
○ 미 2사단 주요간부 대상 설명	'05. 11. 17
○ 국방개혁 홍보책자(영문본) 발간·배포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 정부기관 등 여론 주도층 대상 배포	'05. 12. 7

□ 언론이 본 「국방개혁 2020」

홍 보 활 동	기 간
○ 2010년까지 군단·사단 절반 줄여(한국일보)	'05. 9. 5
○ 송영선 의원 인터뷰 "예비군 해체하고 군 복무자 가산점 줘야"(오마이 뉴스)	'05. 9. 15
○ 국방위 '졸속 개혁안' 논란(국민일보)	'05. 9. 22
○ 국방개혁 좋아할 곳은 북한 뿐(노컷뉴스)	'05. 9. 22
○ '국군의 날' 국방개혁 '5당 2색'(문화일보)	'05. 10. 1
○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실질적 준비"(연합뉴스)	'05. 10. 3
○ 노대통령 "국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조선일보)	'05. 10. 1

홍 보 활 동	기 간
○ 노대통령 “전시작전권 행사 통해 자주군대 될 것” 어떻게.. (동아일보)	‘05. 10. 3
○ 숫자 맞추기가 국방개혁인가(서울신문)	‘05. 9. 30
○ 국방부 군무회의, 국방개혁안 의결 연기(서울신문)	‘05. 9. 29
○ 국방부 정책실장 “ 긴장완화 차원에서 슬림화 추진”	‘05. 9. 14
○ 완전한 자주국방 비전 제시(YTN TV)	‘05. 10. 1
○ 안인해 교수 칼럼,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서울신문)	‘05. 11. 28
○ 기무사 “계급-직책 분리 팀제를 명받았습니다.(한겨레)	‘05. 11. 28
○ 국방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화 본궤도(YTN TV)	‘05. 11. 29
○ 3군 총장·방위사업청장도 인사청문회 추진(한국일보)	‘05. 11. 30
○ “병력감축 대비 군인 취업대책 필요”(문화일보)	‘05. 11. 30
○ 군병력 50만명 규모(서울신문)	‘05. 11. 30
○ 육군 첫 사단 통·폐합(경향신문)	‘05. 12. 2
○ 인권·병영문화팀 신설(중앙일보)	‘05. 12. 9
○ 국방부 팀제로 대대적 개편(세계일보)	‘05. 12. 9
○ 국방개혁법안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경향신문)	‘05. 10. 25
○ 자주 미명 앞세운 ‘국방개혁2020’의 허상(문화일보)	‘05. 10. 26
○ 황병무 시론, “국방개혁안 법제화해야”(국민일보)	‘05. 10. 30
○ 작지만 강한 군 되려면...(세계일보)	‘05. 10. 25
○ 2020년까지 국방비 621조...통 큰 軍?(조선일보)	‘05. 10. 28
○ 국방개혁 ‘고무줄 예산’으로 ?(조선일보)	‘05. 10. 26
○ 정부 국방개혁안, 부사관은 4만명 는다(노컷뉴스)	‘05. 10. 17
○ 국방개혁안 노대통령에 보고, 병력15년간 18만 감축 (중앙일보)	‘05. 9. 6
○ 병력은 줄이고 전투력은 첨단화(문화일보)	‘05. 9. 6
○ 국방개혁안 윤곽 드러나(한국일보)	‘05. 9. 6
○ 윤국방, 軍 개혁 앞서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라 (문화일보)	‘05. 9. 22

홍 보 활 동	기 간
○ 홍재현 의원, 군에 대한 문민통제 미흡(매일경제)	‘05. 9. 16
○ 이상현 세종연, 국방개혁 성공하려면(매일경제)	‘05. 9. 16
○ 예비역 장성들 ‘국방개혁안’ 공개적 우려 표출 (문화일보)	‘05. 9. 8
○ 대규모 감군 등 국방개혁·사회 혼란 우려(조선일보)	‘05. 9. 22
○ 참여연대 “DJ 정부만도 못한 국방개혁안”(한겨레)	‘05. 9. 14
○ 국방개혁안 장외논쟁 본격화(연합뉴스)	‘05. 9. 14
○ 예비역도 합참의장, 3군 총장 된다(경향신문)	‘05. 9. 15
○ 육군덩치 줄여 첨단화...문제는 재정(동아일보)	‘05. 9. 6
○ 병력위주에서 첨단 군대로 탈바꿈한다(한겨레)	‘05. 9. 5
○ 여야 국방개혁에 ‘미묘한’ 시각차 존재, 국방개혁 기본법... 군 개혁 기관차 될까?(연합뉴스)	‘05. 9. 5
○ 장관 인터뷰(신동아)	‘05. 10월호
○ 남조선 평통사에서 국방개혁 비난(조중방)	‘05. 9. 20
○ 21세기 국방개혁의 방향(한국일보)	‘05. 8. 11
○ 후방군단 2개, 해군 전단 및 공군 전대 폐지 추진 (연합뉴스)	‘05. 7. 21
○ 육군 특수병과 모병제 검토(문화일보)	‘05. 7. 21
○ 민주노동당, 군사법 개혁안 “의미있는 진전”(노컷뉴스)	‘05. 7. 20
○ 한나라당, 정치 군검찰 우려(YTN)	‘05. 7. 20
○ ’군 검찰이 헌병 지휘‘...권한 비대화 논란일 듯 (연합뉴스)	‘05. 7. 19
○ 국방부, 군병력 2020년까지 18만명 감축(프레시안)	‘05. 7. 19
○ 윤 국방, “군 개혁을 위해서는 문민우위 필요” (데일리 서프라이즈)	‘05. 7. 16
○ ‘프랑스 국방개혁’ 주역 루디에르 방한(한국경제)	‘05. 7. 12
○ 윤 국방, 대규모 감군 시사(서울신문)	‘05. 7. 8
○ 6.19 28사 총기난사 사건 집중 보도	‘05. 6. 19

□ 주요 언론 인터뷰 및 기고문 현황

제 목	일 자	비 고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05. 9. 14	정책실장
신동아 인터뷰	'05. 9. 12	국방장관 ('일본식 사고의 예비역' 발언으로 인터뷰 후 원로초청 설명회 가짐)
CBS 뉴스레이다	'05. 9. 14	정책국장
SBS 뉴스추적	'05. 9. 26	정책국장 (국장 발언을 일부 편집해서 보도함에 따라 반박 보도)
네티즌과의 대화 자료	'05. 9. 29	장 관
국방일보 기고문	'05. 10. 3	"국방개혁의 의의와 추진방향"
SBS 뉴스추적 오보 대응 보도	'05. 10. 4	-
Korea Times 서면 인터뷰	'05. 10. 19	정책국장
국방개혁 기본법(안)	'05. 10. 25	보도자료
국방개혁 관련 국군방송 질의(답변)	'05. 10. 24	정책국장
국군방송 출발 새아침	'05. 11. 25	기본정책과장